

# 재정사업 자율평가

2 0 0 5 - 2 0 1 8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진

**연구책임자**

원종학 재정성과평가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봉재연 재정성과평가센터 전문연구원

박은정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 발간사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가 중장기 재정여건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는 재원의 신속한 동원과 집행에 주로 집중했다면, 지금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느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시행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 때 실시한 4대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재정운용을 기존의 '투입 위주'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필두로, 2005년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2006년에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 체계의 기틀을 마련해왔다.

이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검토(Review)하여 그 결과를 세출구조 조정 등에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예산 배분을 객관화, 투명화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담당부처가 해당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舊 기획예산처)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평가주관부처로서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수립, 제공하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연구기관에서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원형인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정권이 바뀌자 폐지되었으나, 한국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여러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일부 변화하며 국가재정운용 효율화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로서 기능해왔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다 적실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온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 증대, 평가업무의 비효율 발생, 일률적 예산삭감의 폐단 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메타평가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도입, 시행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메타평가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시행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평가의 질과 결과의 활용성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평가결과가 예산과 기계적으로 연계되어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가 어려우며 전략적 평가 왜곡 현상을 부추긴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절차를 대폭 축소하여 부처의 완전한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분야별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재정집행과정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핵심사업 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성과관리와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메타평가 도입과 폐지, 핵심사업 평가 도입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내부 여건에 의해 제도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14년간 존속해 온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제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원래의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또한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제대로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부터 성장,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14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상세 내용, 추진현황 및 결과를 총망라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간의 평가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제도적 변천과정과 주요 평가내용, 평가결과와 사후 조치 등의 성과와 시사점을 집대성하고자 했다. 재정성과평가센터 원종학 소장이 책임자로서 본 과제를 기획하고 원고 작업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봉재연 전문연구원, 박은정 연구원이 그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배경과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도 변천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하였으며, 연도별 평가지침, 보도자료 및 연구산출물 목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PART II의 평가체계,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결과와 그 활용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향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향 등과 관련된 학술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더불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관심이 있는 학계·연구기관, 나아가 국민들에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제도 전반에 걸친 변천내용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초반에 제도설계에 참여하였던 연구진들과 각 부처 평가담당 공무원들,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각계 전문가들 모두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를 통해 발견된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은 앞으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평가담당자 공무원들과 더불어,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참여해 온 재정성과평가센터 성과관리팀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보고서의 편집과 발간에 도움을 준 담당자에게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의견은 본 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연구진 개인의 연구 성과물임을 밝힌다.

2018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유찬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2018

## CONTENTS

# PART I . 재정사업 성과관리

## 제1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8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의 .....	20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추진현황 .....	23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	27
5. 재정사업 주요 성과관리수단 .....	30
가. 모니터링(Monitoring): 성과목표관리제도 .....	30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정의와 목적 .....	30
2)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현황 .....	31
3) 성과계획서 개요 .....	32
4) 성과보고서 개요 .....	38
나. 리뷰(Review):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40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	40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변화 .....	41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관계 .....	42
다. 심층평가(Evaluation): 재정사업 심층평가 .....	44
1)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개요 .....	44
2)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변화 .....	46
3)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추진현황 .....	47

##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개요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준비 및 도입기(2004~2005년) .....	50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주요 변천내용(2005~2018년) .....	52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제도 변화 .....	52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	54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대상 수 및 평가결과 .....	56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 제1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1. 평가체계 및 평가절차 .....	60
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 주관부처의 사후 확인점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60
나. 메타평가 도입을 통한 자체평가의 질적 개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63
다. 메타평가 폐지 및 완전한 부처 자율화: 2018년 현재 .....	67
2. 평가일정 .....	71
가. 평가시기 조정으로 성과와 예산 간의 연계 강화 .....	71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주체의 변화 및 평가시기 변경 .....	72
다. 메타평가 도입에 따른 세부 평가일정의 변경 .....	73
라. 메타평가 폐지로 부처 자율에 의한 평가일정 유연화 .....	74
3. 평가대상 .....	77
가. 평가대상 사업.....	77
나. 평가단위 .....	80
다.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	82
라. 평가 제외대상.....	83
마. 평가대상 사업 수 .....	88
4. 평가지표 .....	92
가. 부처 자율평가의 공통지표 .....	92
나. 부처 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부문별 평가지표 .....	98
다. 메타평가 지표 .....	102
5. 평가결과 산출방식 .....	105



## CONTENTS

### 제1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6. 평가결과	115
가. 2005~2007년 평가결과	115
나. 2008~2010년 평가결과	120
다. 2011~2015년 평가결과	125
라. 2016~2018년 평가결과	136
7. 평가결과 활용	142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활용: 성과와 예산의 연계	142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	147
8. 평가 주관부처의 성과관리제도 전담조직	152
가. 2003년 3월 ~ 2005년 5월	152
나. 2005년 5월 ~ 2008년 2월	154
다. 2008년 2월 ~ 2012년 1월	155
라. 2012년 1월 ~ 2014년 12월	156
마. 2014년 12월 ~ 2016년 5월	157
바. 2016년 5월 ~ 현재(2018년 6월 기준)	159

###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화

1. 2004년	165
2. 2005년	167
3. 2006년	170
4. 2007년	172
5. 2008년	173
6. 2009년	174
7. 2010년	175
8. 2011년	176
9. 2012년	178
10. 2013년	180
11. 2014년	182

# 재정사업 자율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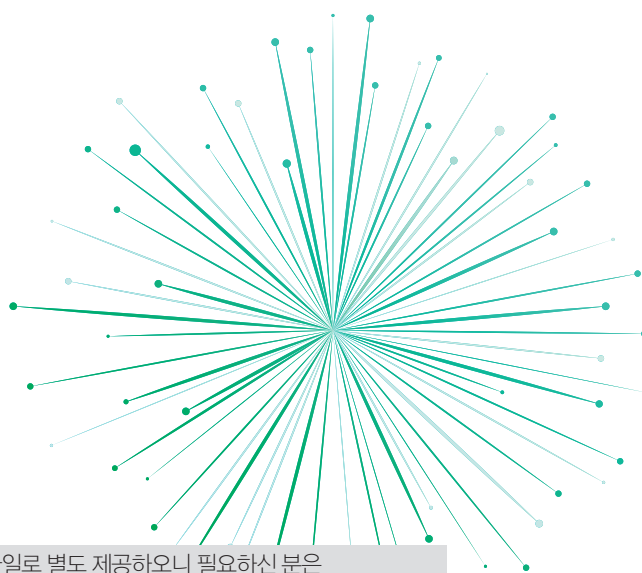
2005 - 2018

12. 2015년	184
13. 2016년	187
14. 2017년	190
15. 2018년	192

참고자료	195
------	-----

## 부록

1.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화	198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록	206
3.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목록	209
4. 주요 언론사 기사 목록	213



※ 연도별(2005-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침은 PDF 파일로 별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 목차

〈표 I -1〉 1999-2018년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현황	23
〈표 I -2〉 재정개혁 과제 관련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27
〈표 I -3〉 성과관리 관련 법령 현황	28
〈표 I -4〉 2003-2006년 성과관리 대상기관	31
〈표 I -5〉 성과목표체계-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대상기관	37
〈표 I -6〉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37
〈표 I -7〉 시기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41
〈표 I -8〉 2005-2017년 분야별 심층평가 과제현황	48
〈표 I -9〉 연도별 평가지표 내용 변화	55
〈표 I -10〉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산출방식	57
〈표 II -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일정 변화	75
〈표 II -2〉 2005-2018년 연도별 대상사업 선정기준	77
〈표 II -3〉 예산체계의 변화	81
〈표 II -4〉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82
〈표 II -5〉 20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83
〈표 II -6〉 2005-2018년 연도별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83
〈표 II -7〉 연도별·분야별 자율평가 평가대상 사업 수 현황	90
〈표 II -8〉 공통지표의 영역별 질문 수 및 배점 변화	92
〈표 II -9〉 연도별 평가지표 내용 변화	96
〈표 II -10〉 제도 도입 초기의 사업유형별 세부질문	99
〈표 II -11〉 사업유형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수 변화	100
〈표 II -12〉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부문별 가점지표 운영현황	100
〈표 II -13〉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변화 요약	101
〈표 II -14〉 연도별 메타평가의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일반재정 기준)	103
〈표 II -15〉 2005-2018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변화	105
〈표 II -16〉 2005-2007년 일반재정 3년간 평가결과	116
〈표 II -17〉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17
〈표 II -18〉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단계별 현황	117
〈표 II -19〉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18
〈표 II -20〉 2006년 성과지표의 합리성 인정 비율	119
〈표 II -21〉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20
〈표 II -22〉 2008-2010년 일반재정 3년간 평가결과	122
〈표 II -23〉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23
〈표 II -24〉 20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24
〈표 II -25〉 2009년 정보화 분야 평가결과 등급 및 점수기준	124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2018

〈표 II-26〉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125
〈표 II-27〉 2011-2015년 일반재정+정보화 5년간 평가결과	127
〈표 II-28〉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비교(2011-2013년)	128
〈표 II-29〉 2015년 부처 자체평가의 등급배분 기준과 최종 결과 비교	129
〈표 II-30〉 2011년 평가등급별 사업 비중	130
〈표 II-31〉 2011년 평가단계별 점수	131
〈표 II-32〉 2012년 등급별 평가결과	132
〈표 II-33〉 2012년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132
〈표 II-34〉 2011-2013년 평가대상 변동 추이	132
〈표 II-35〉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비교(2011-2013년)	133
〈표 II-36〉 2013년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133
〈표 II-37〉 2012-2014년 평가대상 변동 추이	134
〈표 II-38〉 201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134
〈표 II-39〉 2014년 평가단계별 점수	135
〈표 II-40〉 2015년 자율평가결과	136
〈표 II-41〉 2016-2017년 일반재정+정보화+R&D+지역위 2년간 평가결과	137
〈표 II-42〉 2016년 메타평가 결과 우수-미흡 부처	139
〈표 II-43〉 2017년 메타평가 결과 우수-미흡 부처	140
〈표 II-44〉 과거 10년간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	143
〈표 II-45〉 평가결과 환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정리	145
〈표 II-46〉 2015 ~ 2017년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	146
〈표 II-47〉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 관련 연구결과 정리	148
〈표 II-48〉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현황	158
〈표 II-49〉 재정관리국 성과관리 관련 업무분장(2014년 12월 기준)	159
〈표 II-50〉 재정관리국 성과관리 관련 업무분장(2018년 6월 기준)	161
〈표 II-51〉 2005-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현황	164

## 그림 목차

[그림 I -1] 우리나라 재정개혁 구조	21
[그림 I -2]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2
[그림 I -3] 국가재정법 제정과 재정개혁 과제의 관계	27
[그림 I -4]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30
[그림 I -5] 성과목표관리의 구조	30
[그림 I -6]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4
[그림 I -7]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관계	43
[그림 I -8]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45
[그림 I -9]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주요 변천과정	52
[그림 I -10] 연도별 일반재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 개수와 평균점수	56
[그림 II -1] 제도 초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세스	61
[그림 II -2] 통합 재정사업 평가 프로세스	65
[그림 II -3]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세스	68
[그림 II -4] 2005-2017년 자율평가 평가대상 사업 수	89
[그림 II -5] 공통지표 평가지표 개수 변화	95
[그림 II -6] 공통지표 영역별 배점 변화	95
[그림 II -7]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유형 구분	98
[그림 II -8] 2005-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4단계 평가(일반재정)	115
[그림 II -9] 2005-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116
[그림 II -10]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5단계 평가(일반재정)	121
[그림 II -11]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122
[그림 II -12] 2011-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5단계 평가(일반재정+정보화)	126
[그림 II -13] 2011-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127
[그림 II -14]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129
[그림 II -15]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결과(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 지역위)	137
[그림 II -16] 2016-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138
[그림 II -17] 기획예산처 조직도(2003.3.28. 기준)	152
[그림 II -18] 기획예산처 조직도(2005.5.31. 기준)	154
[그림 II -19]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조직도(2008.2.29. 기준)	156
[그림 II -20]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조직도(2012.1.31. 기준)	157
[그림 II -21]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직제개편 전·후 비교(2014년 12월 기준)	158
[그림 II -22]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직제개편 전·후 비교(2016년 5월 기준)	160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 - 2018



PART I.  
재정사업 성과관리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 PART I .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제1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18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의 .....	20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추진현황 .....	23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	27
5. 재정사업 주요 성과관리수단 .....	30
가. 모니터링(Monitoring): 성과목표관리제도 .....	30
나. 리뷰(Review):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40
다. 심층평가(Evaluation): 재정사업 심층평가 .....	44



##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0세기 중반 이후 소득수준의 증가,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요구의 증가 등 사회적 구조 및 사회운영 원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개인이 담당하던 복지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되는, 즉 공적부문이 개인의 복지를 담당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공적부문이 복지를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재정지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수입은 경제성장을 통한 수입의 증대 외에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정의 지출요인이 증가하고 수입요인이 제한적인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시도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유행한 행정개혁운동, 특히 정부 서비스의 효율화와 절약, 작은 정부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이라는 개혁운동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NPM의 특징으로는, ① 전통적인 관료제의 시점이 아니라 기업경영자의 시점에서 파악, ② 명확한 기준과 성과(performance) 측정 기준(대부분 효율과 절약)의 설정, ③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민간위탁·분권화 추진, ④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장과 공공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는 장의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지출에 상응하는 가치’(Value for Money: VFM), 미국의 결과(Outcome)를 중시하는 평가방법 등 NPM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는 다양하지만, 정량측정 즉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이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과관리의 수단에 정량적 성과측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를 들 수 있다. 설명책임(Accountability)이란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상대방은 당연히 국민(납세자)이므로, 정부는 국민이 지불한 비용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수행한 업무의 결과가 국민의 행복, 만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을 지고 있다. 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과관리의 여러 수단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측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업무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위한 것이며, 적절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업무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많은 성과관리 방법은 적절한 성과측정 수단을 찾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성과관리체계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비롯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가 어떻게 도입·운영되었으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설명책임성을 위한 성과관리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정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및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서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르더라도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의 성과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는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성과관리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투입 및 절차 중심의 행정에서 산출 및 결과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관리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sup>01</sup>

재정성과관리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성장국가 및 개도국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정은 재정지출의 효율화라는 당위성 속에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로 명칭을 바꾸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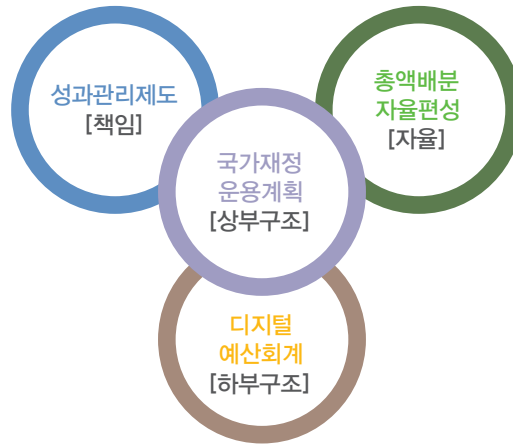
노무현 정부는 재정·세제개혁을 위한 4대 재정개혁 과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4대 재정개혁 과제란 재정성과관리제도(2003년 도입),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2004년 도입), 중기재정계획(2005년 도입), 재정정보 및 회계시스템(2006년 도입)<sup>02</sup>을 말한다.

아래 [그림 1-1]은 우리나라 재정개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예산의 그림을 그리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통해 각 부처에 총액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도록 한다. 또한 자율예산편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운용한다. 이러한 예산편성 체제의 개편을 돕기 위한 하부구조로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 4대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01 박노옥 외,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9

02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정정보시스템(D-brain)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었다.

[그림 1-1] 우리나라 재정개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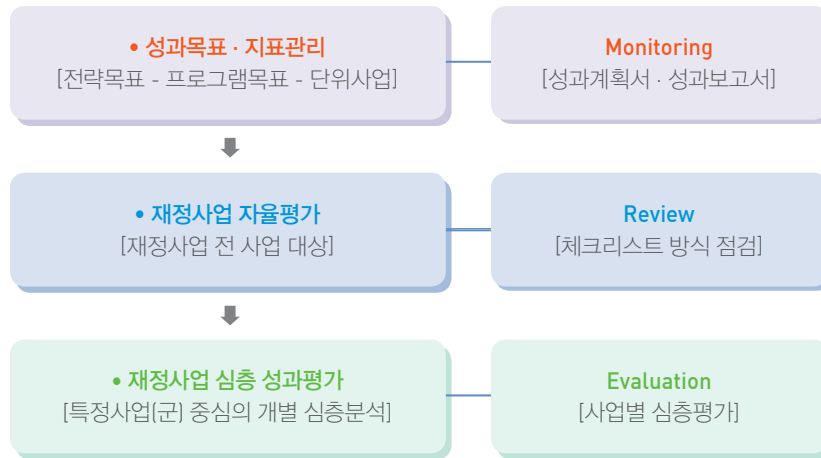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04), 『성과관리전문과정 교육자료』

4대 재정혁신의 핵심 사항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의 도입, 일선 부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그리고,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이다. 이러한 4대 재정혁신 중 하나인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도입에 따른 부처의 예산운영 자율권 확대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확보 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sup>03</sup>,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Monitoring) 체계를 갖추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해 사업을 점검(Review)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Evaluation)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세 가지의 주요한 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0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미국의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이다. GPRA는 1993년 의회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각 부처에 적어도 3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는 전략계획서,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연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림 1 -2]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출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5.9.16), p.5를 참고하여 작성.

### 3.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추진현황

1999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2018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 I-1>과 같다. 연도별 흐름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재정사업 주요 성과관리수단에서 성과관리제도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표 I-1> 1999~2018년 재정성과관리제도 추진현황

연도	추진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 추진(16개 기관대상 시범사업 실시)</li> </ul> </li> <li>• 부처별 성과지표개발(2월) 및 2000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기관에 세부지침 시달 및 설명회 개최(5월)</li> <li>• 16개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 작성, 제출 및 수정(6월)</li> <li>• 2000년 예산의 국회 확정 이후, 16개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를 최종 수정, 제출(12월)</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하여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28개 기관)</li> </ul> </li> </u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총 39개 기관)</li> </ul> </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재정사업(예산+기금)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해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제도</li> <li>▶ 1999년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실시 경험이 있는 부처 중 성과관리제도 시행이 적합한 22개 부처를 선(先)시행부처로 선정하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先)시행부처는 30%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12월)</li> </ul> </li> </ul> </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先)시행부처(22개)의 성과목표와 지표가 개발된 30% 사업은 200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li> <li>• 추가 4개 기관은 주요재정사업 중 3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li> <li>• 정책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li> </ul>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555개 사업, 약 35조원 수준)</li> </ul> </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개 부처의 주요재정사업에서 48개 모든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 대상범위를 확대(2007년도 성과계획서 작성(2006년 7월)부터 적용)</li> <li>• 200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온 22개 부처의 경우 2005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2005년 성과보고서를 작성</li> <li>• 2006년 9월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li> <li>• 재정사업 심층평가 실시</li> </ul>

〈표 1-1〉의 계속

연도	추진 내용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회계연도 1월부터 「국가재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li> <li>• 성과계획서(기획예산처 소관)와 성과관리시행계획서(국무조정실 소관) 통합</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최초 국회 제출</li> <li>• 대상부처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부처별 성과보고서(2007회계연도)가 처음으로 작성 완료</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서(기획재정부 소관)와 성과관리시행계획서(국무총리실 소관) 분리</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도 정부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의 구성항목으로 최초 국회 제출</li> <li>•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 추진(1단계): 5개 부처</li> <li>• 사업군 단위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선정</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회계연도부터 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li> <li>•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 추진(2단계): 19개 부처</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 추진(3단계): 26개 부처</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정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분석 보고서를 국회 제출</li> <li>•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 추진(4단계): 19개 부처</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관리체계(성과목표-관리과제)를 프로그램 예산체계(프로그램-단위 사업)와 일치시켜 성과계획서 작성</li> <li>• 2015년도 성과계획서부터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 내용 추가 작성</li> <li>•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Board)* 시범실시 *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의 성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부처 및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목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운영체제를 의미</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재부의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방식에서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li> <li>• PI보드 폐지</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li> <li>• 분야별(일반재정, R&amp;D, 지역사업)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시 성과관리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및 세출구조조정 확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전체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확대</li> <li>• 기존 자율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부처 자체평가는 실시하되, 상위(메타)평가를 폐지하고, 핵심사업 평가*를 추진하는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관리</li> </ul>

출처: 박노욱 외(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7; 박노욱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21; 기획재정부(2016-2017) 『통합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999년 국민의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고, 성과관리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로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영방식을 참고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관의 성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한 것이었는데, 일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였고, 예산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했었던 부처 중 22개를 대상으로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26개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서 48개 모든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200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성과관리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체크리스트 점검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는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시행되어 현재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2006년 9월에는 「국가재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나라살림 운영방식이 약 반세기 만에 단년도·통제·투입 위주에서 중장기·자율·성과 중심으로 전면 바뀌게 되었다.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법제화되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최초로 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체계인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체계와 예산편성 및 운용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로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심층평가제도의 대상을 선정할 때 개별 사업 단위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사업군 단위로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2011회계연도부터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2014년의 성과관리제도 관련 주요 특징은 2015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성과관리체계(성과목표-관리과제)를 프로그램 예산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와 일치시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

도록 하고, 단위사업과 연관된 조세지출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Board)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것은 각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의 성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부처 및 사업의 성과목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목표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PI보드는 너무 많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가 어렵고, 분기별 과정지표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써 정착되지 못하고 그 다음해에 폐지되었다.

한편, 2005년부터 시작되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2015년부터 큰 변화를 거듭하였다.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방식에서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 것이다. 또한 메타평가 방식으로 바뀐 다음해인 2016년에는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사업)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 효율화와 기관들의 평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에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시 성과관리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및 세출구조조정 확대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전체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기존 자율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합·작성하도록 하여 부처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8년 현재에는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서 부처 자체평가는 유지하되 메타(상위)평가를 폐지하고, 80개의 핵심적인 사업을 선별하여 집행과정·결과까지 중점 관리하는 핵심평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법으로 재정운영 건전화에 따른 새로운 재정운영시스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참여정부가 도입한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재정법」은 2006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림 1-3〉 국가재정법 제정과 재정개혁 과제의 관계



출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4.7.5.) 인용.

〈표 1-2〉 재정개혁 과제 관련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구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립 근거만 규정 ('수립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립 및 국회제출 의무(\$7)</li> </ul>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가능(\$29②, \$66③)</li> </ul>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계획서 제출(\$8②, \$34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 → 기획처: 2007년부터</li> <li>- 정부 → 국회: 2008년부터</li> </ul> </li> <li>성과보고서 제출(\$8②·③,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 → 재경부, 기획처: 2009년부터</li> <li>- 정부 → 국회: 2010년부터</li> </ul> </li> </ul>
프로그램 예산제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서를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작성(\$21②)</li> </ul>

출처: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6.9.13.)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근거가 신설되었다. 또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더불어, 기획예산처 장관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이를 위한 관계기관 조사·연구 위탁과 관련자료 제출요구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과관리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성과관리 관련 법령 현황

법령	내용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7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항)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 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1-3〉의 계속

법령	내용
「국가재정법」 제34조 및 제71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첨부서류)	(제34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7.(생략) 8.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제71조) 정부 또는 기금 관리주체는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3.(생략) 4.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국가회계법」 (결산보고서의 구성)	(제14조)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3.(생략) 4. 성과보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재정사업평가)	(제3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이하 생략).

출처: 대한민국 정부(2016), 『201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pp.2-4

## 5. 재정사업 주요 성과관리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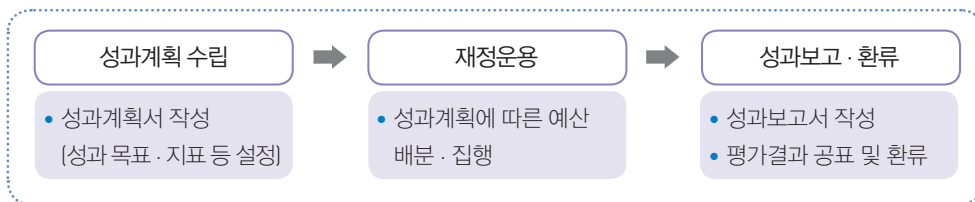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수단인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각 제도별로 그동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 가. 모니터링(Monitoring): 성과목표관리제도

####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정의와 목적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림 1-4]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출처: 기획재정부(2008),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성과주의예산제도 심포지엄 발표자료』

[그림 1-5] 성과목표관리의 구조



주: 2015년 성과계획서 작성부터는 성과관리단위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는 예산상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일치화됨.  
출처: 기획재정부(2013), 「201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p.5을 참고하여 작성.

## 2)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추진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1999~2001년까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추진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부처의 일부 실, 국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였고, 예산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제도의 정착에는 실패하여 국민의 정부가 끝남에 따라 종결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기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39개 기관 중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로 이름을 바꾸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로 기관들을 선정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갔다.

〈표 1 -4〉 2003~2006년 성과관리 대상기관

구분	대상기관	비고
既시행기관	26개	
〈2003년 시행〉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기상청, 통계청(22개)	先시행기관
〈2004년 시행〉	노동부, 여성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4개)	추가기관
〈2006년 시행〉	22개	
	재경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처, 법제처, 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식약청, 방재청, 행복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조실	

출처: 기획예산처(2006),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 p.1

2003년에는 22개 선(先)시행기관에 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중 3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다음 해인 2004년에는 선시행기관의 경우는 2003년 성과목표·지표가 개발된 30%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70% 사업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4개 기관(노동부, 여성부, 중기청, 문화재청)을 신규로 선정하여, 주요 재정사업 중 30%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22개 선시행부처의 경우, 주요 재정사업의 100%에 대해 「2006년도 성과계획

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4개 신규 대상기관은 2004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개발된 30% 사업에 대해 「2006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2003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온 22개 기관의 경우 2005년 성과계획서에 대한 2005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추가로 선정된 신규 22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까지 성과목표·지표체계만을 개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2007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연차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재정법」의 시행(2007년 1월)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법 제8조 제2항)하고 있다.

더불어 2007년에는 성과계획서(기획예산처 소관)와 성과관리시행계획서(국무조정실 소관)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분리되어 작성되었다.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였으며, 2011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법 제8조 제9항)(2009.5.27 개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개념, 추진경과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3) 성과계획서 개요<sup>04</sup>

#### ① 성과계획서 개념 및 경과

성과계획서는 각 부처가 전략목표 및 당해연도 프로그램목표(기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성과계획서는 사업 실시 전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04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2017), 「2018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내용을 인용 및 정리한 것임.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하고, 이를 통해 집행단계에서 성과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정보를 지출구조조정 등 예산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추진 경험을 살려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경험이 있는 22개 부처를 선(先)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6년부터 모든 부처(48개)의 재정사업으로 전면 확대하여 각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권 확대에 따른 재정운용성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2007년 「국가재정법」의 시행으로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던 성과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다.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법 제8조 제2항)하였다.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법 제34조, 제71조)하도록 하였으며, 2011회계연도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 내용 및 사업비 등이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법 제8조 제9항)하였다.

각 부처 성과계획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산편성 활용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지출수요가 증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필요성과 재정사업의 투명성이 증시되면서 성과계획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과 대상사업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이며,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52개 중앙관서(53개 예산 소관 중 국가정보원 제외)이다. 성과계획서 작성기관은 각 소관부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앙정부 및 기관은 [그림 1-6]과 같은 목표체계도를 갖는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조직과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등 단계별 성과목표체계를 수립한다.

[그림 1-6]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출처: 기획재정부(2017),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p.10 참고

#### ❖ 임무-비전-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 설정

임무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규정, 관계법령에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야 하며, 기관의 핵심 업무를 포괄하고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

비전은 임무 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통해 구현 가능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목표는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전략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관련 법령의 중·장기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프로그램목표는<sup>05</sup>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목표 간 또는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목표는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단위사업은 프로그램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별 사업단위이며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되고, 예산체계 코드상 단위사업과 일치되는 개념이다. 모든 예산 및 기금의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제도·규제 관련 사항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018년 성과계획서 작성부터는 성과관리 대상사업 간소화 및 내실화를 위해 평가제외 사업 중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은 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과관리와 통합평가 제도 간 연계 강화와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평가제외 사업(495개) 중 성과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345개)<sup>06</sup>을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2016년 기준 일반재정 1,708개에서 1,363개로 줄어들었다. 또한 평가 제외 대상사업 중 평가 유예, 보조사업 성과보고 의무화 등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150개)<sup>07</sup>은 계속 성과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 ❖ 성과지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또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는 프로그램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곤란한 경우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급적 프로그램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

05 프로그램목표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한데 묶어 놓은 것으로, 프로그램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 아래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이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단위사업들도 또한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과 전략목표 및 단위사업 간의 연계가 명확해야 프로그램의 정책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본 내용은 허경선 외, 『공공기관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29-30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06 청사시설 확충 등 청사관리사업, 국가시험운영, 국제기구분담금, 10억원 미만 소액사업(정보화 5억원), 고지서 발송 등 행정절차 경비, 공무원 연금급여 등

07 신규사업으로 사업착수 2년 이하 사업, 평가연도 이전에 사업완료사업, 책임운영기관 평가사업,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 등 지자체 자율 편성 포괄보조사업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 성과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에는 분자·분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측정산식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존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유지하여 관련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도별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국제수준과의 비교,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 국제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목표치 수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을 통해 예상되는 성과 제고 정도를 반영하여 설정해야 하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하는 설정근거를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성과관리 - 예산연계 강화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성과목표체계와 예산체계 일치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작업을 4단계(2010~2013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구조 일치화

-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예산서상 프로그램의 일치화
-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 예산서상 단위사업의 재조정 및 일치화

예산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	성과목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단위사업	.....	관리과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재정사업

〈표 1 -5〉 성과목표체계-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대상기관

단계	부처
1단계(2010년 추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관세청, 특허청(5개)
2단계 (2011년 추진)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19개)
3단계 (2012년 추진)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임장관실, 방위산업청, 행복청(26개)
4단계 (2013년 추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해양경찰청(1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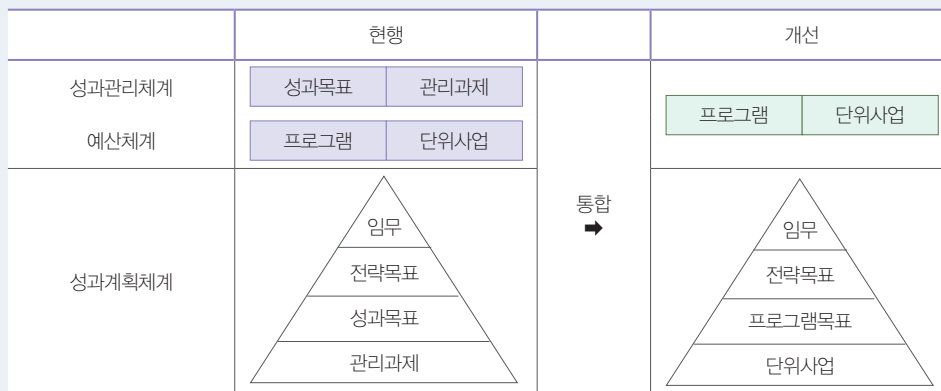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관련 내부자료 참고

2010~2014년까지의 일치화 작업을 통해 성과목표는 프로그램과 일치시키고 관리과제는 단위사업과 일치시켜왔으나, 예산체계(프로그램-단위사업)와 성과체계(성과목표-관리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관리과제가 한 개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로 이루어진 경우, 일부 세부사업만이 포함되어 관리과제가 구성된 경우, 성과목표에 다른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단위사업들이 섞여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5년 성과계획서 작성부터는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완전하게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기존 성과관리체계(성과목표-관리과제)를 예산, 기금 예산체계상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일치시켜 성과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체계를 따라 기존 '성과목표'라는 명칭은 '프로그램목표'로, '관리과제'는 '단위사업'으로 성과관리체계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예산체계와 일치하도록 성과목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 일치화 작업으로 인해 예산투입과 사업 성과정보 간 연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6〉 성과계획서·보고서 작성체계 개편



출처: 기획재정부(2014), 「201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p.2

#### 4) 성과보고서 개요<sup>08</sup>

##### ① 성과보고서의 의의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미리 설정한 각 부처의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서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지표별 달성현황,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제시·설명하는 자료이다.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집행단계 및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각 부처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로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운용성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② 성과보고서의 법적 근거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과 함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평가 등의 성과관리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재정법」(제8조)은 각 부처는 매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로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결산보고서와 함께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법」(제14조)에서는 성과보고서를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③ 성과보고서 작성 기관 및 대상 업무

성과보고서 작성 기관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이며, 해당 연도(Y년)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은 해당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08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2018), 「2017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내용을 인용 및 정리한 것임.

하는 재정사업(일반재정, 정보화, R&D 포함)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한 해당 연도(Y년) 성과계획서에 있는 모든 단위사업(임의변경 금지)이다.

#### ④ 성과보고체계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회계·기금을 통합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 성과보고 기본방향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는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른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각 부처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관리항목이 당해연도 성과계획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목표치 및 측정방식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고 시 목표달성 과정과 측정방법이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성과실적이 부풀러지거나 허위로 보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기획재정부는 매년 연도말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당해 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등 핵심 성과정보를 임의 변경하거나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과보고서가 효율적 사업추진 및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 달성 여부 외에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내·외부 지적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보고서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그래프 형태의 분석 결과로 제시하고, 성과달성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성과 실적치는 입증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 보고하여야 하며,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목표치 달성항목에 대해 감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리뷰(Review):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1)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sup>09</sup> 및 동법 시행령 제3조<sup>10</sup>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sup>11</sup>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사업을 투입뿐만 아니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2003년에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관리제도의 완성을 위해서 평가체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획예산처에서는 미국에서 정부성과관리법(GPRA)의 성과정보

09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이하 생략).

11 기획재정부(2018),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p. 1 내용 인용

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평가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성과정보의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궁극적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투명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변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념도 제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아래 <표 I-7>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념의 시기별 변화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I-7> 시기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개요

구분	개념	기획재정부 개별사업 확인·점검 여부	메타평가 여부
2005 ~ 2014년 (부처 자체평가 →기재부 확인·점검)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
2015년 (메타평가 실시)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2005년 시행) - 메타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	△	○
2016 ~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미래부·지역위(이하 메타평가부처)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
2018년 (부처 자체평가만 실시, 메타평가 폐지)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	×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매년 3분의 1을 선정하여, 해당 성과목표에 포함된 모든 관리과제(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를 자율평가 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의 기준, 즉 11~15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지침의 형태로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각 부처 사업 담당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5년부터는 메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전수 확인·점검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 자체평가 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메타평가를 도입·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지역발전 사업을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나누어 평가하던 것을 평가대상, 시기, 기준 등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단일평가로 통합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부처의 자율평가는 명실상부한 자율평가로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다만 부처 스스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자율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관계<sup>12</sup>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소수의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라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리뷰(Review) 방식의 성과정보 생산방식으로, 각 부처가 행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점검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리뷰 방식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면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새로이 생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의 리뷰 방식은 예산당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그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부처는 성과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해당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sup>13</sup>

12 기획재정부(2010),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p.72 내용을 인용 및 정리.

13 박노옥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p.50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이러한 리뷰 방식의 '자율평가제도'는 소수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예산과의 연계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고, 심층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평가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대상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사업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형태의 소수의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모니터링 방식과 심층적인 분석을 요하는 사업평가의 중간 형태인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형태인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성과목표관리제도 모두 정부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책임성 쪽에, 성과목표관리제도는 투명성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환류(예산편성 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성과목표관리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세스로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담길 전략 및 프로그램목표의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리하면,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기초가 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관계



출처: 기획예산처(2006.1),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p.134

14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는 민간의 경영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과관리 방식의 효시는 미국 예산당국인 OMB(Office of Management Budget)에서 개발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이다.

## 다. 심층평가(Evaluation): 재정사업 심층평가

### 1)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개요<sup>15</sup>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주요 재정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각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미달성한 원인 등을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방식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7조에 따르면 심층평가 분석기준은 사업의 성과와 적절성을 기준으로 사업(군)의 효과를 분석하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기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업의 성과는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설계의 적절성과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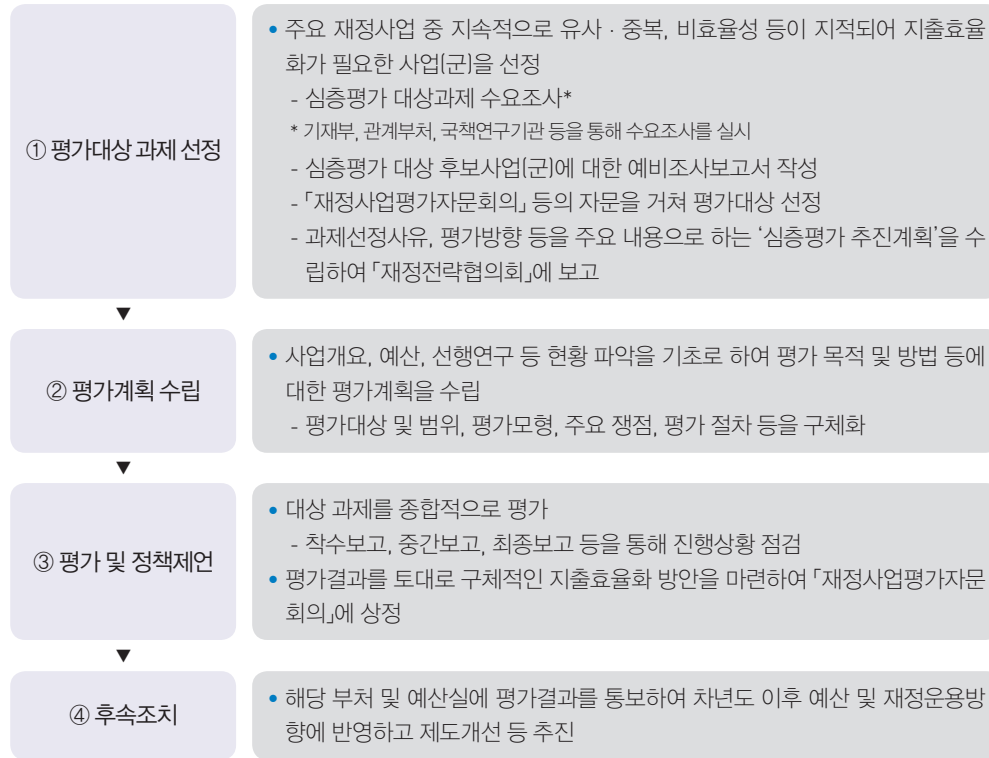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추가 평가가 필요한 사업', '유사·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지속적 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기타 심층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점검 필요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평가대상의 단위는 평가목적에 따라 개별 사업 혹은 사업군이 될 수 있다. 개별 사업의 경우는 예산환류에 초점을 두고, 자율평가 미흡사업 중 연례적·구조적으로 부진한 사업 중에서 선정하고, 사업군 단위의 심층평가는 종합적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군이나 이슈가 되는 재정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층평가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I-8]과 같다. 심층평가 추진절차는 크게 ① 평가대상 과제 선정, ② 평가계획 수립, ③ 평가 및 정책제언, ④ 후속조치의 절차로 운영된다.

15 기획재정부(2017.12),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정리.

[그림 1-8]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KIPF 재정성과 동향과 이슈』 2016 상반기, p.6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추진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 중 지속적으로 유사·중복,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또는 사업군을 선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및 사업군에 대하여 제6조<sup>16</sup>의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쟁점과 문제점, 평가 필요성과 가능성을

16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시행 2017. 12. 20.) [기획재정부훈령 제349호, 2017. 12. 20., 제정.]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의 심층평가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정책적 기준 및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심층평가 필요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정책적 기준: 대상사업의 재정운용상 중요성, 국민·사회의 관심도, 국가정책 추진 시 중요성 등 평가의 실익과 필요성
2. 기술적 기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 타 사업 및 세부사업 간 비교가능성, 평가 소요기간 및 정책대안의 적절성 등 평가수행의 가능성과 용이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경우 선정 시기에 관계없이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심층평가 관리기관<sup>17</sup>에 의뢰하여 심층평가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요조사 및 예비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층평가 대상사업 및 사업군을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계 부처에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한다.

평가대상 과제선정이 완료되면 각 과제별로 평가를 위한 연구진이 제안·구성되며, 평가대상의 관련 부처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를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질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sup>18</sup>

심층평가 연구진은 그간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안에 대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개선 또는 차년도 이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심층평가 운영과정에서 전담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후보사업(군)에 대한 예비조사, 수행기관 및 연구진 선정 지원, 수행지침에 대한 교육, 평가결과 사후 관리 등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2)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변화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정착·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시작된 해인 2005년에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3개의 사업에 대해

17 심층평가 관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가 전담해오고 있다.

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4.6일자, 2017.11.24일자, 2018.8.6일자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서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까지는 매년 약 10여 개의 개별 사업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개별 사업이 속해 있는 보다 큰 단위의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사업군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간의 유사·중복, 우선순위 및 자원배분 방향, 부처 간 역할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상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 간 유사 및 중복성을 점검하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대상 사업 수가 많기 때문에 분석의 엄밀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sup>19</sup>

기획재정부는 2011년 이후부터는 심층평가 수행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 이외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2017.12.20.)하여 심층평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심층평가의 정의, 목적,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2장 심층평가 대상사업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사업 선정, 선정절차, 평가 사전예고제도, 대규모의 심층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 심층평가 수행체계에서는 심층평가 수행기관, 심층평가 추진단, 심층평가관리기관, 심층평가 수행지침,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의 심층평가의 내용과 분석에서는 평가계획의 수립, 심층평가 내용, 심층평가의 분석기준, 평가의 결과 및 정책 제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 심층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부분에서는 지출성과 제고방안과 평가결과의 공개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3)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추진현황

2005년 도입 이후 2017년 기준으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106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지출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19 박노욱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p.30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표 I-8〉 2005~2017년 분야별 심층평가 과제현황

(단위: 건)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분야	건수
보건·복지·고용	31	문화·체육·관광	6	국방	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SOC	5	R&D	2
농림·수산·식품	17	교육	5	외교·통일	2
일반·지방행정	10	공공질서·안전	3	환경	2

합계: 총 106개 과제

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심층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분야" 구분을 적용하여 해당 과제의 주요 관련부처 및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임의 분류하였음.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

심층평가 대상의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위의 〈표 I-8〉 2005~2017년 분야별 심층평가 과제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건, 농림·수산·식품 17건 순으로 심층평가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분야들 외에 일반·지방행정, 문화·체육·관광, 교육 분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5~10건의 심층평가를 받았으며,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환경 분야들에서는 2~3건의 심층평가가 실시되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비효과적인 사업의 폐지나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과 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 PART I .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2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개요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준비 및 도입기(2004~2005년) .....	50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주요 변천내용(2005~2018년) .....	52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제도 변화 .....	52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	54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대상 수 및 평가결과 .....	56

##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준비 및 도입기(2004~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2004년에는 한국조세연구원(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주축이 되어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업성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진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3년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한 것<sup>20</sup>으로, 2002년 4월에 67개의 연방정부사업을 대상으로 PART 초안이 만들어졌다. 같은 해 5월에는 NAPA(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와 PMAC(Performance Measurement Advisory Council)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에는 최종 67개의 평가대상 사업목록과 PART의 평가문항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에는 부처가 PART를 실행하였고, 2003년 2월에는 첫 PART의 시범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은 『성과관리와 사업평가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04.12) 보고서의 「사업평가지침서 및 PART 도입방안 연구」에서 미국의 PART를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의 재정운영 실정에 맞게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의 Green Book<sup>21</sup>, 미국 및 캐나다의 사업평가지침 등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항목과 연계된 사업평가에 대한 지침의 내용도 연구하고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기획예산처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안을 참고하여 실무

20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의 목적은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사업성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진단도구로서 결과를 개선시키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PART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완성하여 부처설명회를 실시(2005년 3월) 하고,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제도에 대한 자문과 부처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2005년 4월 중순)하였다. 그리고 2005년 4월 말경에는 부처에 지침을 배포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1 Green Book은 영국의 재무부(HM Treasury)에서 어떻게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지에 관하여 발간하는 지침서로서, 사업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지출, 조세, 규제 변화, 공공자산 활용 등과 관련된 모든 제안에 대해 적용된다.

##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주요 변천내용(200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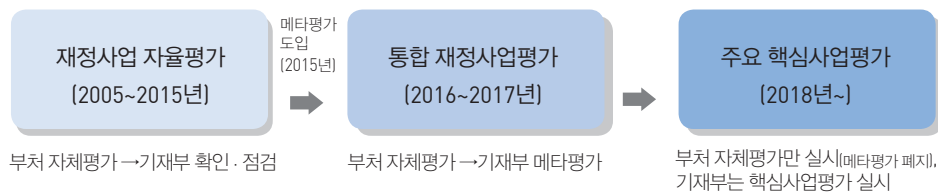
###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제도 변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을 주기로 매년 30% 정도의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였는데, 첫 해인 2005년에는 600여 개의 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었다.

2005년에는 기획예산처의 조직 개편에 맞추어 성과관리본부가 신설되면서 성과관리제도팀과 재정사업평가팀이 새로이 발족되었다. 본격적으로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강화로 볼 수 있는 변화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체계와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05년 도입 당시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재정당국(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재정당국에서는 제출된 전체 개별 사업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심의·조정과정을 통해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절차는 큰 변화 없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유지되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사업부처, 평가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아래 [그림 1-9]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주요 변천과정과 같이 여러 차례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림 1-9]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주요 변천과정



출처: 원종학(2018), 「한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와 최근 동향 교육 PPT자료」, p.14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는 바로 부처들의 자체 평가 관대화 현상이었다.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결과와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제출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부처에서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모든 사업을 ‘보통’ 등급 이상으로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없애기 위해 2011년에는 부처의 자체평가에 상대 평가를 도입하여 '우수' 이상의 등급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미흡' 이하 등급을 10% 이상 할당하도록 하거나, 부처 자체평가결과와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결과 간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인 경우는 총 점수에서 3점을 감점<sup>22</sup>하도록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흡' 등급의 사업을 소액사업 혹은 경직성(의무적) 지출로 선정하여 예산삭감을 어렵게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이 나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평가해 온 내용을 사업별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고, 자율평가의 취지가 퇴색되는 현상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전수 확인·점검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 자체평가 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메타평가를 도입·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는 '사업수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흡사업 예산액의 10%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흡사업 예산액의 10%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규정」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에서 소규모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을 부여하거나, 분야별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는 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지역발전 사업을 분야별로 칸막이식으로 나뉘어 평가하던 것을 평가대상, 시기, 기준 등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단일평가로 통합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운영하였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부처가 자율적으로 분야별로 부처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메타평가(상위평가)기관이 확인 점검하여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업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 메타평가기관은 분야별 부처별로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였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결과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으나, 부처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확인·점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평가제도가 분절

22 2010년에는 부처 자체평가결과와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결과 간 점수차이가 20점 이상인 경우, 총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하였던 것을 2011년에는 감점 폭을 확대하여 3점을 차감하였다.

적으로 운영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sup>23</sup>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간담회와 사업담당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재정사업의 양적, 질적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평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업부처 담당자들도 평가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2018년 평가제도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4</sup> 첫째, 부처의 자율평가는 명실상부한 자율평가로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는 과감히 폐지하게 하였다. 다만 부처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자율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핵심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직접 평가·분석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정량적 성과지표로만 평가하였지만, 전문가 심층인터뷰, 현장조사, 수혜자 만족도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재정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의 변화

아래 <표 I-9>는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일반재정) 평가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의 평가지표 수는 메타평가가 도입된 첫 해인 2015년까지 11~15개 사이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년 평가지표별로 ‘예’, ‘아니요’ 답변 기준이 구체화된다거나 평가지표가 통합 및 분리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이 조정되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 뿐, 기본적인 평가항목들은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어왔다.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9.28) 참고.

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11) 참고.

〈표 1-9〉 연도별 평가지표 내용 변화

(단위: 개)

평가 지표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통지표 수		15	15	15	13	11	12	10	11	11	11	11	4	3			
계획 (사업 계획)	1-1. 사업목적의 명확성	●	●	●	×	×	●	◐	●	●	●	●	×	×			
	1-2. 정부지출의 필요성	●	●	●	●	×	×	×	×	×	×	×	×	×			
	1-3. 유사·중복 해당 여부	●	●	●	●	●	●	●	●	●	●	●	×	×			
	1-4.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	●	●	●	●	●	◐	●	●	●	●	◐	×			
성과 계획	2-1. 성과목표·지표의 구체성	●	●	●	×	×	×	×	×	×	×	×	×	×			
	2-2. 성과목표·지표 간 연계성	●	●	●	●	●	●	●	●	●	●	●	가점	×			
	2-3.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	●	●	●	●	●	●	●	●	●	×	×			
집행 / 관리	3-1. 모니터링 운영 실적	●	●	●	●	●	◐	◐	◐	●	●	●	◐	×			
	3-2. 사업 추진 중 문제점 해결	●	●	●	●	●	◐	◐	◐	●	●	●	◐	×			
	3-3. 계획된 예산의 집행 여부	●	●	●	●	●	●	●	●	●	●	●	●	●			
	3-4. 집행 효율성 제고 실적	●	●	●	●	●	○	●	●	가점	가점	가점	가점	가점			
성과 · 환류 / 결과	4-1. 객관적, 종합적 평가 실시 여부	●	●	●	●	●	○	×	×	●	●	●	×	×			
	4-2. 평가결과에 의한 효과성 여부	×	×	×	×	×	●	●	●	×	×	×	◐	×			
	4-3. 계획된 목표/성과 달성	●	●	●	●	●	●	●	●	●	●	●	●	●			
	4-4. 성과 우수성	×	×	×	×	×	×	×	×	×	×	×	◐	●			
	4-5. 사업고객의 만족도	●	●	●	●	×	×	×	×	×	×	×	×	×			
	4-6. 평가결과의 환류	●	●	●	●	●	●	●	●	●	●	●	×	×			

주: 1. ●는 한 개의 지표가 존재함, ◐는 다른 지표와 통합되어 존재함, ○은 다른 영역에 해당 지표가 존재함을 의미.  
 2. 2-2 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연계성 항목은 공통지표로 존재하다가 결과지표 설정 관련 가점지표로 변경(FY15)되었으며, 3-4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항목 또한 공통지표의 하나로 존재하다가 가점항목으로 변경(FY12-FY16) 되었음.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2016년부터는 메타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를 더욱 확대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부처에 완전히 일임하고 부처의 평가과정에 대한 평가인 상위평가(메타평가)만을 하는 형

PART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 1 장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제 2 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변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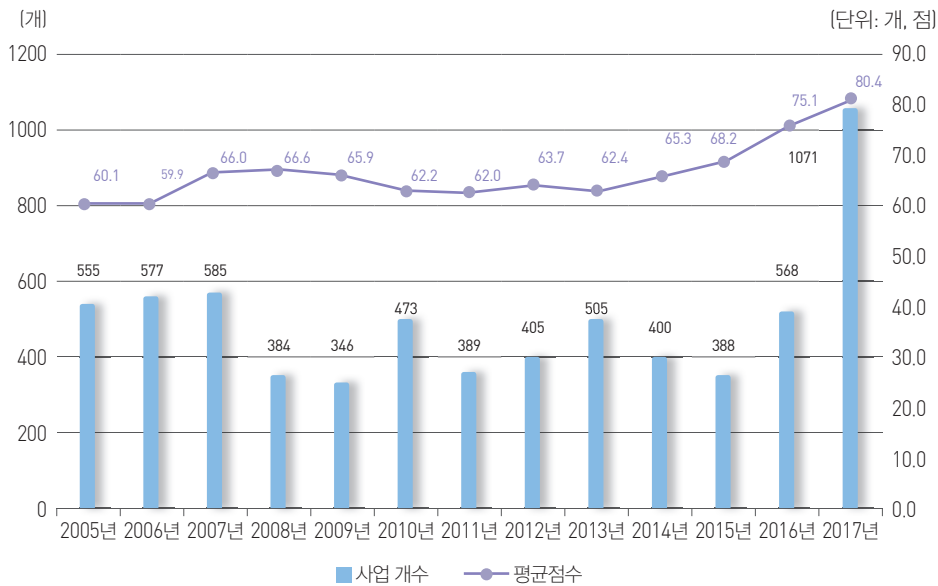
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평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여 4개로 줄이고, 2017년에는 더 간소화하여 3개로 줄였으며, 2018년에는 부처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3~4개의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sup>25</sup>

보다 자세한 연도별 평가지표의 내용은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제1장 항목별 변경사항 부분의 4. 평가지표 부분에서 볼 수 있다.

#### 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대상 수 및 평가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이 기준이 된다. 아래 [그림 I-10]에는 일반재정사업(예산+기금)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개수와 평균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특정연도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 개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의 몇 %를 그 해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느냐와 평가대상 단위의 조정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 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림 I-10] 연도별 일반재정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 개수와 평균점수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자율평가결과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을 주기로 매년 30% 정도의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2005

25 2017회계연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bbs/secretYnChk.do?seq=46195>)에 공개되어 있다.

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마다 550개 내외로 평가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384개로 줄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시행으로 사업평가의 단위를 세세항에서 단위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평가대상 단위들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성과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단위사업들을 가급적 한해에 평가받도록 하였다. 이는 상위 목표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성과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통합 재정사업평가가 실시된 2016년에는 성과관리대상 사업 수 기준으로 50%를 선정하여 568개가 선정되었고, 2017년 평가 시에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전체로 확대하여 1,071개의 사업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아래 <표 I -10>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율평가 평가결과 산출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산출방식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등급기준에 의한 분포는 살펴보기 어려워, [그림 I -10]에 연도별 일반재정 재정사업자율평가 사업 개수와 평균점수의 추이를 제시하였다. 자세한 연도별 등급분포와 평가결과의 내용은 'PART II'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표 I -10>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등급	평가결과 산출방식				
2005 ~ 2007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점수구간별로 등급화하여 평가결과를 산출</li> </ul>				
	<table border="1"> <tr> <td>우수 (85점 이상)</td> <td>다소 우수 (84-70점)</td> <td>보통 (69-50점)</td> <td>미흡 (50점 미만)</td> </tr> </table>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점)	보통 (69-50점)	미흡 (50점 미만)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점)	보통 (69-50점)	미흡 (50점 미만)			
2008 ~ 2015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년부터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등급 간 점수 및 '사업 수 기준' 비율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출 -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li> <li>2015년에는 상대평가 등급기준을 세분화 - 매우 우수(5%), 우수(15%), 보통(65%), 미흡(10%), 매우 미흡(5%)</li> </ul>				
	<table border="1"> <tr> <td>매우 우수 (90점 이상)</td> <td>우수 (90-80점)</td> <td>보통 (80-60점)</td> </tr> <tr> <td>미흡 (60-50점)</td> <td>매우 미흡 (50점 미만)</td> <td></td> </tr> </table>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60점)	미흡 (60-50점)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60점)				
미흡 (60-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2016 ~ 2018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부터 상대평가 시 점수구간별 기준은 없으나, 상대평가 시 '예산규모 기준' 혹은 '사업 수 기준'으로 지침에 제시된 비율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출 *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tr> <td>우수, 보통, 미흡 (등급구간별 점수기준 없음)</td> </tr> </table>		우수, 보통, 미흡 (등급구간별 점수기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등급구간별 점수기준 없음)						

〈표 1-10〉의 계속

	평가등급	평가결과 산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상대평가 시 '예산규모 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상대평가 실시</li> <li>• (2017년) 상대평가 시 '예산규모 및 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상대평가 실시</li> <li>• (2018년) 상대평가 시 '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상대평가 실시</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종 평균점수는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었으나, 대략 60점대 초반에서 70점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에 75.1점과 80.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가지표의 개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준과 평가내용과 점수기준이 달라진 것도 있고, 메타평가 실시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부처가 제시한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확인·점검을 하지 않아 부처의 관대화된 평가점수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메타평가 실시 이후의 사업의 평균점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로서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등급에 따른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1. 평가체계 및 평가절차 .....	60
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 주관부처의 사후 확인점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	60
나. 메타평가 도입을 통한 자체평가의 질적 개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63
다. 메타평가 폐지 및 완전한 부처 자율화: 2018년 현재 .....	67



앞 장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하여 2005~2018년까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제1장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로 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평가체계 및 평가절차<sup>26</sup>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체계는 크게 ①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의 사후 확인점검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체계가, ② 메타평가, 통합 재정사업 평가 도입을 통한 질적 개선을 거쳐, ③ 메타평가 폐지 및 완전한 부처 자율화로 변모하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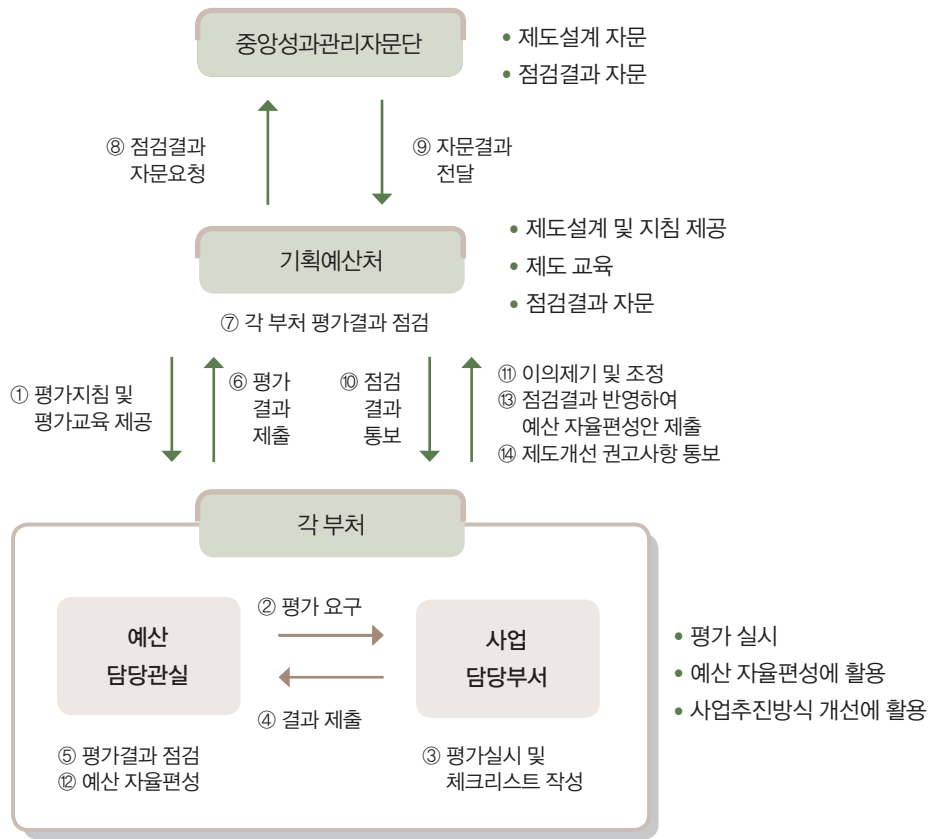
### 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 주관부처의 사후 확인점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도입, 「국정평가기본법」에 의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시행 등을 계기로 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2005년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up>27</sup>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도입 초기부터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재부가 이를 확인·점검하여 예산 삭감 등으로 환류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제도 초기의 자율평가 평가절차를 간단히 그림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안의 숫자는 [그림 II-1]의 숫자를 의미한다).

26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일반재정사업 기준으로 작성함.

[그림 II-1] 제도 초기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세스



출처: 기획예산처(2006),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27 PART는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OMB가 개발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표준화 된 사업 평가도구로서, 2002년에 처음 도입된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 활용되었다. 체크리스트 문항구성은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 및 관리, 사업성과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 개의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추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확인점검자가 예/아니오로 대답하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총합하여 Effective, Moderately Effective, Adequate, Ineffective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OMB에서는 각 사업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의회에 대통령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며, OMB 웹페이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 OECD 국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

- ① 기획예산처가 평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교육을 제공한다.
- ②~③ 각 부처 예산담당관실과 사업담당부서는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④~⑥ 예산담당관실은 이 결과를 취합하여 점검한 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 ⑦ 기획예산처에서는 전문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협조를 받아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각 부처 사업담당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확인·점검한다.
- ⑧~⑩ 점검결과는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후 1차적으로 각 부처에 통보된다.
- ⑪~⑫ 각 부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 담당자와 자문단은 이의제기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 ⑬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자율편성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 ⑭ 기획예산처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2007년부터 추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는 다음 평가시 검토되어 권고사항 이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각 단계에서의 주체별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처는 제도를 설계하고 평가지침을 수립, 제공하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관련 교육을 주관한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각 부처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부처와의 서면·대면심의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실사까지 병행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기획예산처의 확인 점검을 거친 평가결과를 예산 자율편성에 활용하고 사업추진방식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은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 성과목표·지표 개발 및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자문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처의 담당자들이 자율평가지침의 답변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했는지 검토하고 각 부처의 1차 검토결과 및 이후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기존에 자율평가 절차에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던 역할을 기획재정부가,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이 담당하던 역할을 재정사업평가자문단이 그대로 담당하게 되었고 그 외의 절차는 큰 변화 없이 2014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 나. 메타평가 도입을 통한 자체평가의 질적 개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그간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간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곤란하고, 평가 중복으로 인해 부처의 업무부담 및 평가결과가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둘째, 부처가 평가한 것을 다시 상위평가기관이 사업별로 확인·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재조정함에 따라 부처에서는 형식적·방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셋째, 부처 자체평가 시 모든 사업을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부처의 전략적 행동이 지속되어 왔다.

넷째, 부처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각 부처가 평가한 내용을 기재부가 사업별로 일일이 재평가하게 되어 자율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불필요한 평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존재하게 되었다.

다섯째, 사업성고가 미흡한 경우 그 원인이 사업관리 부실, 사업구조 문제, 예산 부족 등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삭감만을 적용하여 정책수혜자가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sup>28</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일반재정(정보화 포함) 분야에서 '메타평가'를 적용하여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함으로써, 부처의 관대화 경향을 차단하고 환류방식을 개선하는 등 평가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에 부처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sup>29</sup> 방식으로 바꾸었다.

메타평가의 도입에 따라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집중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사업 예산액의 10%를 지출구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1.27., 2016.1.22.) 참고.

29 메타평가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Cook and Grunder(1978)은 평가제도를 평가하는 세 가지 유형의 메타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① 제1유형은 특정 평가제도를 동일한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후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며,  
 ② 제2유형은 1차 평가 후에 제3자가 1차 평가과정 및 방법의 전반적인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③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평가제도 자체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전문가 의견조사, 관련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오영민 외(2017),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참고). 부처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재부가 동일한 지표로 확인 및 재평가한 후 최종점수를 확정했던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제1유형의 메타평가로 볼 수 있는 반면, 2015년부터 기재부가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평가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 평가과정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한 '메타평가'는 제2유형의 메타평가에 해당한다.

조조정 목표로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흡사업 예산액의 10% 지출구조조정방안 마련 규정」에 대해 다수 부처에서 소규모 사업 위주로 ‘미흡’ 등급을 부여하는 전략적 평가 왜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2015년에는 사업별 확인·점검을 필요시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침 내용에 따라 전략적 평가 왜곡 가능성이 제기된 부처를 대상으로 다시 예전처럼 사업별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비효율이 나타났다. 또한 칸막이 평가로 인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중복이 발생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는 그동안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여러 재정사업 평가<sup>30</sup>를 평가대상, 시기, 기준 등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단일평가로 통합하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 체제로 전환하였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분야별로, 부처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를 메타평가(상위평가)기관<sup>31</sup>이 확인·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면, 메타평가기관은 분야별·부처별로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인센티브(기관 포상,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 비율 하향 등)와 페널티(총지출구조조정 규모 확대, 기본경비 삭감 등)를 부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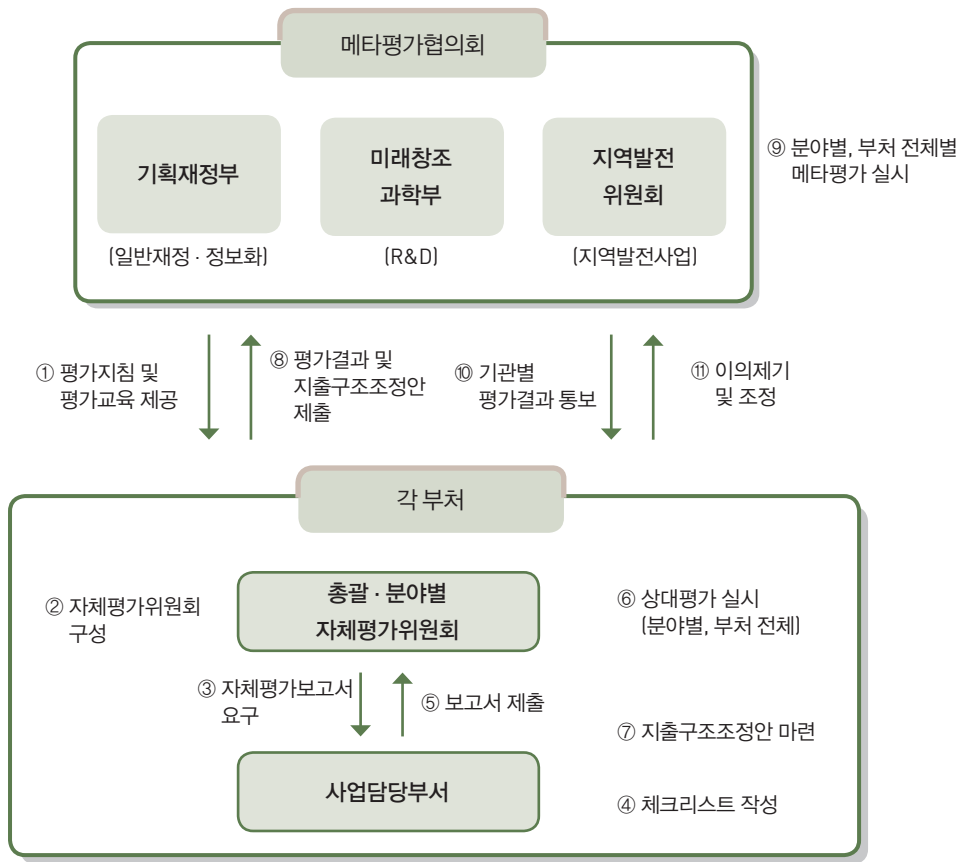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를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를 준수하도록 하여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했다.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이 아닌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미흡사업에 대해 일괄 10%를 예산 삭감하는 대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별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별 확인·점검은 실시하지 않되, R&D 분야에 한해 우수 성과 관리·확산 및 성과평가 유공 포상 사업 선정 등을 위해 ‘우수’ 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 점검만 시행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운영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2]와 같다.

30 재정사업 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제2항 제1호],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31 일반재정(기재부), R&D(미래부), 지역발전(지역위)

[그림 II-2] 통합 재정사업 평가 프로세스



출처: 기획재정부(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 ①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협의회에 의해 수립된 평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교육을 제공한다.
- ②~④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체크리스트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⑤~⑦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분야별·부처 전체 대상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안을 작성한다.
- ⑧~⑨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메타평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협조를 받아 각 부처 자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지출구조조정안을 대상으로 분야별, 부처 전체별 메타평가를 실시한다.
- ⑩~⑪ 기관별 평가결과는 각 부처에 통보되고, 이에 대해 각 부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메타평가협의회에서는 이의제기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을 통해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영도별 변경사항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영도별 주요 변화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수행부처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인 만큼, 각 부처가 구성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총괄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구분되며,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 50%를 포함한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체평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가지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처의 자체 기준은 평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설정할 수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와 부처 간 의견 조정 절차 및 기준 등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된다.

한편 메타평가협의회는 기존에 각 분야별로 실시되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부처 간 의견 조정을 통해 분야 간 평가 형평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서, 부처의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처의 자체평가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메타(상위)평가협의회는 기존 재정사업 평가에서 사업별 확인·점검을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성과평가 지원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 구성되며, 평가지침 및 보고서 양식의 확정, 평가대상 사업 선정, 부처별 상대평가 적용기준 검토,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수행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 자체평가에 대하여 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 각 분야별로 메타(상위)평가를 실시하고 나면, 메타평가협의회에서 분야별 메타(상위)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각 부처별 메타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상·하위 10~20% 수준에서 우수 및 미흡 부처를 선정하게 된다.

2017년에는 전년도에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의 50%에 대해서만 실시된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메타평가 세부사항을 보완하였다. 우선,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예산규모' 기준으로만 실시하던 상대평가를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의 중복을 해소하고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별도로 제출하던 자체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합한 통합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부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 다. 메타평가 폐지 및 완전한 부처 자율화: 2018년 현재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평가의 질, 결과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부처의 전략적 평가 왜곡 현상을 부추기고 각 부처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대한 확인·점검에만 치우쳐져 개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sup>32</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기획재정부는 전문가간담회, 사업담당 부처와의 논의 등을 거쳐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소관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를 과감히 폐지한 것이다. 즉, 「국가재정법」에 의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시행하되 메타평가를 폐지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율평가’로 변화하였다.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재정부는 분야별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핵심사업평가’를 도입하였다.

핵심사업평가는 기존에 정량적 성과지표 위주의 사후 평가에서 탈피하여, 전문가 심층 인터뷰, 현장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며, 특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정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2018년부터 실시된 핵심사업평가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등 12개 분야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하여 집행과정, 결과까지 중점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하에 재정관리국장을 평가반장으로 하여 각 평가팀(기재부 담당사무관, 전문가, 전문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구성)을 이루어 평가가 수행된다.

핵심사업평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단기(1년)의 직접적인 산출목표뿐만 아니라 중기(3년)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며, 1년에 한 번 서류 중심으로 전년도 성과를 확인·점검하던 기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지속 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매 분기별로 평가단이 평가대상 사업의 집행률, 과정·산출지표 달성률 등을 현장조사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며, 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종합평가를 통해 결과지표 및 핵심가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핵심사업평가와는 별개로,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사전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아래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3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9.2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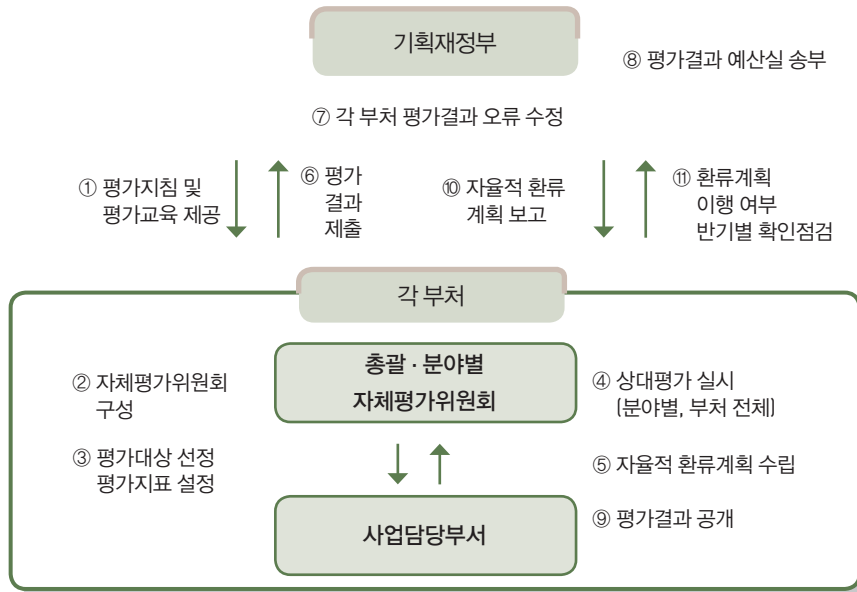
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은 부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 또한 평가대상 사업 역시 일정 기준 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평가제외 대상사업이라도 소관부처 재량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다. 사업의 평가 지표 역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 수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등급화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환류계획을 수립, 이행한다. 각 부처는 스스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 관 주재)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자율평가의 과정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를 통해 상세히 외부에 공개하면서 평가결과에 대해 부처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자율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만 제공하고, 평가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했던 기존의 메타평가와 달리 단순수치오류, 제출서류 누락, 사실관계 불일치 등 기본 오류사항을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프로세스



출처: 기획재정부(2018),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 ① 기획재정부가 평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평가교육을 제공한다.
- ②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 ③ 사업부처는 각 사업의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체크리스트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④~⑤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sup>33</sup>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다.
- ⑥~⑧ 각 부처의 평가지표, 평가대상 리스트, 평가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단순 수치오류, 서류 누락 등 기본 오류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실로 평가결과를 송부한다.
- ⑨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⑩~⑪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환류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반기(필요시 분기)별로 환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33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적용 대상인 '일반재정' 분야만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며, 'R&D', '재난안전', '지역발전'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에서 별도 지침을 시달하여 평가하고 있음(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2. 평가일정 .....	71
가. 평가시기 조정으로 성과와 예산 간의 연계 강화 .....	71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주체의 변화 및 평가시기 변경 .....	72
다. 메타평가 도입에 따른 세부 평가일정의 변경 .....	73
라. 메타평가 폐지로 부처 자율에 의한 평가일정 유연화 .....	74



## 2. 평가일정<sup>34</sup>

앞에서 살펴본 평가절차가 실제로 어떠한 일정하에 추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평가시기 조정으로 성과와 예산 간의 연계 강화

우선, 제도 도입 첫 해인 2005년에는 3월부터 약 한 달간의 제도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6일에 각 부처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평가주기가 시작되었다. 해당 지침에 따라 5월부터 각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순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취합된 부처별 자율평가결과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점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총 2차에 걸친 부처 이의제기와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와 동시에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평가결과 검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자문이 병행되었다. 이렇게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마친 자율평가결과는 성과관리자문단 회의(8.30), 재정관리점검단 회의(9.8)를 거쳐 2005년 9월에 최종 확정되었다.

평가 첫 주기를 마치고 10~12월간 ‘자율평가 제도발전 TF’를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율평가결과가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제도의 본래 취지인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에는 평가시기를 3개월 앞당겨(2005년 4~9월 → 2006년 1~6월) 예산편성과의 시기중복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 시 평가결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1월 초에 평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 자율평가 업무 담당자 대상, 사업별 담당자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시행하였다. 각 부처는 1월 말까지 평가대상 사업 선정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금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2월 3일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는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3월 10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기획예산처는 3~5월에 걸쳐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자문을 병행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하였고, 5월 15일에 점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이후 각 부처의 이의제기 및 조정 기간을

34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일반재정사업 기준으로 작성함.

거쳐 6월 21일에 평가결과가 확정되었으며, 각 부처에서는 해당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 자율편성안을 6월 30일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2007년에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각 부처에 평가지침 통보(1월 초)<sup>35</sup> → 각 부처 담당자 대상 평가지침 교육(1~2월) → 각 부처 자체 평가결과 제출(3월 10일) → 기획예산처 확인·점검 및 부처 이의제기,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자문(3~5월말) → 평가결과 확정(6월 중) 순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행되었다. 다만, 2007년부터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마련하고 11월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기획예산처의 평가담당자는 해당 연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사업 효율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통보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평가결과 요약본에 포함되어 필요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 시 검토되어 일정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2008년에도 전년도와 큰 변화 없이 해당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일정으로 평가가 시행되었다.

#### 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주체의 변화 및 평가시기 변경

2009년은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평가 담당주체가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이 재정사업평가자문단으로 변경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의 각 역할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평가일정 역시 거의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나, 11월에 진행되던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 및 통보가 6월 말로 당겨졌다는 변화가 있었다.

사업별 제도개선 권고 및 통보 시기는 2010년부터 평가결과 확정 이후인 하반기 내지 7~8월경으로 변경되었다. 2011년부터는 각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업무 담당자 및 재정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지침 교육이 전년 12월~1월로 앞당겨지고, 기존에 3월 중순부터 시작하던 기획재정부의 평가결과 확인·점검을 4월 초부터 시작하는 등 일부 평가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었다.

2012년에는 기존에 3월 말까지 제출하던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3월 초까지 기재부에 제출

---

35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지침에는 각 부처에 평가지침을 통보하고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시점이 전년도 3월 말~4월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배경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의 재정성과부문 평가계획에 재정사업 자율평가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전년도 평가 종료 후 하반기에 지침개선TF가 운영되어 차년도 평가지침에 반영되는 등의 절차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로는 전년도 12월-평가연도 1월경에 확정된 평가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고 평가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평가가 시행되었다.

하도록 일정이 앞당겨졌고, 3월~4월 초까지 기재부의 확인·점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부처 의견수렴 및 사업별 내부심의를 거쳐 6월 초에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일정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지원하에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절차가 전년 대비 50일 이상 단축되었는데, 이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부터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한편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평가일정이 분리되어 시행되는 것은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3월 초까지 제출하던 각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2월 2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앞당기는 한편, 기존에 3~4월 말까지 기금사업, 5~6월 초까지 예산사업을 각각 확인·점검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는 것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래 6월 중순에 확정되던 평가결과를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말에 확정하는 식으로 평가일정이 단축되게 되었다. 2014년에도 이와 동일한 평가일정으로 수행되었다.

#### 다. 메타평가 도입에 따른 세부 평가일정의 변경

2015년부터 메타평가가 시작되어 평가체계가 변경되면서, 평가일정에도 다소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해당 연도 1월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평가지침 및 대상사업을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는 1~2월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2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3~4월간 확인·점검한 후, 5월 중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통보하였다. 2015년부터는 예산순기가 기존보다 1개월 빨라짐에 따라, 부처 예산요구안 제출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5월 중에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등 평가 완료시기도 약 1개월 정도 단축되었다.

2016년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되면서,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년도 12월에 평가대상 사업 선정이 완료되고 평가지침이 확정되면,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메타평가 부처(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각 부처에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1~3월간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결과를 메타평가협의회에 제출한다.

메타평가협의회에서는 4월 초~5월 중순까지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업

무평가위원회 보고를 거쳐 5월 20일경 그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sup>36</sup> 이는 일반재정(정보화 포함) 사업 기준으로, R&D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6월)를 거쳐 7월 중에, 지역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5월)를 거쳐 5월 말에 평가결과가 완료되는 등 세부 평가일정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2017년의 평가일정은 2016년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기존에 1월 초까지 제출하여 메타평가기관에 확인·점검받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2017년부터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7월 말에 결과가 확정되던 R&D 사업이 일반재정(정보화 포함) 사업과 동일한 평가일정에 따라 5월 중에 평가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상 변경이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성과목표관리제도상의 성과보고서와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기존에 2월 말에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3월 말에 자체평가보고서를 별개로 작성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메타평가 부처에 제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재구성된 '통합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동일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평가하여 평가결과를 3월 말에 메타평가 부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다.

## 라. 메타평가 폐지로 부처 자율에 의한 평가일정 유연화

2018년에는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사업 수행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변화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12월에 평가지침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는 1~4월간 자율적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4월 말까지 평가결과 및 환류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결과의 단순 수치오류, 제출서류 누락, 사실관계 불일치 등 기본 오류를 확인·수정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실에 송부하며, 각 부처는 5월 20일경에 평가기준, 절차,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즉, 메타평가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의 평가 확인·점검 역할이 기존보다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평가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나 부처의 자체평가 기간은 다소 늘어났다. 또한 상위기관의 확인·점검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평가일정이 부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등 완전한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사업 자율평가 주요 일정을 도식화하면 [표 II-1]과 같다.

36 해당 내용은 일반재정(정보화) 사업 기준으로, R&D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6월)를 거쳐 7월 중에, 지역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5월)를 거쳐 5월 말에 평가결과가 완료되었다.

〈표 II-1〉 재정사업 자용평가의 평가일정 변화

연도	반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FY2004)	기회예산처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의견수렴 및 도입준 비	지침 통보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06년 (FY2005)	기회예산처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07년 (FY2006)	기회예산처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08년 (FY2007)	기회예산처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09년 (FY2008)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0년 (FY2009)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1년 (FY2010)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2년 (FY2011)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3년 (FY2012)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4년 (FY2013)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5년 (FY2014)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6년 (FY2015)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7년 (FY2016)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2018년 (FY2017)	기획재정부 부처	지침 통보	지침 교육	자용평가 실시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자용평가결과 확인· 점검 정기(매타평가 방식)	이의제기	결과 확인	결과 확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결과 확인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용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3. 평가대상 .....	77
가. 평가대상 사업 .....	77
나. 평가단위 .....	80
다.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	82
라. 평가 제외대상 .....	83
마. 평가대상 사업 수 .....	88



### 3. 평가대상

#### 가. 평가대상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원칙은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으로, 2005~2018년 기본적으로 동일하였으나 평가단위나 평가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예시 등이 일부 변화하였다. 매년 지침에 제시된 연도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II-2> 2005~2018년 연도별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같다.

<표 II-2> 2005~2018년 연도별 대상사업 선정기준

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적용제외 사업)은 제외</li> <li>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세세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원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포함</li> </ul> </li> <li>세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li> </ul> </li> <li>전체 평가대상 사업 중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금년도 평가대상 30% 내외 사업을 선정(사업비·사업 수 동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도 및 2006년도 신규사업은 평가대상에 미포함</li> </ul> </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적용제외 사업)은 제외</li> <li>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세세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억원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포함하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합쳐서 평가할 경우는 합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li> </ul> </li> <li>세세항(기금의 경우 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프로그램 또는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li> </ul> </li> <li>전체 평가대상 중에서 2005년도 기평가사항을 제외하고, 금년도 평가대상 1/3수준 사업을 선정(사업비·사업 수 동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도 및 2007년도 신규사업은 평가대상에 미포함</li> </ul> </li> <li>2005년도 기평가사업 중 성과정보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평가(Re-assessment)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되는 성과정보의 관리를 위해 과거 평가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도 자료를 관리</li> <li>-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업선정 시 기평가사업 중 부처에서 희망하는 재평가 사업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표 II-2〉의 계속

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li> </ul> </li> <li>• 2005년도 또는 2006년도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 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 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li> </ul> </li> <li>• 2005~2007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 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 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li> <li>• 2005~2008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 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 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li> <li>• 2008~2009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 중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하여 기평가결과를 조정(수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결정</li> </ul> </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개발계정사업은 제외</li> </ul> </li> <li>-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li> <li>• 2009~2010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으로서 평가주기가 미도래 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개선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수정평가 가능</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중 지역개발계정사업은 제외</li> </ul> </li> <li>-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li> <li>• 2010~2011년 기간 동안에 평가를 받은 사업(기평가사업)으로서 평가주기가 미도래 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성과달성도 개선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수정평가 가능</li> </ul>

〈표 II-2〉의 계속

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13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대상</li> <li>• 기평가사업으로서 평가주기 미도래 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등 성과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평가 가능</li> <li>- 수정평가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와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 제외 가능</li> <li>- 자율평가결과 전년도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사업구조개선 등의 제도개선 대책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이행 점검을 위해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수정평가를 실시</li> <li>*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 평가는 부처 판단하에 수정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2016년 평가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li> <li>-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지속 부과(예산 10% 이상 삭감 등)</li> <li>• 기평가된 사업으로서 평가주기 미도래 시에도 성과지표 보완 등 성과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수정평가 가능</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li> <li>-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1/3(3년 주기)씩 실시하던 평가를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li> <li>- 다만, 부처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에는 전체 재정사업의 1/2을 평가하고,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li> <li>-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에 1/3(3년 주기)씩 실시하던 평가를 2017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 재정사업이 자율평가 대상</li> <li>- 다만,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R&amp;D, 재난안전, 지역발전 사업 및 복권기금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지침에 따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li> <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위원회, 복권위원회</li> <li>** 단, 보조금 평가, 핵심사업 평가, 심층평가 대상은 제외대상 아님</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에는 50%, 2017년에는 모든 재정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였다.<sup>37</sup>

재정사업 중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건비, 기본사업비 중 경상적인 행정경비,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 교부금,

37 2016, 2017년에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메타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되어 대상사업 수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장교육재정 교부금 등), 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들이다.

한편 2006년부터 기평가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도 등 성과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재평가(Re-assessment)<sup>38</sup> 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성과정보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유는 여타 사업과의 중복·유사성 해소, 재원분담 방식 등 사업방식 개선, 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 개선, 사업집행과정 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평가 실시 및 성과분석, 사업의 성과달성도 향상 등이며, 수정평가대상 사업은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자율평가를 실시한 평가 대상기관은 2005년 기준으로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부처(555개 사업, 약 35조원 수준)이며, 2017년 기준으로는 50개 부처(1,415개 사업, 약 116.1조원 수준)의 사업이 평가되었다.

## 나. 평가단위

2005년, 2006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세세항’<sup>39</sup>이라는 예산과목기준으로 평가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세세항 기준)으로 하며, 세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의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바뀌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 예산과목기준의 ‘세세항’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에 따라 단위사업 등을 평가단위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05.4)에 제시되어 있다.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예산시스템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별 예산제도를 시행하였다. 2006년 예산안부터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반재정 평가대상 사업을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 필요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개편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38 ‘재평가’라는 용어는 2005년, 2006년에 사용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수정평가’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39 2006년까지는 투입 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용하여 세세항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단위로 사용하였으나,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Program) 예산체제로 2006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함(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5. 3. 29)).

〈참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편 내용(2006년)

■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 예산체계가 「분야-부분-프로그램-단위사업-목」으로 전면 개편
- 과거 품목별 예산체계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복잡한 체계였던 반면, 현재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부분-프로그램-단위사업-목-세목」의 단순한 체계
  - \* 여기서 프로그램의 수는 800여 개로 구성하며, 1,000개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 과정의 기본단위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 과거와 달리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과 기금을 통합하여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를 갖도록 설계
- 프로그램(Program)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Activities)을 한데 묶어 놓은 것
  -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항' 또는 '세항' 정도의 분류에 해당되나, '항'보다는 구체적이면서 정책적으로 상호 간에 구분되는 사업단위를 의미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프로그램을 자원배분 결정의 기준단위로 활용
  - Top-down 예산편성 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획예산처와 부처 간의 협의·조정 기준단위로 활용
- 단위사업(Activity)이란, 품목별 예산제도상의 세세항을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사업성격별로 묶어서 만든 사업단위로 현 예산체계 및 예산 심의 시 자원배분의 최소단위로 활용
  -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평가실익이 있도록 필요시 사업을 재조정

〈표 II-3〉 예산체계의 변화

전통적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예산구조	기능별	장: 28개	기능별	분야: 16개	
		관: 76개		부분: 68개	
	조직별 사업별	항: 963개	사업별	프로그램: 771개	
		세항: 2,413개		단위사업: 3,413개	
		세세항: 8,041개			
	성질별	목: 49개	성질별	목: 23개	
세목: 102개		세목: 90개			
주요 특징	- 회계, 기금별 편제 - 자원투입과 재정집행에 대한 통제지향		- 정책중심의 편제 - 성과 위주의 전략적 자원배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06), 『프로그램 예산제도 활용매뉴얼』 p.6 재인용.

## 다.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2005년 첫 해에는 평가 필요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평가대상 사업의 30%를 선정하였다. 2006년에는 전년도 기평가사항을 제외하고 평가대상 1/3 수준의 사업을 선정(사업비, 사업 수 동시 고려)하였으며, 2007년에는 나머지 1/3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한 주기의 평가를 완료하였다. 두 번째 평가주기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첫 번째 주기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평가대상 1/3 수준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성과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단위사업들을 가급적 한 해에 평가받도록 하고, 상위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점검<sup>40</sup>도 추가하였다.

2016년 통합재정사업 평가 시에는 최근 2년(2014~2015년 평가) 내에 평가받지 않은 사업을 위주로 2015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관리 대상사업 수 기준 50% 수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II-4〉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지역R&D)
평가 단위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사업
평가대상 사업 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50%	연구성과평가방법상의 성과목표 지표 점검 대상사업 수의 50%	성과계획서상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수의 100%

출처: 기획재정부(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2017년 평가대상 사업은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 대상 전체(각 분야별 평가 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를 선정하였다.

40 그동안 부처 사업담당자들은 평가대상인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에만 관심을 두고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에는 관심과 책임성이 부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단위사업의 상위 목표인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 제고 노력을 위해, 평가대상 단위사업의 상위 성과목표 미달성시 4-1. 성과달성(배점: 30점) 부분에서 5점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표 II-5〉 20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지역R&D)
평가 단위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평가대상 사업 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전체	성과계획서상의 과제코드가 R&D로 분류되는 단위사업 전체(지역발전특별회계 제외)	성과계획서상의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전체

출처: 기획재정부(2017),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 라. 평가 제외대상

구체적인 평가대상 제외기준은 연도에 따라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인건비, 기본경비 및 소액사업(10억원 미만)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일반재정부분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가대상 제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가제외 사업들을 예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연도별 적용제외 사업 외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부처가 협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6〉 2005~2018년 연도별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연도	평가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기본사업비 중 경상적인 행정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경상적인 행정경비가 아닌 주요 사업비 성격의 기본사업은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적용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경상경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이 완료된 이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평가</li> </ul> </li> </ul> </li> <li>•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부금,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평가(행자부) 대상에 포함</li> </ul> </li> <li>• 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지출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li> <li>• 기금의 경우 아래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7개 기금(2004.12월 기준) 중 평가의 실익이 미약한 15개 기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정성기금(4개): 정부내부 간 거래, 국제발행, 차입금 변제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음</li> <li>* 금융성기금(9개): 보증수수료환급 등 사유발생 시 당연히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평가의 실익이 적음. 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가능</li> <li>*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기금(2개): 군인연금기금, 쌀소득보전기금</li> </ul> </li> </ul> </li> </ul>

〈표 II-6〉의 계속

연도	평가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적용대상 기금 사업 중 다음 사업은 평가의 실익이 미약함에 따라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관리비(1100항대), 사업운영비(1200항대) 등 인건비, 조직운영경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부수적 경상운영비</li> <li>- 정부내부지출(7100항대), 여유자금 운용(7300항대) 등 내부거래 성격의 사업</li> <li>- 차입금 원금상환(8100항대), 차입금 이자상환(8200항대)</li> </ul> </li> <li>※ 성과관리 적용이 어려운 법정지원금, 의무지출(5000항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기관별로 자율 판단</li> </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 적용제외 사업과 동일</li> </ul>
2007 ~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기본사업비 중 경상적인 행정경비</li> <li>●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li> <li>● 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지출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li> </ul>
2010 ~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li> <li>●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li> <li>●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li> <li>● 정보화사업 평가 제외 기준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li> <li>-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아래 간접비 성격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 교체, 시스템운영 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통신 회선료(전용망 사용료 등),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직원 정보화 교육 경비</li> </ul> </li> </ul> </li> </ul>
2012	<p>〈사업별 평가 제외 기준(예시)〉</p> <p>[일반재정사업]</p> <p>인건비, 기본경비, 기금운영비, 국제기구분담금,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p> <p>[정보화 사업]</p> <p>단순 PC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 교체,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p> <p>※ 구체적인 평가대상 사업은 재정부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p>

〈표 II-6〉의 계속

연도	평가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2013	<p>〈사업별 평가제외 기준(예시)〉</p> <p>[일반재정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지역개발계정사업,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예: 통계조사비, 고지서 발송), 부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 혁신도시 이전), 조직 내부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 동일한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운영평가)를 받는 경우, 정책수립 지원업무(예: 경제정책 조정지원, 문화정책 개발), 국가시험 운영·정부내 평가관련 사업, 부처 내 조직운영(예: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 예비비 성격인 사업, 소액사업(10억원 이하) 등</p> <p>[정보화 사업]                      단순 PC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 등(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단 소액사업(10억원) 기준 미적용</p>
2014	<p>〈사업별 평가제외 기준(예시)〉</p> <p>[일반재정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중 지역개발계정사업,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예: 통계조사비, 고지서 발송), 부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 혁신도시 이전), 조직 내부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 동일한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운영평가)를 받는 경우, 정책수립 지원업무(예: 경제정책 조정지원, 문화정책 개발), 국가시험 운영·정부 내 평가관련 사업,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 예비비 성격인 사업, 소액사업(10억원 이하) 등</p> <p>[정보화 사업]                      단순 PC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 등(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 단 소액사업(10억원) 기준 미적용</p>
2015	<p>〈사업별 평가제외 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舊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li> <li>•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기본행정경비·소규모 전산운영경비·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비</li> </ul>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화

〈표 II-6〉의 계속

연도	평가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li> <li>•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도를 포함하여 평가연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는 완료사업</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사업</li> <li>-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평가대상)</li> <li>- 복권기금 사업으로 복권기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li> <li>- 특정 사업이 아닌 기관운영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운영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li> <li>-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회의나 심의·의결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을 위한 정책수립지원 등의 운영사업</li> <li>- 국가시험 운영·정부 내 평가관련 사업</li> <li>-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li> <li>-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차지원금(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제외)</li> <li>- 법정교부금, 체당금, 보상금, BTL 정부지급금, 최소운영수입 보전금(MRG), 반환금, 국제기구분담금</li> <li>- 10억원 이하의 소액사업(단,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미적용)</li> <li>- 정보화사업으로서 단순 PC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보급·교체,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용, 직원 정보화교육 경비 등)</li> </ul> </li> </ul>
2016	<p>〈일반재정(정보화), 지역사업 평가대상 제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으로 사업 착수 2년 이하 사업</li> <li>•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 기본행정경비·소규모 전산운영경비·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비</li> <li>•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li> </ul>

〈표 II-6〉의 계속

연도	평가 적용제외 사업 선정기준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연도를 포함하여 평가연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는 완료사업</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사업</li> <li>-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평가대상)</li> <li>- 특정 사업이 아닌 기관운영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운영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li> <li>-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회의나 심의·의결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의 운영사업</li> <li>- 국가시험 운영·정부 내 평가관련 사업,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li> <li>-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차지원금(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제외)</li> <li>- 법정교부금, 체당금, 보상금, BTL 정부지급금, 최소운영수입 보전금(MRG), 반환금, 국제기구분담금</li> <li>- 10억원 미만(정보화사업은 5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li> </ul> </li> <li>○ 전년도 재정사업평가 결과 ‘우수’ 등급 사업 제외(단,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적용 부처 및 지역 사업은 전년도 ‘우수’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li> </ul>
2017	<p>〈일반재정·정보화, 지역사업 평가대상 제외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으로 사업착수 2년 이하 사업</li> <li>•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 기본행정경비·소규모 전산운영경비·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교직원)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li> </ul> </li> <li>•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만으로 구성된 사업</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사업</li> <li>•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시행연도를 포함하여 평가시행연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는 완료사업</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사업</li> <li>- 청사시설 확충·개선사업, 청사관리비용(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평가대상)</li> <li>- 특정 사업이 아닌 기관운영 사업으로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운영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li> <li>-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및 자문회의나 심의·의결기구 등의 자문비 지급, 회의비용 지출 등의 운영사업</li> <li>- 국가시험 운영·정부 내 평가관련 사업</li> <li>- 매년 지급되는 기관운영 출연금사업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사업</li> </ul> </li> </ul> <p>* 다만 기관운영 출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운영 성격이 아닌 사업비가 포함되어 그 규모가 소액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p>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일몰제 편성사업

제2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화

〈표 II-6〉의 계속

연도	평가 적용제의 사업 선정기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내 조직 운영,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운영 사업</li> <li>- 대출금 또는 원금상환, 이차지원금(사업성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제외)</li> <li>- 법정교부금, 체당금, 보상금, BTL 정부지급금, 최소운영수입 보전금(MRG), 반환금, 국제기구분담금</li> <li>-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정보화사업은 5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li> <li>- 조직 내부교육 및 행정관리 업무, 직원 복지 등 부처 공통 행정지원 프로그램(단, 부처 고유사업인 경우는 평가대상)</li> <li>- 고시비용, 고지서 등 발송비용, 공공요금 및 수수료, 활동비 등 행정절차 및 행정이행에 소요되는 경상경비</li> <li>- 기초설계, 중장기 기본(전략)계획 수립 등 사전 계획수립 업무</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기본경비 및 소액사업(10억원 미만)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름)</li> <li>○ 기타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회계연도 또는 이전에 사업이 종료된 완료사업</li> <li>- 단위사업 내 일부 세부사업이 평가대상 제외 사업으로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만으로는 평가실익이 없는 경우*</li> </ul> </li> </ul> </li> <li>* 제외대상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1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거나 인건비·기본경비 사업만 남은 경우 등</li> <li>- 기관운영 사업으로 별도 기관평가책임운영기관 평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제외 대상 사업이라도 소관부처 재량에 따라 평가 가능</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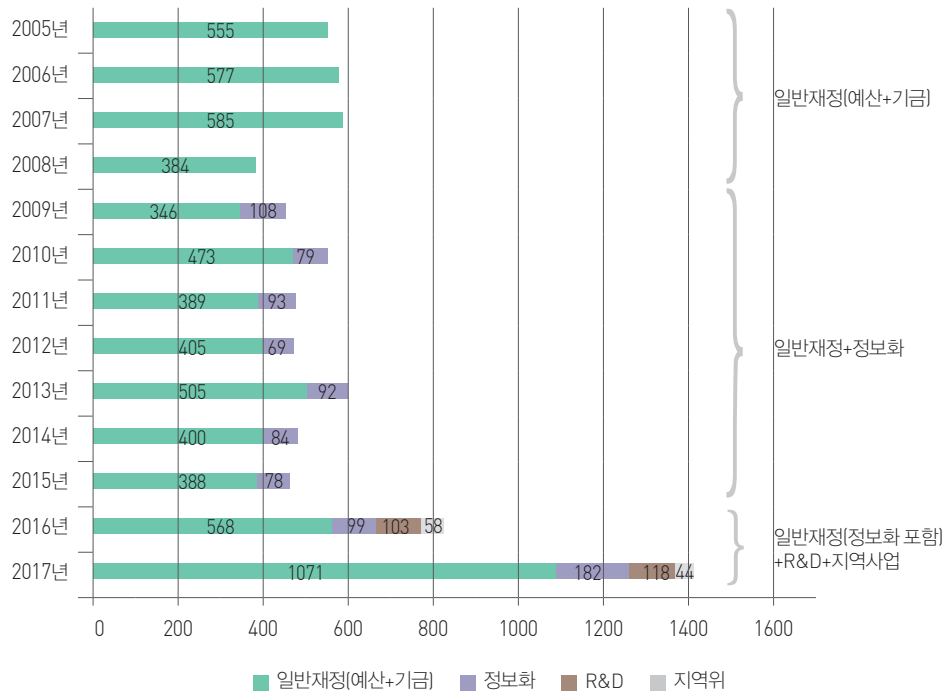
## 마. 평가대상 사업 수

2005년부터 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대상 사업 수는 [그림 II-4]와 같다. 평가대상 사업 수는 매년 발표하였던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관련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그림 II-4]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대상 사업 수가 연도에 따라 차이가 큰데 이는 제도의 변화 및 분야별 소관 담당부처의 변화에 따라 일반재정 사업 이외 정보화, R&D,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사업의 포함 여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단위의 변화나 전체 평가대상의 몇 %를 그 해의 평가대상에 포함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평가대상 사업 수의 변화를 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II-4] 2005~2017년 자율평가 평가대상 사업 수

(단위: 개)



출처: 각 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관련 보도자료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평가대상 사업 수에서 분야별 포함 여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반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의 일반재정사업만 포함된 것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일반재정사업과 더불어 정보화사업까지 포함한 평가대상 사업 수이다. 2016년과 2017년은 통합 재정사업평가로 인해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하게 되어, 일반재정, 정보화, R&D, 지역사업의 평가대상 사업 수를 모두 합친 것이다.

평가대상 사업 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50개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다 2008년에 대상 사업 수가 384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시행(2006년)으로 사업단위를 세세항에서 단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평가대상단위가 조정된 것에 기인한다.

이후 2009년에는 454개로 사업 수가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총괄기관이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바뀌면서 정보화사업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담당하고 결과까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실시로 일반재정 및 정보화사업 이외에도 R&D, 지역사

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쳐서 발표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50%를 평가대상으로 한 것으로 828개에 해당하며, 2017년에는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100% 평가하도록 하여 1,415개에 이르게 되었다.

〈표 II-7〉 연도별·분야별 자율평가 평가대상 사업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개수	555	577	585	384	454	552	482	474	597	484	466	828	1,415	
분야	일반재정	555	577	585	384	346	473	389	405	505	400	388	568	1,071
	정보화	-	-	-	-	108	79	93	69	92	84	78	99	182
	R&D	-	-	-	-	-	-	-	-	-	-	-	103	118
	지역위	-	-	-	-	-	-	-	-	-	-	-	58	44

주: 1. 일반재정 이외의 정보화, R&D, 지역위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성과관리담당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타 분야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한 시점부터 자율평가 대상사업 수에 포함하여 제시함.

2. 일반재정 평가대상 사업 수는 일반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수를 합친 숫자임.

출처: 각 연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관련 보도자료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4. 평가지표 .....	92
가. 부처 자율평가의 공통지표 .....	92
나. 부처 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부문별 평가지표 .....	98
다. 메타평가 지표 .....	102



## 4. 평가지표

### 가. 부처 자율평가의 공통지표

제도 도입 초기의 자율평가 지표는 크게 계획·성과계획 / 집행 / 성과·환류 3개 영역으로 구분된 공통지표에 사업유형별로 특성화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도가 안정화에 접어드는 2011년까지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유지되어 왔다. 2012년 평가부터는 사업유형별 특성화 지표가 폐지되고, 사업을 일반재정, 정보화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보화 부문 특성화 지표를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2016년에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되면서 공통지표가 관리 / 결과 2개 영역하에 대폭 축소되고 일반재정, 지역발전, 정보화, R&D 부문별로 특성화된 가점지표를 설정하는 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2017년까지 유지되다가, 메타평가가 폐지되고 부처의 완전한 자율평가가 시행되는 2018년부터는 평가지표 구성을 부처 자율에 맡기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표 II-8〉공통지표의 영역별 질문 수 및 배점 변화

(단위: 개, 점)

구분	계획	성과계획	집행 / 관리 <sup>1)</sup>	성과·환류 / 결과 <sup>2)</sup>	합계
2005	4 (15)	3 (15)	4 (20)	4 (50)	15 (100)
2006	4 (15)	3 (15)	4 (20)	4 (50)	15 (100)
2007	4 (15)	3 (15)	4 (20)	4 (50)	15 (100)
2008	3 (15)	2 (15)	4 (20)	4 (50)	13 (100)
2009	2 (15)	2 (15)	4 (20)	3 (50)	11 (100)
2010	3 (15)	2 (15)	3 (20)	4 (50)	12 (100)

〈표 II-8〉의 계속

구분	계획	성과계획	집행 / 관리 <sup>1)</sup>	성과·환류 / 결과 <sup>2)</sup>	합계
2011	2 (10)	2 (10)	3 (30)	3 (50)	10 (100)
2012	3 (10)	2 (10)	3 (30)	3 (50)	11 (100)
2013	3 (10)	2 (10)	3 (30)	3 (50)	11 (100)
2014	3 (10)	2 (10)	3 (30)	3 (50)	11 (100)
2015	3 (10)	2 (10)	3 (30)	3 (50)	11 (100)
2016			2 (60)	2 (40)	4 (100)
2017			1 (30)	2 (70)	3 (100)

주: 1. 괄호 안은 영역별 배점을 의미.

1) '집행' 영역이 2009년에 '관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지표 내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음.

2) '성과·환류' 영역은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도입과 함께 '결과' 영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지표 내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음.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8〉에서와 같이 2005년 제도 도입 시기의 공통 평가지표는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의 타당성,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성과계획' 영역(30점, 7개), ②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여부, 재원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점검하는 '집행' 영역(20점, 4개), ③ 사업평가 실시 여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제도 개선 및 예산편성에 의 환류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환류' 영역(50점, 4개)으로 구성된 총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200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2008년에 '계획·성과지표' 영역에서 사업목적의 명확성, 성과목표·지표의 인과성을 측정하는 2개 지표가 축소되어 총 13개 지표로 감소되었다.

한편 2009년에는 '계획·성과지표' 영역과 '성과·환류' 영역에서 각 1개 지표씩(정부 재정 지출의 필요성, 고객 및 이해관계인 만족도) 축소되면서 11개 지표로 간소화되었다. 또한 '집행' 영역의 명칭이 '관리' 영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영역 내 지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에는 ‘계획·성과지표’ 영역에서 2008년에 삭제되었던 사업목적의 명확성 지표가 다시 추가되고, ‘관리’ 영역에서 모니터링 관련 지표와 문제점 개선 관련 지표가 통합되는 등의 변화를 거쳐 공통지표 개수가 12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에 ‘성과·환류’ 영역에 있던 사업평가 실시 여부 지표가 ‘관리’ 영역으로 이동하고, ‘성과·환류’ 영역에 성과지표 목표치 관련 지표가 신설되는 등 지표 내용에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이후 2011년에 ‘계획·성과지표’ 영역에서 사업목적의 명확성 관련 지표와 추진방식의 효율성 관련 지표가 통합되고, ‘관리’ 및 ‘성과·환류’ 영역에서 사업평가 실시 여부 관련 지표의 삭제, 효율성 제고 관련 지표의 영역 이동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 공통지표 수가 10개로 확정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계획·성과계획’ 영역보다 ‘관리’ 영역에 더 큰 배점을 부여하면서 자율평가가 예산 집행, 사업추진 과정상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에는 다시 ‘계획·성과지표’ 영역에서 사업목적의 명확성 관련 지표와 추진방식의 효율성 관련 지표가 분리되면서 11개로 늘어났고 이러한 구성은 2015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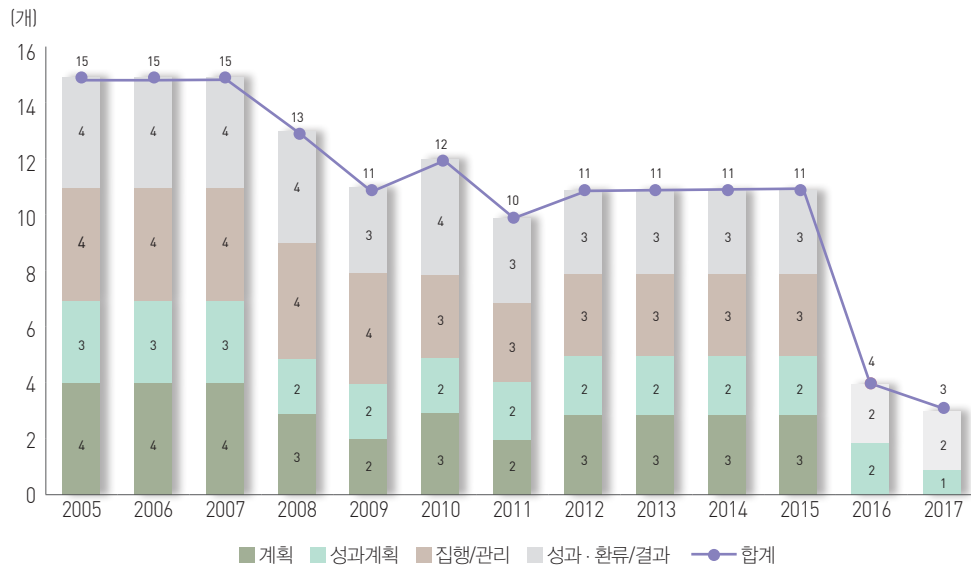
한편 2016년도에 통합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계획·성과계획 / 관리 / 성과·환류 3개 영역 11개 지표였던 공통지표를 관리 / 결과 영역의 4개 지표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즉 사업목적,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과 관련된 ‘계획’ 단계의 지표가 모두 삭제되고, 예산 집행, 문제점 대응 등을 점검하는 ‘관리’ 영역(60점, 2개 지표)과, 목표 달성 여부, 성과의 우수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결과’ 영역(40점, 2개 지표)으로만 구분하게 되었다. 또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여부, 효율성 제고 노력 수준 등 공통지표로 평가하던 부분들을 일반재정, 지역발전, 정보화 등 부문별 가점지표로 전환하였다.

2017년에는 ‘관리’ 영역에서 문제점 대응 관련 지표를 삭제하여 총지표 수를 3개로 하고, 영역별 배점을 ‘관리’ 영역 30점, ‘결과’ 영역 70점으로 배분하는 등 사업 관리의 적절성보다는 목표 달성 및 성과 우수성 측면에 보다 평가의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후 2018년에는 메타평가 체제가 폐지되고 평가지표 수립부터 평가 시행까지 부처 자율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일원화된 공통지표 없이 부처가 직접 부처별 사업환경에 따른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 II-5]와 [그림 II-6]을 통해, 2005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2017년까지의 공통지표와 관련하여 지표 수, 영역별 배점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공통지표 개수는 영역별로 일부 증감이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역별로는 지표 개수 및 배점의 변화를 통해 ‘계획’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차 감소되고,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성과 및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공통지표 평가지표 개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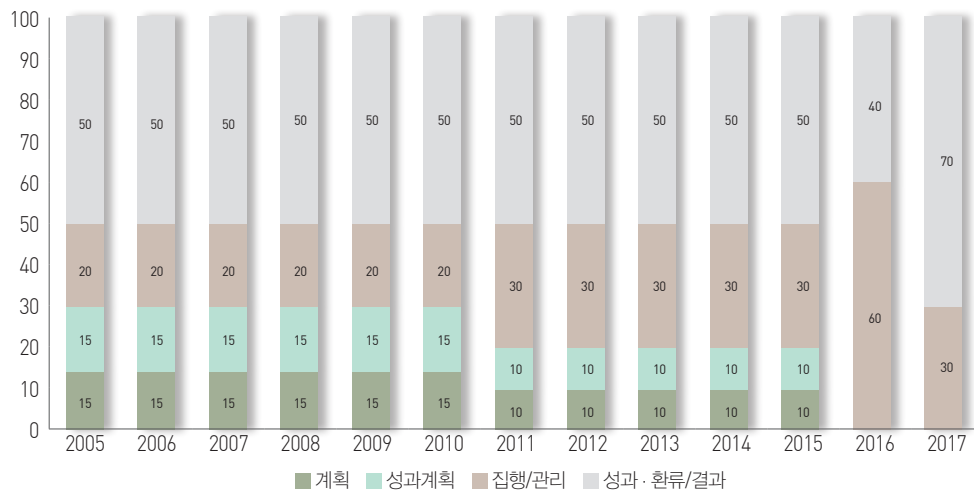
(단위: 개)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6] 공통지표 영역별 배점 변화

(단위: 점)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제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영역별 편성사업

제정 재정사업 자율평가제의  
연도별 추이 변화

한편 연도별로 공통지표의 각 영역별 내용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9>와 같다.

<표 II-9> 연도별 평가지표 내용 변화

(단위: 개)

평가 지표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통지표 수		15	15	15	13	11	12	10	11	11	11	11	4	3		
계획 (사업 계획)	1-1. 사업목적의 명확성	●	●	●	×	×	●	◐	●	●	●	●	×	×		
	1-2. 정부지출의 필요성	●	●	●	●	×	×	×	×	×	×	×	×	×		
	1-3. 유사·중복 해당 여부	●	●	●	●	●	●	●	●	●	●	●	×	×		
	1-4.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	●	●	●	●	●	◐	●	●	●	●	◐	×		
성과 계획	2-1. 성과목표·지표의 구체성	●	●	●	×	×	×	×	×	×	×	×	×	×		
	2-2. 성과목표·지표 간 연계성	●	●	●	●	●	●	●	●	●	●	●	가점	×		
	2-3.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	●	●	●	●	●	●	●	●	●	●	×	×		
집행 / 관리	3-1. 모니터링 운영 실적	●	●	●	●	●	◐	◐	◐	●	●	●	◐	×		
	3-2. 사업추진 중 문제점 해결	●	●	●	●	●	◐	◐	◐	●	●	●	◐	×		
	3-3. 계획된 예산의 집행 여부	●	●	●	●	●	●	●	●	●	●	●	●	●		
	3-4. 집행 효율성 제고 실적	●	●	●	●	●	○	●	●	가점	가점	가점	가점	가점		
성과 · 환류 / 결과	4-1. 객관적, 종합적 평가 실시 여부	●	●	●	●	●	○	×	×	●	●	●	×	×		
	4-2. 평가결과에 의한 효과성 여부	×	×	×	×	×	●	●	●	×	×	×	◐	×		
	4-3. 계획된 목표/성과 달성	●	●	●	●	●	●	●	●	●	●	●	●	●		
	4-4. 성과 우수성	×	×	×	×	×	×	×	×	×	×	×	◐	●		
	4-5. 사업고객의 만족도	●	●	●	●	×	×	×	×	×	×	×	×	×		
	4-6. 평가결과의 환류	●	●	●	●	●	●	●	●	●	●	●	×	×		

주: 1. ●는 한 개의 지표가 존재함, ◐는 다른 지표와 통합되어 존재함, ○은 다른 영역에 해당 지표가 존재함을 의미.

2. 2-2 성과목표·성과지표 간 연계성 항목은 공통지표로 존재하다가 결과지표 설정 관련 가점지표로 변경(FY15)되었으며, 3-4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항목 또한 공통지표의 하나로 존재하다가 가점항목으로 변경(FY12-FY16) 되었음.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계획·성과계획’ 영역은 크게 사업계획과 성과계획으로 구분되는데, 사업계획 영역에서는 사업 목적의 명확성(1-1), 정부지출의 필요성(1-2),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1-3), 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1-4)을 주요 점검사항으로 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중 사업 목적의 명확성은 문항 삭제, 신설, 및 타 지표와의 통합·분리 등을 겪으며 변화하다가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되면서 평가영역에서 ‘계획’ 영역이 제외되면서 삭제되었고, 정부지출의 필요성 지표는 2008년까지 유지되다가 삭제되었다. 한편 성과계획 영역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구체성, 연계성 및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했는데, 이 또한 세부항목에서 문항 삭제, 타 지표와의 통합·분리 등을 통해 변화하다가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되면서 일괄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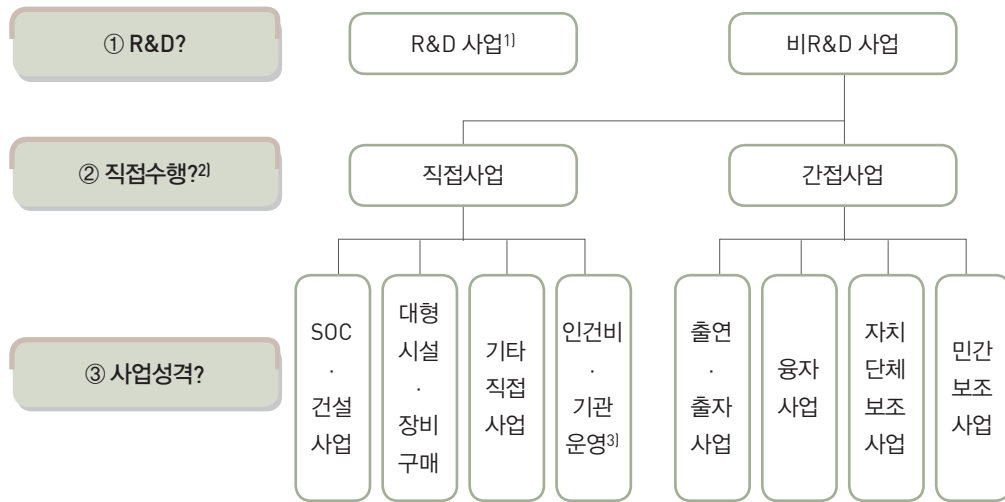
‘집행 / 관리’ 영역에서는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모니터링(3-1) 및 문제점 개선 노력(3-2), 예산 집행 실적(3-3), 효율성 제고 실적(3-4) 등을 주로 확인·점검하고자 했는데, 이 중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는 도입 초기부터 2017년도까지 동일하게 존속하여 왔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실적, 문제점 개선 노력 2개 지표는 통합, 분리를 반복하다가 2017년에 들어서 삭제된 바 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지표는 2013년부터 공통지표에서 제외되고 가점지표로 전환되면서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환류 / 결과’ 영역에서는 객관적·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4-1),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효과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4-2) 확인하는 지표와 함께,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4-3), 성과의 우수성 수준(4-4), 사업고객 및 이해관계인의 만족도 여부(4-5), 평가결과의 환류 여부(4-6) 등을 점검하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 계획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지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2017년까지 변동 없이 존속하면서 해당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기능해왔다. 한편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표와 평가결과에 의한 사업효과성 여부에 대한 지표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삭제 또는 추가되어 왔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환류 지표는 2015년까지 존재하다가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고, 그 대신 성과 우수성을 점검하는 지표가 신설되었다.

## 나. 부처 자율평가의 사업유형별·부문별 평가지표

제도 도입 초기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공통지표와는 별도로 일반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유형에 따라 각 유형별로 특성화된 평가지표를 1~4개까지 설정하여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통지표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II-7]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사업유형 구분



주: 1)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

2) 직접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국가 대행 사업을, 간접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해 지자체·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3)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출처: 기획예산처(2005),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그림 II-7]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적용되었던 사업유형 구분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비R&D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1차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업성격에 따라 각각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건비·기관운영 유형을 제외하고 총 7개 사업유형에 따라 특성화된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각 유형별로 설정된 특성화된 평가지표는 제도 도입 초기의 <표 II-10> 세부질문에서 일부 내용만 삭제·변형되는 식으로 2009년도까지 지속되었다.

〈표 II-10〉 제도 도입 초기의 사업유형별 세부질문

사업유형	세부질문	단계
SOC	1-SOC1. 각종 갈등요인을 점검·조정하고,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계획
	2-SOC1.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집행
	2-SOC2.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가?	집행
	3-SOC1.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였는가?	성과
시설·장비	1-시설·장비1. 시설·장비구매의 적정시점인가?	계획
	2-시설·장비2.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계획
기타 직접	1-기타 직접1.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가?	계획
출연·출자	1-출연·출자1.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계획
	2-출자1.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용자 사업	2-출자2. 자금 대출실적 대비 자금 회수율은 양호한가?	집행
	1-민간 보조1. 다년간 연속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가?	계획
민간 보조	2-민간 보조1.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집행
	2-민간 보조2.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집행
지자체 보조	1-지자체 보조1. 지자체의 사업여건을 검토하였는가?	계획
	2-지자체 보조1. 지자체 단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집행
	3-지자체 보조1.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였는가?	성과

출처: 기획예산처(2005),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2010년도부터는 재정사업을 사업 부문에 따라 일반재정·정보화로 구분하고, 이 중 일반재정 사업을 다시 7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유형별 특성지표에 부문별 특성지표가 가미된 형태로 전환되었다. 특히 정보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별 특성지표가 추가되고, 기존의 SOC 사업유형 명칭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까지 부문별·유형별 특성지표가 유지되다가, 2012년 평가부터는 사업 유형별 특성지표가 공통지표에 흡수되면서 사라지고, 정보화 부문의 부문별 특성지표(정보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노력 등)만 남아있게 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업유형별 특성지표가 사라진 2011년까지의 특성화 평가지표 개수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 II-11〉와 같다.

〈표 II-11〉 사업유형별 특성화 평가지표 개수 변화

(단위: 개)

	SOC(투자) <sup>1)</sup>	시설·장비	기타 직접	출연·출자	용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2005	4	2	1	1	2	3	3
2006	3	2	1	1	2	3	2
2007	3	2	1	1	2	3	2
2008	2	1	0	1	2	2	2
2009	2	1	0	1	2	2	2
2010	2	1	0	1	2	2	2
2011	2	1	0	1	2	2	1

주: 1) 2010년부터 'SOC'사업유형 명칭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구분에 따라 '투자'로 변경.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편 20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되면서 일반재정, 정보화, R&D, 지역사업 등 각 부문별 평가지표를 통합하게 되면서, 특성이 지표 자체가 사라지고 부문별 가점지표의 형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16~2017년간 통합 재정사업 평가하에서의 각 부문별 가점지표 현황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부문별 가점지표 운영현황

부문	평가지표 (배점)	
	2016년	2017년
공통	•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3)	[삭제]
일반재정	•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4)	•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4)
지역발전	•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4)	•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4)
정보화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4)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4)
연구개발 (R&D)	•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1)	[삭제]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2)	[삭제]
	•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1)	•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4)

주: ( )안은 배점임.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성.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체계의 변화 양상은 아래 〈표 II-13〉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다. 메타평가 지표

2015년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이 기존 사업별 전수조사에 메타평가를 도입하였고, 이는 2016~2017년에 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평가방식이 전환되면서 보다 체계화되었다. 메타평가는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이른바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메타평가 지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메타평가 지표는 크게 ① 평가과정의 충실도, ② 평가결과의 적정성, ③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영역인 ‘평가과정의 충실도’에서는 주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실제 운영의 적절성 등 자체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두 번째 항목인 ‘평가결과의 적정성’ 영역은 상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 보고서 양식 준수 여부, 성과계획 준수 여부 등 사전 제시된 평가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전략적 평가 왜곡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영역은 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규모와 적정성, 그리고 환류방안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려는 지표들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각 연도별로 성과정보현황(PI보드) 운영 여부, 성과지표 최우수 부처 선정 등에 따른 가점지표와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점지표 등을 활용하여 부처별 평가 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였다(〈표 II-14〉 참고).

〈표 II-14〉 연도별 메타평가의 평가지표 및 배점 변화(일반재정 기준)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과정의 충실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li> <li>• 평가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 여부</li> </ul>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li> <li>•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절성</li> </ul>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li> <li>•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li> </ul>
평가결과의 적정성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보고서 양식 준수 여부</li> <li>•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준수 여부</li> <li>• 전략적 평가왜곡 여부</li> <li>• 상대평가 준수 여부</li> </ul>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li> <li>• 상대평가 준수 여부</li> </ul>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li> <li>• 상대평가 준수 여부</li> </ul>
지출 구조조정의 적정성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li> <li>• 지출구조조정 규모 달성도</li> <li>•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이행 여부</li> </ul>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구조조정 규모 달성도</li> <li>• 지출구조조정 내역의 적정성</li> </ul>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적정성</li> <li>• 지출구조조정 노력도</li> <li>• 전략적 왜곡 여부</li> </ul>
가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정보현황(PI보드) 운영</li> </ul>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li> </ul>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최우수 부처</li> </ul>
감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각 항목별 배점은 〈표 II-14〉에서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였으며, 평가지표의 개수는 메타평가가 첫 실시된 2015년에는 9개였다가 이후 기존 평가지표로 활용되었던 항목들이 가·감점 지표로 전환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1장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5. 평가결과 산출방식 ..... 105



## 5. 평가결과 산출방식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이다. 즉 미리 설정된 체크리스트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각 질문별로 부여된 배점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점수를 더하여 총점(100점 만점 기준)을 낸 후 점수구간별로 등급화하여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점수는 사업의 효과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100% 만족하는 경우를 100으로 하여 그 상대적 달성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측정된다. 그러나 각 사업들 사이에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 점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총점은 발표하지 않고 사업 간의 비교에 적합한 등급으로 표시되어 발표하여 왔다. 각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점수는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 단계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개선과정에서 평가결과 산출방식도 조금씩 변경되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발간된 지침에 제시된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평가 이후 결과를 종합하고 발표하는 시점에는 다르게 적용된 경우(2005년과 2008년)도 있었다. 구체적인 연도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변화는 아래 <표 II-15>와 같다.

<표 II-15> 2005~2018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변화

연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내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침)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등급</th> <th>효과적</th> <th>다소 효과적</th> <th>보통</th> <th>비효과적</th> <th>결과</th> <th>알수 없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85점 이상</td> <td>84-70점</td> <td>69-50점</td> <td>50점 이하</td> <td>근거자료</td> <td>불충분</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li> <li>(평가결과 후 실제 적용 시)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등급</th> <th>우수</th> <th>다소 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85점 이상</td> <td>84-70점</td> <td>69-50점</td> <td>50점 미만</td> </tr> </tbody> </table> </li> </ul>	등급	효과적	다소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	결과	알수 없음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이하	근거자료	불충분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등급	효과적	다소 효과적	보통	비효과적	결과	알수 없음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이하	근거자료	불충분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표 II-15〉의 계속

연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내용																						
2006 ~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다소 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d> <td>85점 이상</td> <td>84-70점</td> <td>69-50점</td> <td>50점 미만</td> </tr> </tbody> </table>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12월 지침 자료 기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4단계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다소 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d> <td>85점 이상</td> <td>84-70점</td> <td>69-50점</td> <td>50점 미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8.4월 등급 및 점수기준 조정계획 공지 후(공문) 실제 적용 시)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미흡</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d> <td>90점 이상</td> <td>90-80점</td> <td>80-60점</td> <td>60-50점</td> <td>50점 미만</td> </tr> </tbody> </table>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2009 ~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미흡</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d> <td>90점 이상</td> <td>90-80점</td> <td>80-60점</td> <td>60-50점</td> <td>50점 미만</td> </tr> </tbody> </table>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 도입</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우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보통</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미흡</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d> <td>90점 이상</td> <td>90-80점</td> <td>80-60점</td> <td>60-50점</td> <td>50점 미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ad3;">등급 배분</td> <td colspan="2">'우수' 이상 20% 이내</td> <td></td> <td colspan="2">'미흡' 이하 10% 이상</td> </tr> </tbody> </table> <p>(단, 평가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적용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 도입) 부처의 관대화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평가 시부터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등급 이상 20% 이내, '미흡' 등급 이하 10% 이상</li> </ul> </li> </ul>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배분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배분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표 II-15〉의 계속

연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내용																		
2012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 유지</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5 497 1313 634"> <thead> <tr> <th>등급</th> <th>매우 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90점 이상</td> <td>90-80점</td> <td>80-60점</td> <td>60-50점</td> <td>50점 미만</td> </tr> <tr> <td>등급 배분</td> <td colspan="2">'우수' 이상 20% 이내</td> <td></td> <td colspan="2">'미흡' 이하 10%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평가 제외사업 수 기준을 평가대상 사업 수 5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조정</li> </ul>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배분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80점	80-60점	60-50점	50점 미만														
등급 배분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기준 세분화</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5 849 1313 998"> <thead> <tr> <th>등급</th> <th>매우 우수</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 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90점 이상</td> <td>90점 미만~ 80점 이상</td> <td>80점 미만~ 60점 이상</td> <td>60점 미만~ 50점 이상</td> <td>50점 미만</td> </tr> <tr> <td>등급 배분</td> <td>5%</td> <td>15%</td> <td>65%</td> <td>10%</td> <td>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급 등급 간 점수 및 비율을 만족하도록 상대 평가를 실시</li> <li>* 다만,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상대평가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을 최종 확정</li> </ul>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등급 배분	5%	15%	65%	10%	5%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등급 배분	5%	15%	65%	10%	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로 3단계 등급화, '예산 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5 1364 1313 1502"> <thead> <tr> <th>등급</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부처 전체</td> <td>20% 이하</td> <td>65% 내외</td> <td>15% 이상</td> </tr> <tr> <td>분야별</td> <td>10-20%</td> <td>50-65%</td> <td>15-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 전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 전체에 대해 '사업 수'가 아닌 '예산 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준수</li> <li>* 예산액이 큰 하나의 사업이 '우수' 등급이 되어 '우수' 등급 예산규모 기준(2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li> <li>- 평가사업 수가 8개 미만이거나 사업 간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부처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li> <li>* 사업 수가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li> </ul> </li> </ul>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분야별	10-20%	50-65%	15-30%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분야별	10-20%	50-65%	15-30%																

〈표 II-15〉의 계속

연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내용												
2017	<p>• 사업별로 3단계 등급화, '예산 규모(2016년 예산) 및 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p> <table border="1" data-bbox="511 538 1263 676"> <thead> <tr> <th>등급</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부처 전체</td> <td>20% 이하</td> <td>65% 내외</td> <td>15% 이상</td> </tr> <tr> <td>분야별</td> <td>10-20%</td> <td>50-65%</td> <td>15-30%</td> </tr> </tbody> </table> <p>• (부처 전체)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기준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상대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정상적인 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전협의(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가능</li> <li>※ 각 부처의 부처 전체 상대평가 준수 기준이 예산규모인지 사업 수인지, 양 조건 동시충족인지의 여부는 공문의 (붙임4) 각 부처 및 분야별 상대평가 기준표(부처 전체)에 따름</li> <li>-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준수</li> <li>* 예산규모가 큰 하나의 사업이 '우수' 등급이 되어 '우수' 등급 예산규모 기준(20%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li> <li>- 평가사업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적용이 곤란한 부처는 '사업 수' 기준만 적용</li> </ul>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분야별	10-20%	50-65%	15-30%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분야별	10-20%	50-65%	15-30%										

〈표 II-15〉의 계속

연도	평가결과 산출방식의 내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평가)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100점 만점 ± 가감점)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li> <li>• (대상사업 수 10개 이상 부처 분야에 상관없이 전체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규모도 상대평가 준수 권고]) <table border="1" data-bbox="565 687 1313 825"> <thead> <tr> <th>등급</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부처 전체</td> <td>20% 이하</td> <td>65% 내외</td> <td>15% 이상</td> </tr> <tr> <td>일반재정 분야</td> <td>10-20%</td> <td>50-65%</td> <td>15-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 지침의 평가대상인 일반재정 분야만 상대평가 비율 준수(R&amp;D, 재난 안전, 지역 발전 사업 등 평가제외 대상은 해당 평가지침에 따름)</li> <li>-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준수</li> <li>• (대상사업 수 10개 미만 부처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인 부처의 경우에는 별도 상대평가 기준 적용 (2018년 지침 참고 1))</li> </ul> </li> </ul>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일반재정 분야	10-20%	50-65%	15-30%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부처 전체	20% 이하	65% 내외	15% 이상										
일반재정 분야	10-20%	50-65%	15-30%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작 해인 2005년의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2005년 4월에 발행된 지침에 의하면 총점이 85점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적', 70~84점은 '다소 효과적', 50~69점은 '보통', 50점 이하는 '비효과적',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과를 알 수 없음(Results Not Demonstrated)'의 총 5단계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 PART<sup>41</sup>의 평가결과 산출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결과를 알 수 없음(Results Not Demonstrated)' 등급의 경우는 사업의 결과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성과지표나 성과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성과관리제도가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성과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는 등급별 명칭을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바꾸었으며, '결과를 알 수 없음' 등급은 폐지하였다. '결과를 알 수 없음'

41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2년부터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사업의 20% 씩 5년 주기로 평가하였다.

등급의 폐지 이유는 자율평가는 근거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정보가 부족하여 '미흡' 등급이 나온다면 각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정보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까지는 '우수(85점 이상)', '다소 우수(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 4단계로 적용하다가 2008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5단계로 산출하였다.

당초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07.12월)에는 2007년과 마찬가지로 4단계 등급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각 부처 세출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2005~2007년에 걸쳐 각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한 번씩 평가가 완료되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등급별 평가점수 조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침상 제시된 4단계 등급과 달리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자율평가 평가등급과 점수기준 조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공지하였다.<sup>42</sup>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는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상의 내용(아래 내용 참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참고〉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상 관련 내용

-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
- '보통' 등급 사업 중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치 않음
-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 5단계로 산출방식은 향후 몇 년간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42 기획재정부는 2008년 4월 각 부처 재정담당관에게 공문을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가 4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됨을 공지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점수에 따른 등급 부여로 절대평가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기획재정부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다보니 부처의 자체사업에 대한 관대한 평가로 인해 ‘우수’ 이상의 등급으로만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부처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부처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정착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부처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당국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자체평가의 관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1년에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총점에 따른 5단계 등급화와 더불어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수’ 기준으로 등급 간 일정비율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등급에 대한 배분비율은 기관 자체평가 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2011.4.7.일자)에 따르면 2007~2009년간 자체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 비율이 88.8%,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이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1년 실제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의 등급 분포를 살펴본 결과, ‘우수’ 이상 등급 비율은 43%, ‘미흡’ 이하 등급은 5.4%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는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년도와 평가결과 산출방식은 동일하나, 상대평가 제외사업 수 기준을 사업 수 5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하여 적용상 어려움을 완화하였다.

2015년에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의 등급배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매우 우수(90점 이상)’의 경우 등급배분 비율은 5%, ‘우수(90~80점)’의 경우 등급배분 비율은 15%, ‘보통(80~60점)’의 경우 등급배분 비율은 65%, ‘미흡(60~50점)’의 경우 등급배분 비율은 10%, ‘매우 미흡(50점 미만)’의 경우 등급배분 비율은 5%로 등급 간 점수와 비율을 맞추도록 하였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상대평가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을 최종 확정하기로 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2016년부터는 통합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을 실시한 해로, 평가대상 사업을 상대평가하여 ‘예산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5단계(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로 등급화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2016년 분야별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참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 분야별 상대평가 관련 내용

- ‘분야별 상대평가는 분야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하여 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 각 분야별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우수(10~20%), 보통(50~65%), 미흡(15~30%) 범위 내에서 특정 분야로의 등급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을 부여해야 함. 이때 ‘우수’ 비율은 분야별 사업예산의 최소 10%를, ‘미흡’ 비율은 최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다만 각 분야에서 사업 수가 3개 이하인 분야는 분야별 상대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야별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처 전체 차원의 상대평가 대상에는 포함해야 함. 예를 들어 사업 수가 일반재정 5개, R&D 4개, 지역사업 2개로 총 11개인 부처의 경우, 분야별 상대평가에서는 일반재정, R&D의 9개 사업만 적용대상이 되고 지역사업 2개는 적용 제외되나 부처 전체 차원에서는 11개 사업 모두 상대평가 적용대상이 됨.
- 부처 전체 차원에서는, 우선 각 분야별(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지역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보통/미흡 등급 후보군을 바탕으로 부처 차원의 등급을 확정하도록 하였음. 이때 ‘우수’ 등급은 전체 사업예산의 20% 이하까지 줄 수 있고, ‘미흡’ 등급은 전체 사업예산의 15% 이상 주어야 함.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대상 사업은 자연히 ‘보통’ 등급으로 결정됨. 예를 들어 A부처의 전체 평가대상 사업 예산이 1,000억원인 경우 ‘우수’ 등급 사업들의 예산 합계액은 200억원 이하여야 하고, ‘미흡’ 등급 사업들의 예산 합계액은 150억원 이상이어야 함.
- 단, 평가사업 수가 8개 미만이거나 사업 간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부처의 경우에는, 메타(상위)평가 부처와의 협의 및 메타(상위)평가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몇 개의 사업을 우수/보통/미흡으로 줄 것인지 역시 결정됨.

출처: 기획재정부(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내용 참고.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대상사업을 ‘예산규모(2015년 예산)’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였던 것과 달리 ‘예산규모(2016년 예산)’와 ‘사업 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게 하였다. 이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과 부처의 전략적 왜곡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분야별 상대평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참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참고〉 2017년 통합 재정사업 분야별 상대평가 관련 내용

- 분야별 상대평가는 분야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로(일반재정, R&D, 지역사업)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 모두에서 '우수'와 '미흡'의 상대평가 비율은 각각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부처 전체 차원에서는, 우선 각 분야별(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지역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보통/미흡 등급 후보군을 바탕으로 부처 차원의 등급을 확정하면 됨.
- 이때 '우수' 등급은 전체 사업예산과 사업 수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의 20% 이하까지 줄 수 있고, '미흡' 등급은 15% 이상 주어야 함.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대상 사업은 자연히 '보통' 등급으로 결정됨. 예를 들어 A부처의 전체 평가대상 사업 예산이 1,000억원, 사업 수는 100개인 경우 '우수' 등급 사업들의 예산 합계액은 200억원 이하, 사업 수는 20개 이하 이어야하고, '미흡' 등급 사업들의 예산 합계액은 150억원 이상, 사업 수는 15개 이상이어야 함.
- 단, 평가사업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사업 간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곤란한 부처의 경우에는, 메타(상위)평가 부처와의 협의 및 메타(상위)평가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몇 개의 사업을 우수/보통/미흡으로 할 것인지 역시 결정됨.

출처: 기획재정부(2016),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지침」 내용 참고.

2018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100점 만점 ± 가감점)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전체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되,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규모도 상대평가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6. 평가결과	115
가. 2005~2007년 평가결과	115
나. 2008~2010년 평가결과	120
다. 2011~2015년 평가결과	125
라. 2016~2018년 평가결과	136



## 6.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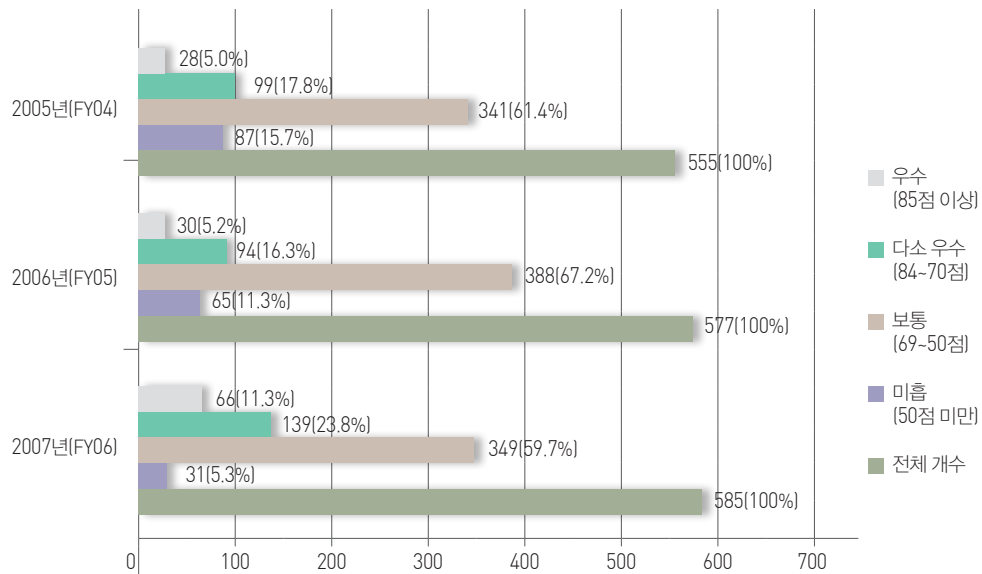
본 장의 내용은 2005년 자율평가 실시 이후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자료들의 경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앞 장에서 기술하였듯이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시기별로 상이하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일관된 등급기준에 의한 분포는 살펴보기 어려워, PART I 앞부분의 [그림 I-10] 연도별 일반재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 개수와 평균점수와 같이 일반재정사업(예산+기금)의 평균점수의 추이를 제시하였었다. 본 장에서는 평가결과 산출방식이 일치하는 시기별로 묶어서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가. 2005~2007년 평가결과

2005~2007년 일반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II-8]과 같다. 자율평가 첫 번째 주기인 이 시기에는 결과 산출 방식을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II-8] 2005~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4단계 평가(일반재정)

(단위: 개, %)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16〉 2005~2007년 일반재정 3년간 평가결과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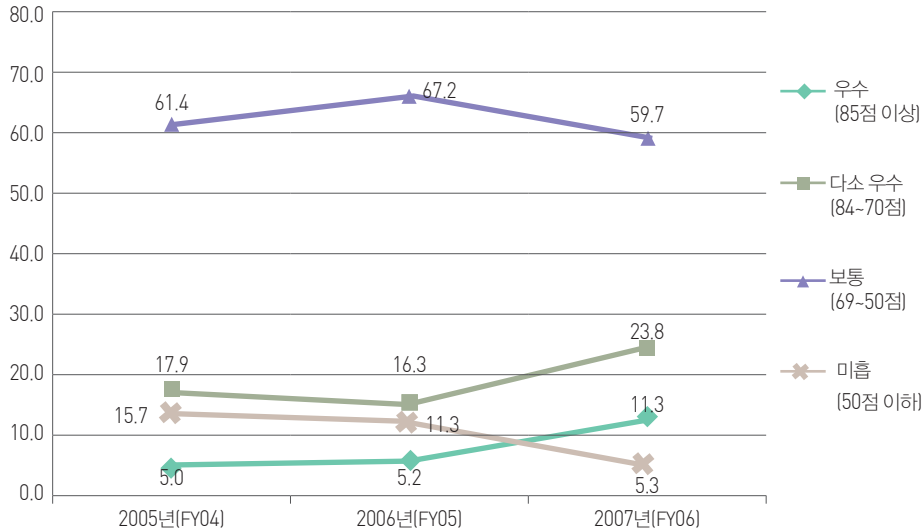
대상연도 <sup>43</sup>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005년(FY04)	555	60.1	127	22.9	341	61.4	87	15.7
2006년(FY05)	577	59.9	124	21.5	388	67.2	65	11.3
2007년(FY06)	585	66.0	205	35.1	349	59.7	31	5.3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5~2007년 평가결과를 보면, 평균점수가 2005년 60.1점에서 2007년 66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007년의 '우수'와 '다소 우수' 등급이 35.1%로 2005년(22.9%)과 2006년(21.5%)보다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은 5.3%로 2005년(15.7%)과 2006년(11.3%)보다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II-9] 2005~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5년에 비해 2007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평균점수도 상향하고 '미흡' 비율은 줄고, '우

43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게 되므로, 평가를 시행하는 연도(t)의 평가대상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전년도(t-1) 사업을 평가한다. 즉, 2005년 평가는 2004회계연도(fiscal year) 사업을 평가하게 된다.

수'와 '다소 우수' 등급비율이 늘어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점차 향상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부처 스스로 성과관리를 운영하는 능력이 나아지고 제도가 정착 및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율평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자율평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부처들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응하도록 근거자료 준비나 작성지침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능력의 향상도 결과가 좋게 나온 원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sup>44</sup>

2005~2007년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05년 자율평가결과

2005년 자율평가 대상사업은 전체 평가대상 사업 1,700여 개(약 105조원)의 1/3 수준인 555개 재정사업(약 35조원)으로 2004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결과 전체 사업의 5%(28개)가 '우수' 등급이며, 18%(100개)가 '다소 우수', 61.3%(340개)가 '보통' 등급 이상, 15.7%(87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표 II-17〉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		보통 (69~50)		미흡 (50점 미만)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555	60.1	28	5.0	100	18.0	340	61.3	87	15.7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5.9.16)

〈표 II-18〉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단계별 현황

(단위: %, 점)

단계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	
	전체	'미흡' 사업	전체	'미흡' 사업	전체	'미흡' 사업
평가결과	23.1	19.2	15.1	12.1	21.9	11.0
100점 만점 환산점수	77.0	64.0	75.5	60.5	43.8	22.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5.9.16.)

44 한편 2007년의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기관평가와 연계하였다. 이로 인해 각 기관에서는 평가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한 이유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박노욱 외(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p. 96).

위의 <표 II-18>은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단계별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단계별 100점 기준 환산한 점수를 보면 전체 사업들로 보았을 경우는 계획단계(77점) > 집행단계(75.5점) > 성과단계(43.8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흡’ 사업들의 경우는 계획단계(64점) > 집행단계(60.5점) > 성과단계(22점)로 전체 사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단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과단계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과단계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성과지표의 목표와 연계성(5점) 및 목표치의 적정성(5점) 항목에서 ‘아니오’ 평가 시 연계 질문인 성과목표의 달성도(30점) 항목에서 자동으로 20점 이상을 감점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45</sup>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대부분 성과의 미달성보다는 적정한 성과목표, 지표의 미설정 등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성과의 판단이 곤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어 재정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목표, 지표 체계의 합리적 설정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006년 자율평가결과

2006년에는 577개 주요 재정사업(약 36조원)을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 등급 이상의 비중이 84.3 → 88.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II-19>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		보통 (69~50)		미흡 (50점 미만)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577	59.9	30	5.2	94	16.3	388	67.2	65	11.3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6.7.12.)

45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과 관련 질문항목 평가결과 현황>을 보면 ‘1-6. 성과지표의 사업 목적 연관성’ 지표와 ‘1-7.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3-2. 성과목표의 달성도’ 지표들이 연계되어 있어 1-6에서 “아니오”를 받을 경우 1-7과 3-2의 점수가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1-6에서 “예”를 받았더라도 1-7에서 “예”로 인정받지 못하면 3-2에서 성과를 달성하였더라도 점수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과 관련 질문항목 평가결과 현황(2005년 기준)>

(단위: 개, %)

질문	사업 수(A)	“예”사업 수(B)	B/A	“아니오”사업 수(C)	C/A
1-6. 성과지표의 사업 목적 연관성	555	336	60.5	219	69.5
1-7.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58	28.5	397	71.5
3-2. 성과목표의 달성도		153	27.6	402	72.4

출처: 한국조세연구원(2005),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2005년에 비해 부처들이 사업목적의 명확화, 사업방식의 효율화 등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기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인 성과는 향상되었으나, 산출중심의 목표 설정, 성과지표·목표치의 합리성 결여 등 성과계획 관련 항목의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결과지표가 아닌 산출지표를 사용할 경우에 목표치가 달성되었더라도, 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성과달성도 부분에서 부분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흡’ 사업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성과 그 자체가 낮은 것이라기보다는 성과관리 체계의 미흡으로 성과판단이 곤란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판단된다. 2006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의 의미, 기법 등에 대한 부처의 인식과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사업비중이 아래 <표 II-20>과 같이 52.5%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II-20> 2006년 성과지표의 합리성 인정 비율

(단위: 개, %)

질문	사업 수	예		아니오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1-6. 성과지표의 합리성	577	303	52.5	274	47.5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6.7.12)

또한 부처 내부적인 사업관리의 편의 목적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대상사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유의미한 목표 및 지표 설정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 <참고> 대상사업 세분화 예시 내용

- (법무부) 전체 출입국관리 업무 중 세부사업인 사무실 임차사업만을 평가
- (건교부) 철도·도로사업의 전체 구간을 개별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교육 강화, 성과지표 개발 지침 마련, 프로그램예산 도입과 연계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 2007년 자율평가결과

2007년에는 585개 주요 재정사업(약 41조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다. 2007년은 재정사업 중 2005년 및 2006년 평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7년 평가결과를 보면, 2007년의 '우수'와 '다소 우수' 등급이 35.1%로 2005년(22.9%)과 2006년(21.5%)보다 증가한 반면, '미흡' 등급은 5.3%로 2005년(15.7%)과 2006년(11.3%)보다 감소하여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추세라고 보았다.

〈표 II-21〉 20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85점 이상)		다소 우수 (84~70)		보통 (69~50)		미흡 (50점 미만)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585	66.0	69	11.8	146	24.5	342	58.5	31	5.3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7.8.1.)

이는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부처가 자율평가결과를 예산 요구 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도 점차적으로 정착되는 추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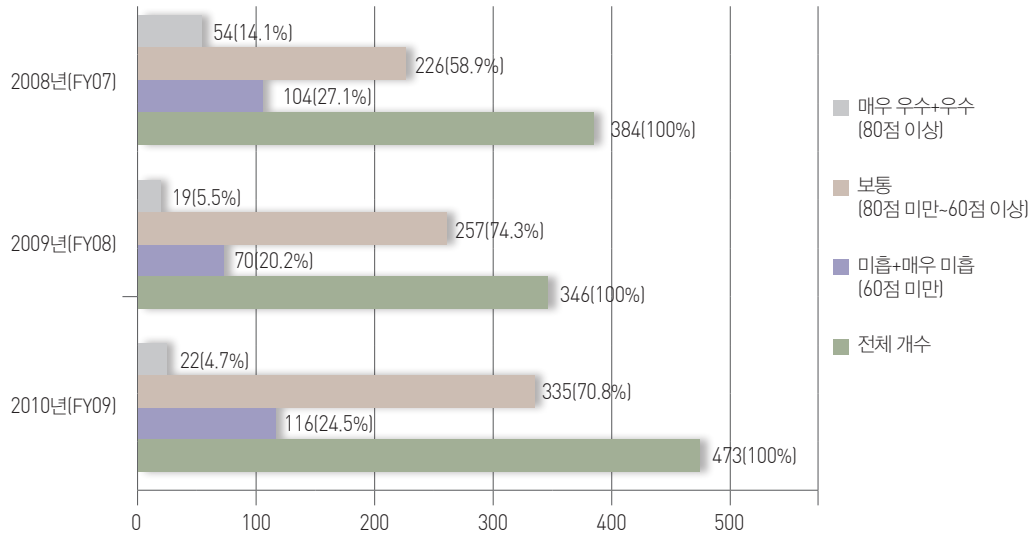
또한 부처 스스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단순 투입, 산출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마인드 및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기법 습득 등을 위한 성과관리 교육 강화, 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선정·전파,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개정하여 부처에 배포할 계획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나. 2008~2010년 평가결과

2008~2010년 일반재정 사업분야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II-10]과 같다. 자율평가 두 번째 주기인 이 시기에는 결과 산출 방식을 기존 4단계에서 5단계

로 변경하여 등급 간 점수기준이 조정되어 적용되었다.<sup>46</sup> 이 시기에는 결과 산출 방식을 5단계로 하였으나, 재정당국의 공식적인 자율평가결과 보도자료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수' 이상(매우 우수 + 우수), '보통', '미흡' 이하(미흡 + 매우 미흡)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보고서도 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림 II -10]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5단계 평가(일반재정)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 -2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점수가 2008년 66.6점에서 2009년 65.9점, 2010년에는 62.2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8년에서 2009년의 평균점수 차이는 0.7점으로 소폭으로 낮아졌지만, 2010년에는 전년 대비 3.7점이나 낮아졌다. 2010년도의 평균점수가 낮아진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sup>47</sup>에 의하면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46 평가산출 방식이 4단계 등급(2005-2007년) → 5단계 등급(2008년-2015년)으로 변화하였다.

4단계 등급 (2005-2007년)	등급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70점	69-50점	50점 미만	
5단계 등급 (2008-2015년)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50점 이상	50점 미만

4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7.14.] 내용 참고.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영도별 편성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영도별 수요 변화

〈표 II-22〉 2008~2010년 일반재정 3년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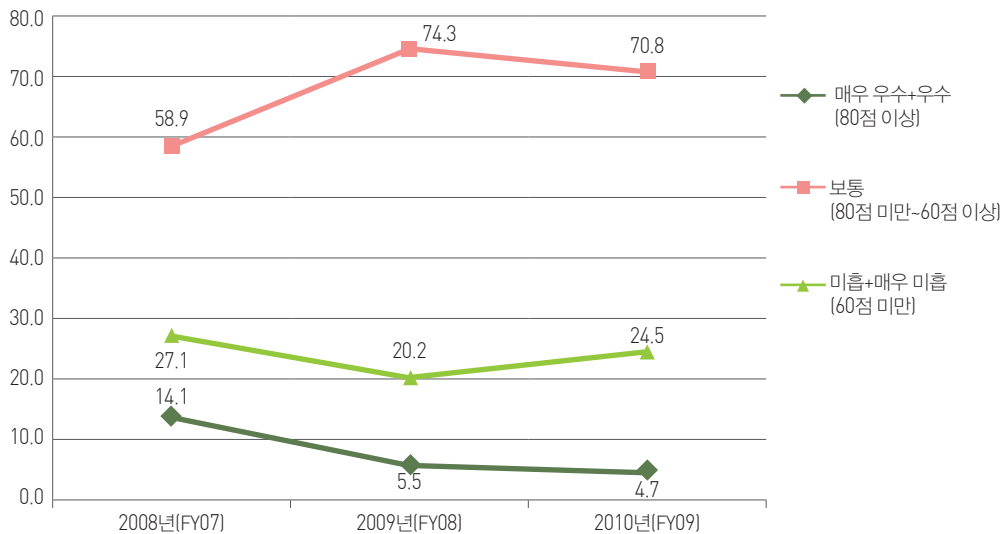
(단위: 개, %)

대상연도	사업 수	평균 점수	매우 우수 + 우수		보통		미흡 + 매우 미흡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008년(FY07)	384	66.6	54	14.1	226	58.9	104	27.1
2009년(FY08)	346	65.9	19	5.5	257	74.3	70	20.2
2010년(FY09)	473	62.2	22	4.7	335	70.8	116	24.5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1]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위의 [그림 II-11]에서 보듯이 ‘매우 우수’, ‘우수’ 등급 비율은 낮아지고, ‘보통’과 ‘미흡’ 이하 비율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8~2010년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08년 자율평가결과

2008년(2007회계연도) 평가대상 사업은 384개 사업이며,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6.6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우수' 등급 이상 사업 비중은 감소(35.1→14.1%)한 반면 '미흡' 등급 이하 사업 비중은 증가(5.3→27.1%)하였으나, 평균점수가 전년도와 유사한 이유는 '예산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 및 기준을 상향조정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3〉 200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수	평균 점수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 (50점 이상 ~60점 미만)	매우 미흡 (50점 미만)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384	66.6	10(2.60)	44(11.46)	226(58.85)	90(23.44)	14(3.65)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기획재정부는 2008년 평가결과를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각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한편 정부 조직개편을 계기로 R&D, 정보화 사업 등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이 재정부로 일원화됨을 계기로 평가체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부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 〈참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예시)

- ① 성과평가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강화 방안
- ② 변별력없는 항목 폐지 등 평가항목의 간소화 추진
- ③ 합리적인 성과지표 수립 지원 등 성과지표의 고도화 추진

❖ 2009년 자율평가결과

2009년은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sup>48</sup>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을 평가하는데 2008회계연도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분야의 경우 33개 부처의 346개 사업(23.1조원)이다.

일반재정 분야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66.6점)와 비슷한 수준이며, 등급별로는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이 5.5%, ‘보통’ 등급이 74.3%,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이 20.2%를 차지하였다. 전년대비 ‘미흡’ 이하 및 ‘우수’ 이상 등급은 감소(‘미흡’ 이하: 27.1→20.2%, ‘우수’ 이상: 14.1→5.5%)하였으며, ‘보통’ 등급은 증가(58.9→74.3%)하였다. ‘미흡’ 이하 등급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과지표의 적정성’ 지표의 점수 상승으로 가중치(40점)가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sup>49</sup>

〈표 II-24〉 200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수	평균 점수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80~90점)	보통 (60~80점)	미흡 (50~6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사업 수(비율)
346	65.9	5(1.4)	14(4.05)	257(74.28)	69(19.9)	1(0.28)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8.3.)

한편 정보화 분야의 평가대상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소규모사업(5억원 이하) 등은 제외하여 선정하는데 2008년도 평가대상 사업은 29개 부처의 108개 사업(1.0조원)이다.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표는 계획, 집행, 결과 및 활용 단계의 5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표 II-25〉와 같이 4단계 등급으로 되어 있어, 일반재정과는 평가지표와 평가결과 등급기준이 상이하였다.

〈표 II-25〉 2009년 정보화분야 평가결과 등급 및 점수기준

평가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5점 이상	90~94점	75~89점	75점 미만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9.8.3.)

48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화사업의 평가총괄기관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일반재정사업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49 평가지침상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달성도 평가 시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정보화 분야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9.8점으로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 이상이 20.3%, ‘보통’ 등급이 55.%, ‘미흡’ 등급이 24.1%로 나타났다.

#### ❖ 2010년 자율평가결과

2010년 평가대상 사업은 2009회계연도의 543개 사업으로 일반재정 473개, 정보화 7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어, 2010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예산집행실적은 중앙정부 배정기준에서 지차체 등 예산집행기관의 실적행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정보화 분야의 평가등급이 2009년까지는 4등급으로 등급별 점수기준도 상이하였지만 2010년부터는 일반재정 분야와 동일하게 5등급으로 통일하였다. 사업분야별로는 일반재정 사업은 ‘우수’ 이상이 4.7%, ‘보통’ 70.8%, ‘미흡’ 이하가 24.5%로 평가되었고, 정보화사업은 ‘우수’가 5.1%, ‘보통’ 73.4%, ‘미흡’ 이하가 21.5%로 평가되었다. ‘미흡’으로 평가된 105개 사업의 주요 감점요인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 미달성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II-26〉 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현황

(단위: 개, %)

사업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일반재정 (예산+기금)	473	62.2	22	4.7	335	70.8	116	24.5
정보화	79	63.2	4	5.1	58	73.4	17	21.5
전 체	552	62.3	26	4.7	393	72.3	133	24.5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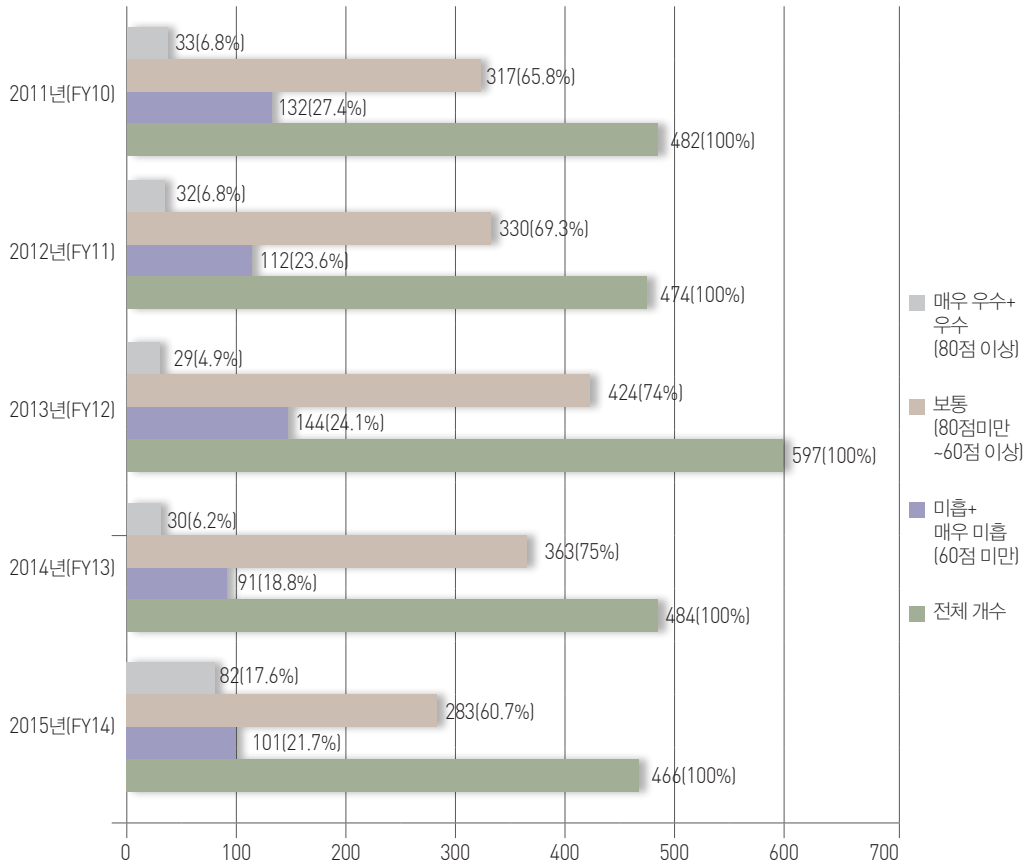
#### 다. 2011~2015년 평가결과

2011~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시기에는 결과 산출 방식을 5단계로 하였으나, 공식적인 자율평가결과 보도자료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수' 이상(매우 우수 + 우수), '보통', '미흡' 이하(미흡 + 매우 미흡)로 제시함에 따라 본 보고서도 이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는 일반재정사업과 정보화사업을 합친 등급별 분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도 정보화사업까지 포함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II -12] 2011~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5단계 평가(일반재정+정보화)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1~2015년 일반재정과 정보화를 합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는 아래 <표 II -27>를 보면 평균점수가 2011년 62.7점에서 2012년 64점으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 62.9점으로 다시 하락하였고 2014년에는 65.27점으로 다시 상향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연도에 따라 3년 주기로 바뀌는 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에 따라 평균점수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 적용기준 변화에 따라 자율평가 점수도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II-27〉 2011~2015년 일반재정+정보화 5년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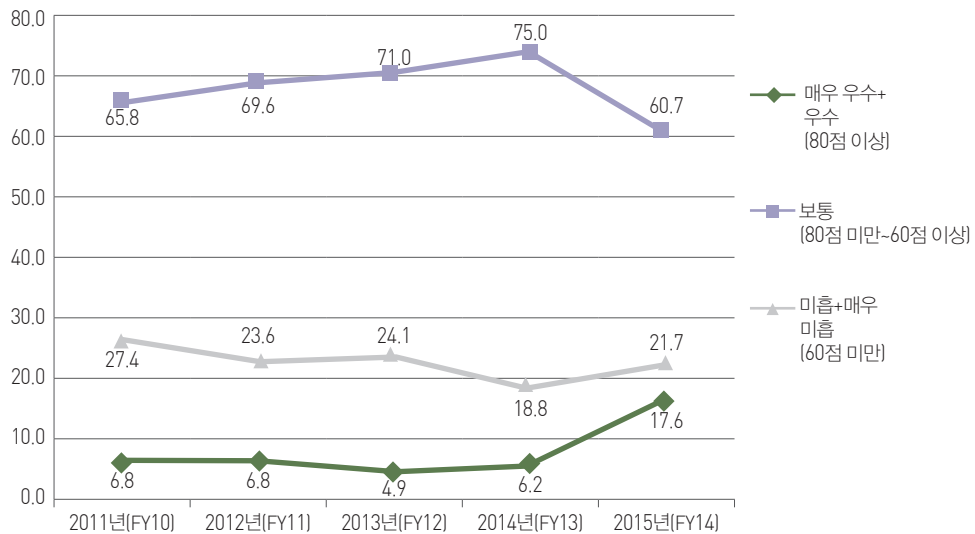
(단위: 개, %)

대상 연도	사업 수	평균 점수	매우 우수 + 우수		보통		미흡 + 매우 미흡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011년(FY10)	482	62.7	33	6.9	317	65.8	132	27.4
2012년(FY11)	474	64.0	32	6.8	330	69.6	112	23.6
2013년(FY12)	597	62.9	29	4.9	424	71.0	144	24.1
2014년(FY13)	484	65.3	30	6.2	363	75.0	91	18.8
2015년(FY14)	466	68.9	82	17.6	283	60.7	101	21.7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3〉 2011~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우수’ 이상 비율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7%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17.6%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반면 ‘보통’ 비율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65.8%(2011년)→69.6%(2012년)→71%(2013년)→75%(2014년)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5년에 60.7%로 대폭 하락하였다. ‘미흡’ 비율은 2011년에 가장 높은 27.4%였다가 23.6%(2012년)→24.1%(2013년)→18.8%(2014년)→21.7%(2015년)로 소폭 조정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준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등급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등급별 비율의 변화가 생긴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처 자체평가 시 등급배분에 대한 기준을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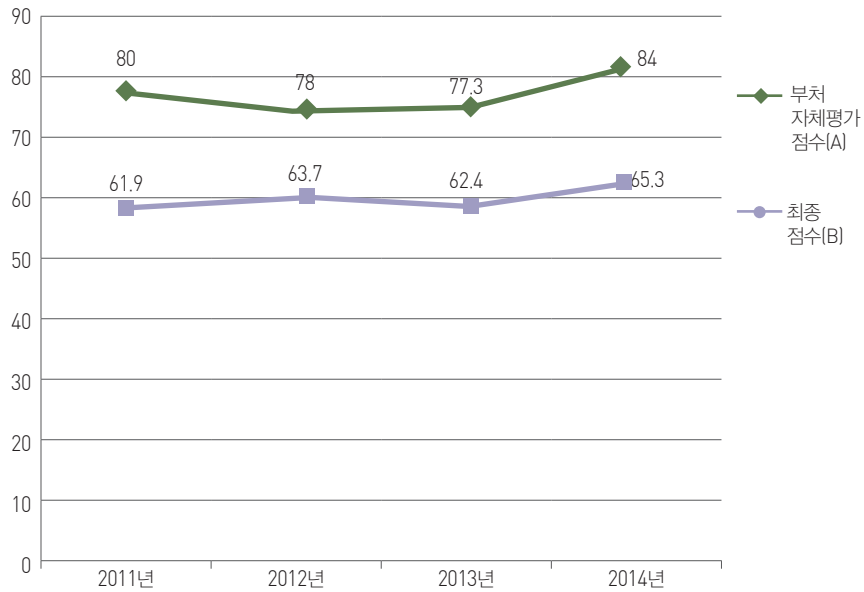
2014년까지 메타평가 도입 이전에는 이러한 등급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평가전담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래 <표 II-28>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점수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처에서 제시한 점수가 기재부 확인·점검 후 하향조정되어 최종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의한 확인·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부처의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도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수’ 이상 비율은 적어지고, ‘미흡’ 이하 비율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표 II-28>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비교(2011~2013년) [단위: 개, 점]

연도	일반재정 사업 수	부처 자체평가 점수(A)	최종 점수(B)	차이(A-B)
2011년	389	80.0	61.9	18.1
2012년	405	78.0	63.7	14.3
2013년	505	77.3	62.4	14.9
2014년	400	84.0	65.3	18.7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4]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2015년부터는 메타평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메타평가 평가항목에 상대평가 준수 여부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들은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여 왔다. 아래 <표 II-29>는 2015년 자체평가 등급배분 기준과 최종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lt;표 II-29&gt; 2015년 부처 자체평가의 등급배분 기준과 최종 결과 비교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준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등급 배분	5%	15%	65%	10%	5%	
2015년 평가결과		100% (466개)	3.6% (17개)	14% (65개)	60.7% (283개)	15% (70개)	6.7% (31개)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5.22.) 및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위의 <표 II-29>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부처의 자체평가 등급 간 비율은 등급배분 기준을 근접하게 따르고 있다.

메타평가가 도입되면서 기재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전체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과정이 사라지기도 하였고, 2015년부터 상대평가 강화로 ‘미흡’ 이하 비율이 기존 10% 이상에서 15%로 상향조정되면서, ‘미흡’ 비율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보통’ 비율은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2015년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년 자율평가결과

2011년 평가대상사업은 2010회계연도 예산사업(38개 부처, 482개 사업(일반재정 389개, 정보화 62개 사업), 51,3조원)으로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표 II-30>과 같이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으로, 132개 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되었다.

<표 II-30> 2011년 평가등급별 사업 비중

평가대상 연도	평균 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2010년(FY09)	62.3	26개(4.7%)	393개(71.2%)	132개(24.1%)
2011년(FY10)	62.7	33개(6.8%)	317개(65.8%)	132개(27.4%)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7.27.)

전년도 평가와 비교하면 ‘우수’ 이상 사업 수는 늘어나고 ‘미흡’ 이하 사업 수는 동일하나, 평가대상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2.1%p, 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공통 평가지표 수 축소, 관리단계 배점 상향 조정, 부분점수제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 수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2011년 성과평가 시에는 관리단계의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타당성, 사업관리·감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부처의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적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사실상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가 배정되었는지 점검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내용 방식의 적정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을 엄격하게 평가하였다.

<표 II-31>의 계획, 관리, 성과·환류의 단계별 평가결과를 보면, 사업계획이 92점, 성과계획이 70.1점, 관리가 65.9점, 성과·환류는 55.1점으로 나타났다.

〈표 II-31〉 2011년 평가단계별 점수

(단위: 점)

총점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환류
62.7	92.0	70.1	65.9	55.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7.27.)

계획단계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합리적 설정 노력이 다소 미흡하여 성과계획 점수가 사업계획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리단계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최종 사업수행기관의 실집행 수준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측정기준 세분화(2단계 → 4단계)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성과·환류단계는 상당수의 사업들이 달성 용이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에도 평가점수를 낮게 받아 단계별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산림청),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등 33개 사업이며, ‘미흡’ 이하로 평가된 사업은 132개 사업이었다. 미흡의 주요 요인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부적절, 저조한 예산집행률, 성과 미달성 등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며,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평가의 중요 요소인 성과지표 및 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부처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 2012년 자율평가결과

2012년 평가대상 사업은 2011회계연도 예산사업(39개 부처 474개 재정사업(일반재정 405개·정보화 69개))으로 평균점수는 64.0점으로 2011년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고, 평가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6.8%, ‘보통’ 69.6%, ‘미흡’ 이하 23.6%로 2011년에 비해 ‘우수’ 이상은 유사하나, ‘보통’은 높고, ‘미흡’ 이하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성과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부처 자체평가의 내실화 등이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32〉 2012년 등급별 평가결과

평가대상 연도	평균 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2011년(FY10)	62.7	33개(6.8%)	317개(65.8%)	132개(27.4%)
2012년(FY11)	64.0	32개(6.8%)	330개(69.6%)	112개(23.6%)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6.12.)

사업계획 - 성과계획 - 성과달성·환류 단계의 점수는 2011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관리단계(예산집행실적, 사업진행상황 모니터링,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구성) 점수는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 2012년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대상 연도	사업계획(10)	성과계획(10)	관리(30)	성과달성·환류(50)
2011년(FY10)	92.0	70.1	65.9	55.1
2012년(FY11)	95.9	79.2	53.9	61.5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6.12.)

### ❖ 2013년 자율평가결과

2013년 평가대상 사업은 2012회계연도 예산사업(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으로, 평가대상 사업 수는 전년보다 123개 증가한 597개였고, 대상 예산규모도 28.9조원 증가한 63.1조원 규모였다.

〈표 II-34〉 2011~2013년 평가대상 변동 추이

(단위: 개, 조원)

	2011년(FY10)	2012년(FY11)	2013년(FY12)
사업 수	482	474	597
예산	52.4	34.2	63.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5.2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엄격히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결과는 '우수' 이상 4.9%, '보통' 71.0%, '미흡' 이하 24.1%로 전년에 비해 '우수' 이상은 다소 하락하였고, '보통'과 '미흡' 이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5〉 부처 자체평가 점수와 기재부 확인·점검 후 최종 점수 비교(2011~2013년) (단위: 개, %)

대상 연도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011년(FY10)	482	62.7	33	6.9	318	65.8	132	27.4
2012년(FY11)	474	64.0	32	6.8	330	69.6	112	23.6
2013년(FY12)	597	62.9	29	4.9	424	71.0	144	24.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5.29.)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우수’ 이상 평가사업(29개)은 예산편성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3월초부터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보고서에 대해 평가전문기관<sup>50</sup>의 검토, 사업별 내부심의, 부처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직접 부처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부처 대면심의 강화 등을 통해 부처의 편의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온 집행관리 단계는 점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성과달성·환류 단계는 예년에 비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목표치 미달성이 많아 점수가 하락하였다.

〈표 II-36〉 2013년 평가단계별 평가점수 (단위: 점)

대상 연도	총점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환류
2012년(FY11)	64.0	95.9	79.2	53.9	61.5
2013년(FY12)	62.9	96.8	73.0	65.7	53.6

주: 각 단계별 점수는 백분율 환산점수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5.29.)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하게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평가결과에서도 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부처에 권고하여 2014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50 일반재정사업은 한국조세연구원, 정보화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검토를 수행하였다.

부처 담당자들의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자율평가 실적, 부처제출 자율평가보고서의 적정성, 상대평가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타 부처에 비해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5개 부처(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를 선정하여, 이들 모범부처에 대해서는 2013년 자율평가의 기획재정부 확인·점검을 면제하였다.

❖ 2014년 자율평가결과

2014년 평가대상 사업은 2013회계연도 40개 부처 484개 재정사업(일반재정 400개, 정보화 84개 사업)이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중 1/3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2월 말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3월 말까지 평가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5월 말 기재부의 확인·점검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가 확정되었다.

〈표 II-37〉 2012~2014년 평가대상 변동 추이

(단위: 개, 조원)

	2012년(FY11)	2013년(FY12)	2014년(FY13)
사업 수	474	597	484
예산	34.7	63.1	57.1

출처: 기획재정부, 2012-201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4년 확인·점검 결과 아래 〈표 II-38〉를 보면, 일반재정과 정보화사업을 합친 평균점수는 65.27점이며, 등급별 비율은 ‘우수’ 이상 6.2%, ‘보통’ 75.0%, ‘미흡’ 이하 18.8%로 나타났다. 분야별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재정사업의 경우 ‘우수’ 이상 6.8%, ‘보통’ 74.5%, ‘미흡’ 이하 18.8%로 나타났고, 정보화사업의 경우 ‘우수’ 이상 3.6%, ‘보통’ 77.4%, ‘미흡’ 이하 19.0%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는 각각 65.33점(일반재정), 65.02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II-38〉 201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단위: 개, %)

사업	사업 수	평균 점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일반재정	400	65.33	27	6.8	298	74.5	75	18.8
정보화	84	65.02	3	3.6	65	77.4	16	19.0
전체	484	65.27	30	6.2	363	75.0	91	18.8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5.27.)

평가단계별로는 계획단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과달성·환류단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39〉 2014년 평가단계별 점수

(단위: 점)

총점	계획	관리	성과달성·환류
65.3	88.1	61.0	59.5

주: 각 단계별 점수는 백분을 환산점수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5.27.)

확인·점검 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여 요구·편성하도록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 특성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개선,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부처 자율의 성과관리제도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부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과거 자율평가 실적, 부처 제출 자율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기본사항 준수 여부<sup>51</sup>를 고려하여 자체평가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부처를 선정(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지침)하여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을 면제하였다. 2014년에는 통계청, 특허청, 관세청 3개 부처가 모범부처로 선정되었다.

#### ❖ 2015년 자율평가결과

2015년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51 기재부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여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상대평가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 부처를 선정하여 기재부의 확인·점검을 면제하였다.

〈표 II-40〉 2015년 자율평가결과

합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66개 (100.0%)	17개 (3.6%)	65개 (14.0%)	283개 (60.7%)	70개 (15.0%)	31개 (6.7%)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5.22.)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8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되었다.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sup>52</sup>를 통해 각 부처의 평가과정의 충실도와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이하 비율을 상향 조정(10%→15%)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하여,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되었다.<sup>53</sup>

2015년 자율평가는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임을 기재부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하였다. 통합 대상은 자율평가, 보조사업평가, 자금운용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이상 기재부), R&D평가(미래부), 지역발전사업평가(지역위)이다.

## 라. 2016~2018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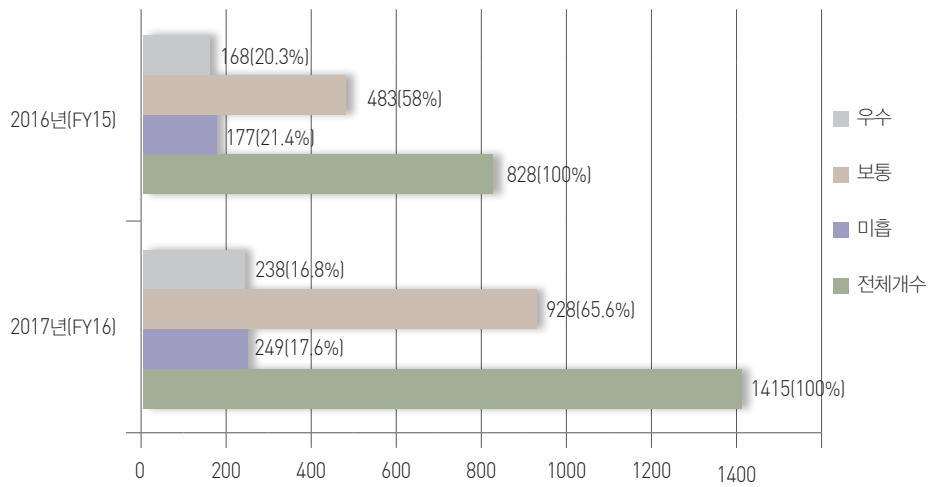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부터는 기존 5단계 등급에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은 예산규모 기준으로 2017년은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였다.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단, 평가사업 수가 적거나(2016년 기준 8개 미만, 2017년 기준 10개 미만), 예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예산규모 기준 상대평가 적용이 곤란한 부처는 ‘사업 수’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52 메타평가란 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잘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53 상대평가 비율 미준수 부처는 2013년 38개 중 12개 부처, 2014년 40개 중 8개 부처였으나, 2015년은 전 부처가 상대평가 비율을 준수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 단계의 11개 지표(일반재정 기준)로 평가하였지만, 2016년부터는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2017년은 3개 지표)로 간소화되어 평가하였으며, 일반재정·R&D·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재정사업 평가를 단일평가(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하였다는 것이 큰 변화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메타(상위)평가기관<sup>54</sup>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통해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하는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였다.

[그림 II-15]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결과(일반재정(정보화 포함)+ R&D + 지역위)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 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2016년 ‘우수’ 등급이 20.3%에서 2017년 16.8%로 다소 줄었으며, ‘미흡’ 등급도 2016년 21.4%에서 2017년 17.6%로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I-41> 2016~2017년 일반재정+정보화+R&D+지역위 2년간 평가결과

(단위: 개, %)

대상 연도	사업 수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사업 수	비율
2016년(FY15)	828	168	20.3	483	58.3	177	21.4
2017년(FY16)	1415	238	16.8	928	65.5	249	17.6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5.30, 2017.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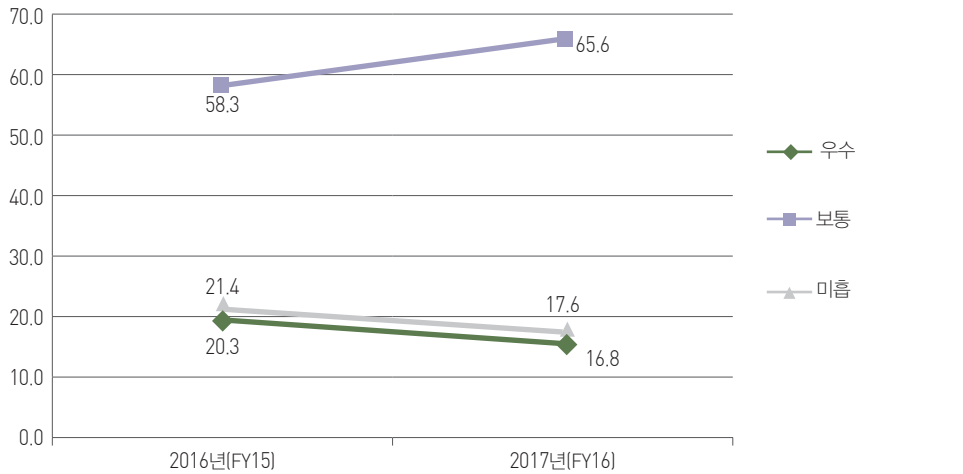
54 일반재정(기재부), R&D(미래부), 지역발전(지역위)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영도별 변경사항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영도별 주요 변화

[그림 II-16] 2016~201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등급별 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자율평가결과자료 데이터(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6~2017년 각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2016년 자율평가결과

2016년에는 47개 기관, 828개 사업(2016년 예산기준 57.2조원)의 지난 3년간(2013~2015년)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50%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후, 부처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각 부처는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 또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부처별 자체평가가 끝나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메타(상위)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재정·R&D·지역발전 분야별 평가를 종합하여 상·하위 10% 수준에서 메타(상위)평가 우수·미흡 기관을 선정하였다.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3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7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대신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 일반재정·R&D·지역발전 분야별 평가를 종합하여 <표 II-42> 같이 메타평가 우수기관 6곳과 미흡기관 4곳을 선정하였다.

〈표 II-42〉 2016년 메타평가 결과 우수-미흡 부처

우수(6)	미흡(4)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식약처, 국가보훈처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5.30)

기재부는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주어질 예정으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 2017년 자율평가결과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sup>55</sup>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2017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크게 자체평가결과와 메타평가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 238개(16.8%), ‘보통’ 등급 928개(65.5%), ‘미흡’ 등급 249개(17.6%)를 선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서는 1조 1,940억원<sup>56</sup>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는 분야에 따라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표 II-43〉와 같이 일반재정 분야는 우수 부처 5개, 미흡 부처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를 각 1개씩 선정하였다.

55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기획재정부, 2016년 12월)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

56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에서는 총구조조정규모를 평가대상 사업 2017년 총예산(116.1조원)의 1% 수준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지출사업 및 2017년 종료사업은 구조조정 모수에서 제외되며, 부처별 제외금액은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43〉 2017년 메타평가 결과 우수-미흡 부처

분야	우수	미흡
일반재정(50개)	문화재청, 통계청, 특허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산업부, 방통위, 보훈처
R&D(18개)	해수부	기상청
지역사업(15개)	교육부	중기청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22.)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내역’ 등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 2018년 자율평가결과

2018년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bbs/secretYnChk.do?seq=46195>)에 2018.6.18. 일자로 공개되어 있다.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7. 평가결과 활용 .....	142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활용: 성과와 예산의 연계 .....	142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	147



## 7. 평가결과 활용

### 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활용: 성과와 예산의 연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그 모태가 된 미국의 PART와 마찬가지로 재정사업의 평가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일차적으로 자율평가하고, 평가주관부처가 그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도출한 최종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기획예산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평가결과 활용의 기본방침으로 각 부처가 최종 평가결과를 10% 세출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규모 대비 10% 이상 삭감하도록 조치해왔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즉, (t-1)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t년도에 실시된 자율평가결과가 (t+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 2011년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페널티 및 인센티브가 단년도 예산편성 활용에만 국한되어 획일적·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부처의 실질적인 사업 효율화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정책사업 및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미흡' 판정을 받아도 실질적인 예산삭감이 어려워 평가결과의 재정운영 환류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흡' 등급만 면하고자 하는 부처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왔다.<sup>57</sup>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유형별로 페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 이상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식으로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정책사업, 의무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관련 운영비를 삭감하도록 하여 '미흡' 사업에 대한 페널티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수' 사업의 경우, 사업 마무리 등으로 예산 증액이 곤란한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하고 '우수' 부처 및 '우수' 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5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1.18.) 참고.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다양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성과지표 개선,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및 조정 등)을 권고하고 이를 차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활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표 II-44>와 같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 10년간 '미흡' 사업의 경우 매년 평균 10~20%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약 4조 8,8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회 최종 확정안보다 정부 요구안에서 더 많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확정예산의 경우에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안보다 삭감률이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예산안에서는 '미흡' 이하 등급 사업예산이 예산당국에 의해 10% 의무적으로 삭감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일어나는 국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정부 요구안 원안에 비해 많은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58</sup>

<표 II-44> 과거 10년간 '미흡' 이하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현황

(단위: 개, 억원, %)

평가연도	미흡 이하 사업 수	t 예산	t+1 예산		예산증감률	
			정부안	국회 확정	정부안 기준	국회 확정 기준
2005	87	34,206	29,911	30,435	-12.6	-11.0
2006	65	11,463	5,428	5,408	-52.6	-52.8
2007	31	3,949	3,451	3,597	-12.6	-8.9
2008	104	56,855	46,610	45,896	-18.0	-19.3
2009	70	28,245	26,134	26,311	-7.5	-6.8
2010	116	38,232	33,104	33,445	-13.4	-12.5
2011	117	42,539	37,108	38,121	-12.8	-10.4
2012	97	18,161	14,695	14,704	-19.1	-19.0
2013	126	104,905	93,806	95,413	-10.6	-9.0
2014	75	37,905	34,266	34,331	-9.6	-9.4

출처: 박노욱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pp.49-50에서 발췌.

58 박노욱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참고.

한편 201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폭 개편하여 메타평가를 도입하면서, 평가결과 환류와 관련한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관리 부실, 사업구조의 비효율성, 예산 부족 등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만을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 등 정책 수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sup>59</sup>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미흡'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10% 예산 삭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의 특성과 '미흡' 원인에 따라 환류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 개선대책이나 사업 통폐합 등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 환류방식을 다양화하였다.

2016년부터는 통합 재정사업평가체제로 바뀌면서, ① 사업별 자체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와, ② 메타(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환류 등 두 가지 방향으로 환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재정사업평가에서는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삭감하였지만, 통합 재정사업 평가부터는 개별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각 사업별 예산의 5~15%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지출구조조정계획 마련 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이 필요하거나 사업대상 및 사업규모의 축소와 보조비율 하향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조조정된 예산은 부처 내에서 우수 사업 또는 신규 사업 등의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2016년도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무지출사업, 완료사업, 국가 간 협정 등 지출삭감 불가능 사업의 경우에는 지출구조조정 금액의 모수가 되는 총예산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즉 지출삭감 불가능 사업을 삭감하거나 단순이관을 구조조정으로 산입하는 등 부처의 전략적 왜곡이 있는 경우는 구조조정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흡' 사업 중 사업 특성, 미흡 원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삭감 등의 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출구조조정계획 대신 부처 자율로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sup>60</sup>

한편 메타(상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별 환류는 기재부 등 평가주관부처가 각 부처의 자체

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1.27.) 참고.

60 기획재정부(2016),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참고.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및 '미흡' 부처를 선정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즉 '우수' 부처에는 기관 포상, 차년도 평가 시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 비율 하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부처에는 당해 연도 총구조조정 규모 확대, 부처 기본경비 삭감, 차년도 평가 시 총 구조조정 규모 및 '미흡' 비율 상향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2016년에는 '미흡' 사업 대상으로 부처 자율로 5~15%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지출구조조정규모를 부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미흡' 등급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총 구조조정 규모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보통'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미흡' 사업들의 구조조정 규모 합계가 1%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이상 등급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하여 1%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는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몫을 우수 사업 또는 신규 사업 등에 배분할 수 있었으나 2017년도부터는 예산 삭감만 가능할 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몫에 대한 재배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sup>61</sup>

2016~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시행으로 인해 달라진 평가결과 활용 부분의 제도개선 내용은 <표 II-45>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다.

<표 II-45> 평가결과 환류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정리

종전 재정사업 평가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재정, R&amp;D, 지역사업 각 분야별로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실시</li> <li>•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지출 조정계획을 제시</li> <li>• 총 감액규모는 전체 '미흡' 이하 사업의 당해 연도 예산액의 10% 이상을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실시</li> <li>• '미흡' 사업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처 자율로 5-15% 수준에서 지출구조조정안 마련</li> <li>• 총 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 준수(의무지출 제외)</li> <li>•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마련한 몫을 우수 사업에 분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실시</li> <li>• '미흡'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출구조조정 실시한 후, 총 구조조정 규모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보통'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li> <li>• 총 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 수준 준수(의무지출 제외)</li> <li>• '미흡'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실시, 마련한 몫은 우수 또는 신규 사업에 분배 불가</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61 기획재정부(2017),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참고.

메타평가 방식이 도입된 2015년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가 시행된 2016~2017년까지 3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46>과 같다.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8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각 부처는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총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메타평가 결과 우수 부처 6개, 미흡 부처 4개를 선정하여 차년도 총 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였다.<sup>62</sup> 또한 2017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각 부처는 ‘미흡’ 또는 ‘보통’ 사업 중심으로 총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메타평가 결과 우수 부처 7개, 미흡 부처 5개를 선정하여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였다.<sup>63</sup>

<표 II-46> 2015 ~ 2017년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대상 수	466개	828개	1,415개
평가대상 예산규모	50.5조원 (2015년 예산기준)	57.2조원 (2016년 예산기준)	116.1조원 (2017년 예산기준)
지출 구조조정 계획	2,800억원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 2,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방안과 함께 27개 사업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을 제시)	6,250억원 (‘미흡’ 등급 177개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미흡’ 또는 ‘보통’ 사업 162개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	1조 1,940억원 (‘미흡’ 등급 249개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미흡’ 또는 ‘보통’ 사업 253개에 대해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8년에는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자율평가 체제하에서 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서, 평가결과의 환류 역시 부처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각 부처는 자체적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 및 성과관리개선

6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5.30.) 참고.

6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22.) 참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부처의 자율적 환류계획의 이행 여부를 받기 또는 분기별로 확인·점검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sup>64</sup>

한편 핵심 사업평가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 개별 사업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분석을 통한 예산조정, 사업구조 재설계 및 제도개선 등 합리적 환류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기반의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시장, 타 재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대체, 보완, 중복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투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객관적인 지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sup>65</sup>

####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에 관한 실증연구

그간 많은 선행연구들이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정부와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sup>66</sup>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평가등급, 총점 등)를 독립변수로, 정부·국회 예산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업규모(대·소규모), 사업수행방식(직·간접수행), 사업성격(경제·복지), 사업수행기간(장·단기) 및 사업특성변수 등을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 변화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 사업의 경우 차년도 정부 예산 변화율과 국회 예산 변화율에서 유의미하게 음(-)의 증가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평가시점에 따라 타 평가제도의 영향, 부처의 관대화 경향 수준, 정권 교체, 평가기준 강화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 확정예산에 비해 부처 예산요구안과 정부 예산안에서 변화율에 더 유의

64 기획재정부(2018), 『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참고.

6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1.11.) 참고.

66 박노옥 외(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방문규(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성채 외(2009)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재정사업에 대한 PART 평가를 중심으로』, 정무경(2011)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외(2012) 『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성채 외(2012) 『예산심의과정에 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노옥 외(2015)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등 참고.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요소들이 작용하여 자율평가 점수의 예산삭감 효과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성채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회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수정에 실질적으로 연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실제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미흡’ 이하 사업임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67</sup>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제 사업 성과보다는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표 II-47>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47>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성 관련 연구결과 정리

구분	분석 대상 연도	변수		주요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박노욱 외 (2008)	2005 ~ 2007	평가등급	부처 요구 예산증가율,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액 증가율, 국회 확정 예산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 사업은 부처 요구 예산액,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액, 국회 예산 확정액 예산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침.</li> <li>• 정부 예산안 예산증가율이 국회 예산확정액 대비 크게 나타남.</li> <li>• 2005년에 비해 2006-2007년으로 갈수록 평가결과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li> </ul>
방문규 (2008)	2005 ~ 2008	평가결과 (등급, 총점) 평가항목별 점수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	부처 요구 예산증가율, 정부 예산안 증가율, 국회 확정 예산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산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li> <li>• 평가결과의 영향은 2005년에 높게 나타났으나, 2006-2007년 기간 중 점차 약화되었다가 신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미흡’ 사업 기준강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이 재가동되어 평가결과의 영향이 다시 크게 나타남.</li> <li>• 정부 예산안 단계에는 ‘미흡’ 등급이 예산배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처요구 단계에서는 ‘우수’ 등급이 더 큰 영향을 미침.</li> </ul>

67 윤성채 외(2012)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참고.

〈표 II-47〉의 계속

구분	분석 대상 연도	변수		주요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윤성채 외 (2009)	2006 ~ 2008	평가등급, 평가항목별 점수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	정부 제출안 예산변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등급이 높아질수록 예산증가비율이 높고,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삭감비율이 높음.</li> <li>전년도 예산변화율, 자율평가 점수가 예산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li> <li>평가점수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재정사업보다 민간보조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li> <li>성과 요소보다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요소가 예산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li> </ul>
정무경 (2011)	2005 ~ 2010	평가등급 (종합/개별)	행정부 예산 증가율, 국회 예산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평가등급은 행정부 및 국회의 예산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국회보다는 행정부 예산증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침.</li> <li>개별 평가등급의 경우, '미흡' 등급은 행정부보다 국회예산에서 삭감효과가 더 큰 반면, '다소 우수' 등급은 국회보다 행정부 예산증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우수' 등급은 예산 배분과 성과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li> </ul>
윤기웅 외 (2012)	2008 ~ 2010	평가점수 (총점) 평가등급	정부 예산안 증감률, 국회확정 예산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점, 등급 모두 차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확정예산 증감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국회 확정예산보다 정부 예산안에 더 큰 영향을 미침.</li> <li>총점보다는 등급의 경우 예산증감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등급 중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이 예산증감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짐.</li> </ul>
윤성채 외 (2012)	2007 ~ 2009	평가결과 (총점) 평가항목별 점수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성과]	국회 예산안 수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결과(총점)는 국회 예산안 수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평가항목 중 전략계획, 집행 점수가 국회 예산안 수정률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li> </ul>

〈표 II-47〉의 계속

구분	분석 대상 연도	변수		주요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박노욱 외 (2015)	2010 ~ 2014	평가등급	정부 예산안 증감률, 국회 확정예산 증감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이상 사업의 경우 어느 연도에도 평가 결과가 차년도 예산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미흡' 이하 사업의 경우 1개연도를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정부 예산안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li> <li>• 평가등급이 국회 확정 예산증감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정치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li> </ul>

출처: 해당 논문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정리.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제1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경사항

8. 평가 주관부처의 성과관리제도 전담조직	152
가. 2003년 3월 ~ 2005년 5월	152
나. 2005년 5월 ~ 2008년 2월	154
다. 2008년 2월 ~ 2012년 1월	155
라. 2012년 1월 ~ 2014년 12월	156
마. 2014년 12월 ~ 2016년 5월	157
바. 2016년 5월 ~ 현재(2018년 6월 기준)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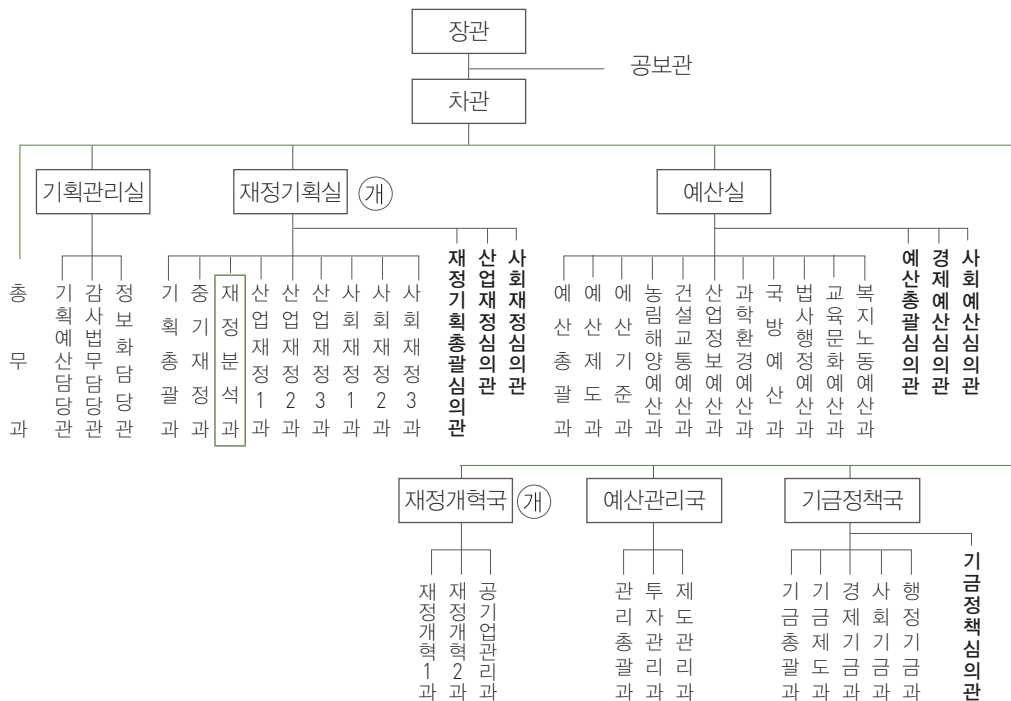
## 8. 평가 주관부처의 성과관리제도 전담조직

평가 주관부처의 성과관리 전담조직에서는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부처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종합하고 관리하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하였다. 아래부터는 200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시기별 성과관리담당 조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2003년 3월 ~ 2005년 5월

맨 처음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2003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수립 등 본격적인 성과목표관리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담당할 조직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의 재정분석과였다. 아래 [그림 II-17]의 기획예산처 조직도에 있는 재정기획실은 재정의 기획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재정기획국이 확대개편된 것으로, 재정기획실 내에 성과관리를 담당할 부서는 재정분석과였다.

[그림 II-17] 기획예산처 조직도(2003.3.28.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정부기관별기구도 자료(<https://org.mois.go.kr/org/guestLogin.do?method=guestLogin>)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8.6.11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에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의 기본골격을 설계하고 운영과정을 총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 각 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체계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부처가 1차적으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기획예산처의 확인·점검과정을 거쳐 부처와 여러 차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다.<sup>68</sup>

2003년 기획예산처는 1999~2002년까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기관을 선(先)시행 부처로 선정하여 제도 적용 대상사업의 30%(사업 수 기준)에 대한 성과지표를 2003년 말까지 개발하여 2005년도 예산요구 시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2006년도 예산요구 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선시행 부처 이외의 기관은 2004년에 30%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연차별로 전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3년 성과지표 개발 첫 해에는 각 부처 성과지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을 구성(2003.12월 중순)하여 선(先)시행 부처의 지표 개발 결과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은 각 부문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예산처 및 관계전문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최종자문을 거쳐 각 부처에 자문내용을 통보하고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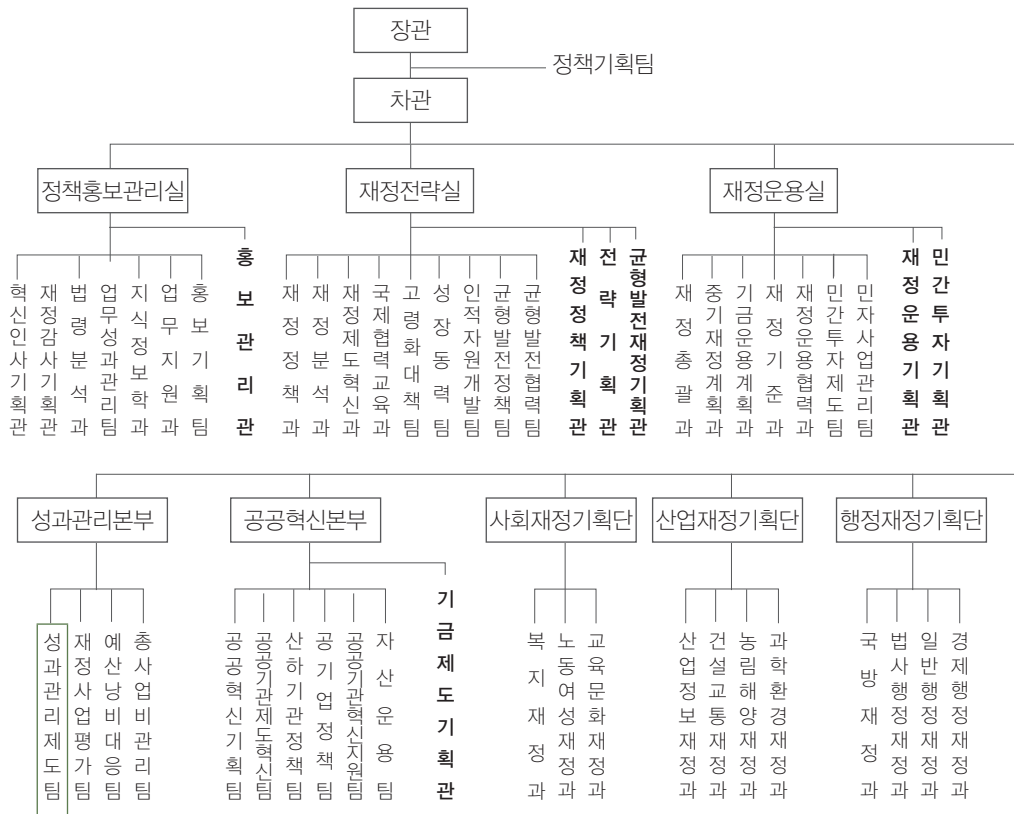
또한 실무적인 업무 이외에도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의 성과관리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국제콘퍼런스를 주최하는 등 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68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개발한 성과목표체계와 성과지표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성과목표체계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합리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부처에 성과목표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하도록 검토의견을 준다. 부처는 기획예산처의 검토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밝히고 불수용한다면 사유 제시를 통해 재정당국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친다. 이렇게 2~3차에 걸쳐 부처와의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부처가 제출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최종본이 완성된다. 이러한 과정의 단계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분석센터 성과관리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은 성과관리 관련 지침 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교육,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검토 등의 업무를 밀접하게 지원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나. 2005년 5월 ~ 2008년 2월

2005년 5월 기획예산처는 재정혁신과 기획예산처 5대 정책목표<sup>69</sup>에 부합하게 인력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대내외 환경과 고객요구에 부응하도록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5대 정책목표 중 하나인 성과와 책임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성과관리본부라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였다. 본격적으로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으로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아래 [그림 II-18]의 성과관리본부 내의 성과관리제도팀이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시행을 전담하였다.

[그림 II-18] 기획예산처 조직도(2005.5.31.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정부기관별 기구도 자료(<https://org.mois.go.kr/org/guestLogin.do?method=guestLogin>)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8.6.11.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5.5.23.)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부처에 대한 원스톱(One-

69 기획예산처의 2005년 5대 정책목표는, 1.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 2.국민수요 충족과 형평증진, 3.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4.성과와 책임중심 재정운영, 5. 공공부문 재정의 투명성과 혁신 활성화이다.

stop)서비스<sup>70</sup>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별로 중장기 재정전략(재정전략실),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기금 편성 총괄(재정운용실), 성과관리 기능총괄(성과관리본부)로 나누어 기능별 업무를 종합·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재정혁신 추진을 위한 기능 보강을 통해 예산총액배분 자율평가(Top-Down)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성과관리본부 성과관리제도팀은 기존 재정기획실 재정분석과에서 수행하던 성과목표관리제도 관련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수립, 확인 점검 등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오면서 2005년 새로 도입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인 관계로 자율평가보고서 작성지침 수립 및 개선, 피평가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부처 순회설명회, 평가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부처순회 설명회 이외에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성과관리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성과관리제도팀 담당사무관은 부처 실무자들에 대하여 자율평가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침 관련 보고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성과관리제도팀은 자율평가 시행 결과를 토대로 자율평가 항목 및 답변 기준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각 부처, 한국조세연구원, KDI 등으로 구성된 '자율평가제도발전 T/F'를 구성하여 운영(2005.10~12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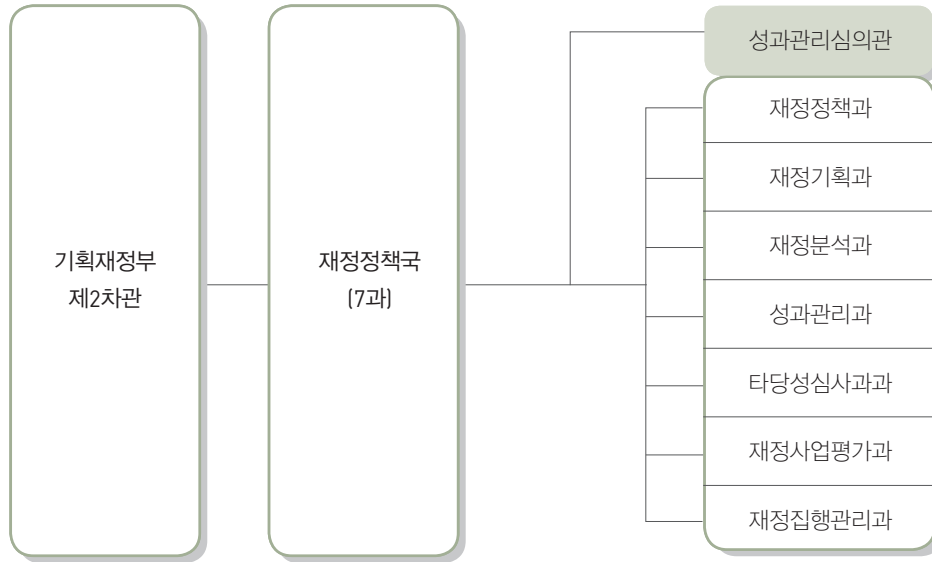
## 다. 2008년 2월 ~ 2012년 1월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신설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성과관리본부가 없어지고 재정정책국 아래 성과관리심의관이라는 직제가 신설되었으며, [그림 II-19]와 같이 재정정책과, 재정기획과, 재정분석과, 성과관리과, 타당성심사과, 재정사업평가과, 재정집행관리과 총 7개의 과로 구성되었다. 재정정책국 내의 7개의 과 중에서 성과관리과가 성과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존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제도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

70 기획예산처는 원스톱(One-Stop) 체제를 통해 중복업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함께 그동안 기획예산처 여러 실국과 중복적으로 협의를 수행해야 했던 각 부처의 업무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 5.23일자 자료 인용).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수립,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운영 전반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정화시켜 나갔다.

[그림 II-19]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조직도(2008.2.29.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정부기관별 기구도 자료(<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051000&enc=1&date=20080229>)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8.6.11.

## 라. 2012년 1월 ~ 2014년 12월

2012년은 기획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으로, 2008년 부처통합 시의 기대효과들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조직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제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되고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운영되었다.<sup>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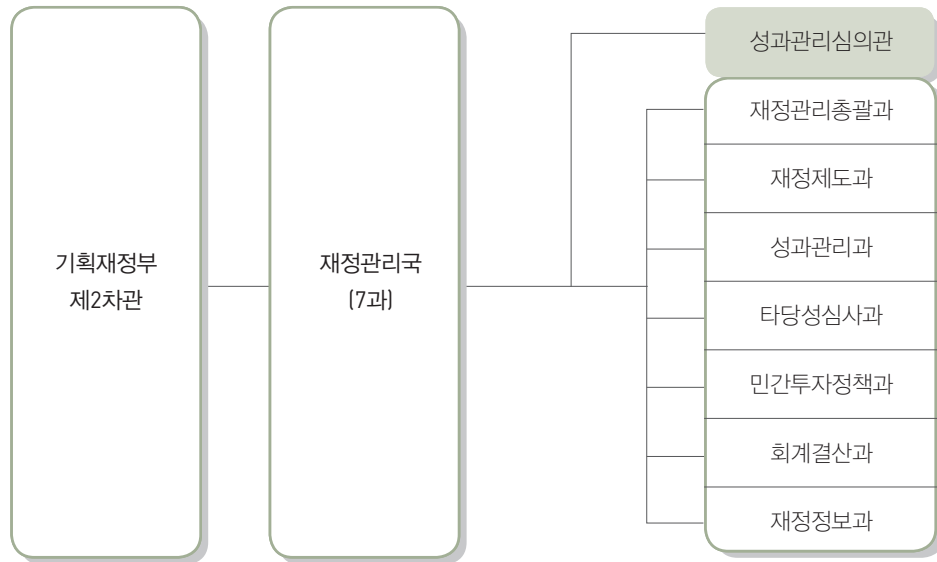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은 성과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업무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재정관리국 내의 다른 과들도 자율평가에 참여시킨 것이다. 성과관리과 외에도 재정관리총괄과, 재정제도과, 재정관리 집행팀 내에 부

71 재정관리국으로 이관되는 업무: 기금운용평가, 부담금관리, 국가채무관리, 연기금투자플 운영, 재정통계의 작성, 민간 투자정책 등 관리기능

처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평가 전 과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재정관리국 매트릭스 담당자(부처별 담당제)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한 각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각 사업에 대한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대응,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들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 연구기관(한국조세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업무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그림 II-20]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조직도(2012.1.31.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정부기관별 기구도 자료(<https://org.mois.go.kr/org/external/DopyoMgr.do?method=getOrgDept&gubun=body&szDeptCode=1051000&enc=1&date=20120131>)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8.6.11.

#### 마. 2014년 12월 ~ 2016년 5월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에 맞추어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재정관리국을 개편하여 제도별로 나누어 있던 과(課)를 아래 <표 II-48>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과 같이 분야별 담당체제로 바꾸었다.



아래 <표 II-49>에는 재정관리국 성과관리 관련 업무분장이 과별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제시되어 있다.

<표 II-49> 재정관리국 성과관리 관련 업무분장(2014년 12월 기준)

담당조직	담당업무
재정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운영 · 관리 전반 총괄</li> <li>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총괄</li> <li>재정사업 평가(심층평가, 보조금평가 등) 운영 총괄</li> <li>행정 분야 소관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li> <li>재정집행계획 수립 · 관리</li> <li>예산낭비신고센터 관리 · 운영</li> <li>예산성과금 관리 · 운영</li> </ul>
경제재정성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분야 소관부처 재정사업 평가 및 관리</li> <li>* 성과계획서 · 보고서, 자율평가, PI 보드, 심층 · 보조금 평가</li> <li>기금 평가 및 투자물 제도 운영</li> </ul>
사회재정성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분야 소관부처 재정사업 평가 및 관리</li> <li>* 성과계획서 · 보고서, 자율평가, PI 보드, 심층 · 보조금 평가</li> <li>부담금 평가 및 제도 운영</li> </ul>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12.2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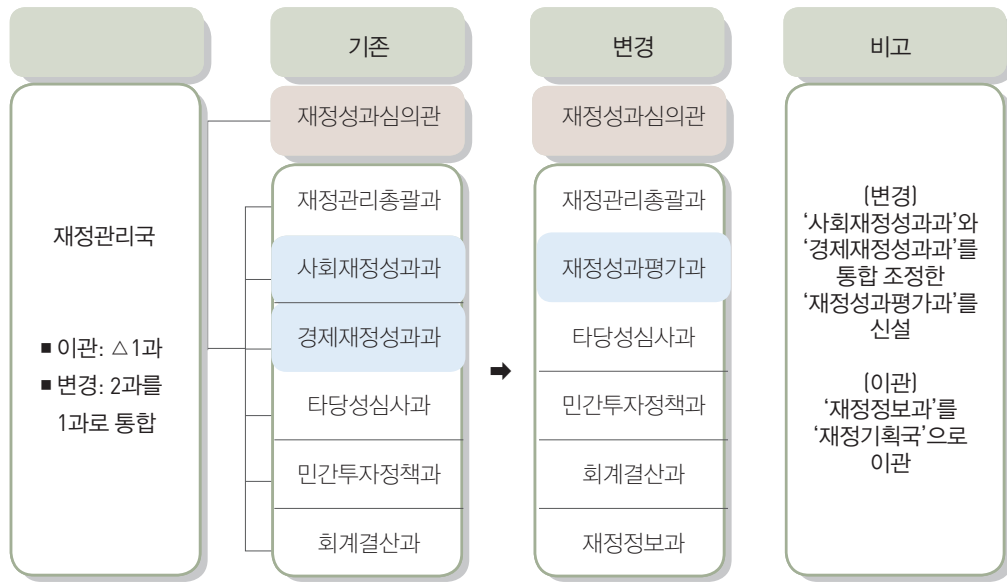
재정관리총괄과에서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자율평가제도, PI보드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관련 총괄 업무와 심층평가 및 보조금평가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행정 분야 소관부처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경제재정성과과에서는 경제 분야 소관부처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자율평가제도, PI보드 및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와 함께 기금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재정성과과는 사회 분야 소관부처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자율평가제도, PI보드 및 심층평가, 보조금 평가와 함께 부담금 평가 및 제도 운영을 담당하였다.

## 바. 2016년 5월 ~ 현재(2018년 6월 기준)

2016년 5월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관련 국(局) 간에 기능을 조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직제를 개정하였다. 인력, 기구의 추가적인 증가 없이 재정기획국 및 재정관리국의 기능을 재조정하였다.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및 재정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중점 수행하기 위해 [그림 II-22]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통합·조정한 재정성과평가과를 신설하여 2018년 6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림 II-22]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직제개편 전·후 비교(2016년 5월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5.31.)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 관련 총괄기능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재정관리총괄과에서 담당해오고 있으며, 재정성과평가과에서는 사회·경제 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별 업무 분장내용은 <표 II-5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50〉 재정관리국 성과관리 관련 업무분장(2018년 6월 기준)

담당조직	담당업무
재정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운영·관리 전반 총괄</li> <li>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총괄</li> <li>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li> <li>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li> <li>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li> <li>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li> <li>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li> <li>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li> <li>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li> <li>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홍보</li> <li>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시행</li> <li>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li> <li>균형발전영향평가 수행 및 관리</li> <li>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li> <li>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홍보</li> <li>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ul>
재정관리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 분야 소관부처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li> <li>핵심사업평가</li> <li>기금운용평가 관리 운영</li> <li>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li> <li>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li> </ul>
재정성과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관리</li> <li>사회·경제 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li> <li>사회·경제 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li> <li>사회·경제 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li> <li>사회·경제 분야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li> <li>사회·경제 분야 재정사업의 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li> <li>「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li> <li>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정 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li> <li>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li> </ul>

출처: 정부 24 정부조직도 및 부서연락처 & 업무 홈페이지 내용(접속일자 2018.6.14.) <https://www.gov.kr/portal/gvrnWrkChrgDpt/1051000?srchTxt=%EC%9E%AC%EC%A0%95%EA%B4%80%EB%A6%AC%EC%B4%9D%EA%B4%84%EA%B3%BC>, <https://www.gov.kr/portal/gvrnWrkChrgDpt/1051000?srchTxt=%EC%9E%AC%EC%A0%95%EC%84%B1%EA%B3%BC%ED%8F%89%EA%B0%80%EA%B3%BC>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PART II.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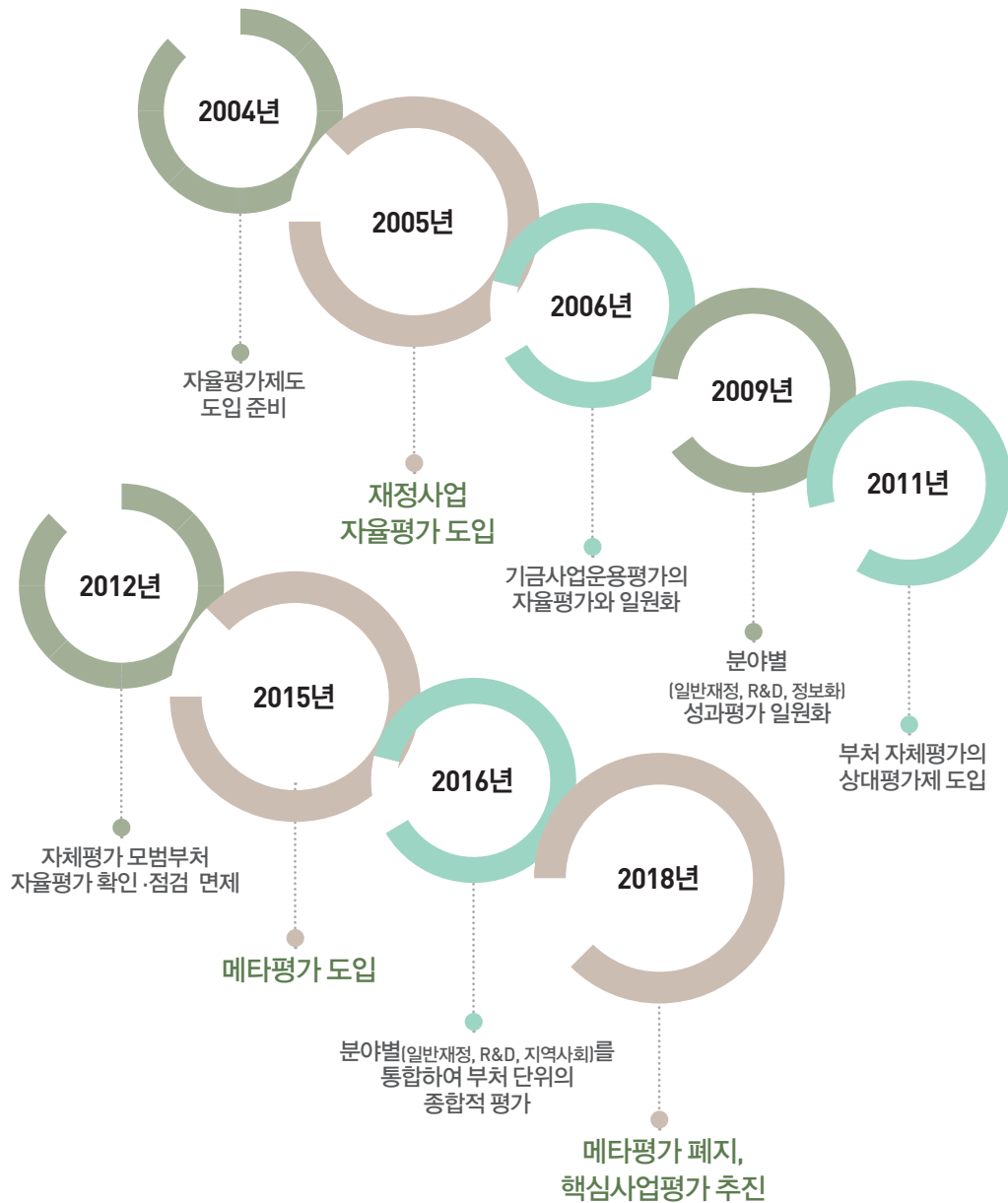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화

1. 2004년 .....	165
2. 2005년 .....	167
3. 2006년 .....	170
4. 2007년 .....	172
5. 2008년 .....	173
6. 2009년 .....	174
7. 2010년 .....	175
8. 2011년 .....	176
9. 2012년 .....	178
10. 2013년 .....	180
11. 2014년 .....	182
12. 2015년 .....	184
13. 2016년 .....	187
14. 2017년 .....	190
15. 2018년 .....	192
참고자료 .....	195



## 제2장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화



2005년부터 시작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연도별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각 연도 별 평가지침 및 관련 보도자료 참고).

〈표 II-51〉 2005~20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현황

연도	추진 내용
2005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각 부처가 매년 전체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체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단위사업들을 가급적 한 해에 평가</li> <li>• (평가지표) 계획·집행·성과 단계의 11개 공통질문+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질문</li> <li>•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등급화 * (2005~2007): 4단계 → (2008~2015): 5단계</li> <li>• (평가절차) 평가지침 사전제시 → 부처 자율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2~3월초, 각 부처 → 재정부) → 확인·점검을 통해 부처 평가점수 수정(3~6월, 재정부)</li> <li>• (평가결과 활용) 사업특성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 실시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성과목표 중 1/3(3년 주기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단위사업</li> <li>• (평가지표) 계획, 관리, 성과·환류 단계의 11개 지표 사용</li> <li>• (평가절차) - 사업 수행부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수행(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등 제출) - 기획재정부: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메타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확인·점검 실시)</li> </ul>
2016 ~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2016년) 평가대상의 50% → (2017년) 100%</li> <li>• (평가절차) 자체평가 → 메타(상위)평가(분야별, 부처별)</li> <li>• (평가지표) 관리, 결과 단계의 지표로 간소화 * (2016년) 4개 지표 → (2017년) 3개 지표</li> <li>• (평가결과 활용)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우수' 및 '미흡' 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 R&amp;D 사업의 경우 「연구성과평가법」상의 상위평가, 지역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종합평가를 메타평가로 지칭</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li> <li>• (평가지표)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지표 설정 *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li> <li>• (평가절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회신</li> <li>• (평가결과 활용)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li> </ul>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4년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기획예산처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구축해 나감.

### 1 자율평가제도 도입 배경과 준비

- 2003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이 많은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중심의 성과관리를 도입·추진하였으나, 예산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집행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부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예산 편성 시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함.
  -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도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직접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04년에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운용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산환류 수단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
  -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자율편성 시 반영
  - 기획예산처는 부처 자율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 미국 PART<sup>72</sup>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사·연구함.

72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는 1993년에 도입된 성과지표 중심의 GPRA 체계로는 예산연계가 곤란하자, 예산처(OMB) 주도로 2002년에 도입된 제도임.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예산처는 그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하였던 제도로 2009년까지 운영되었음.

### 〈참고〉 제도 도입 당시 주요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 추진현황<sup>73</sup>

#### 1. 미국

- GPRA법\*에 따라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를 관리
  - 매년 성과계획서·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 제출
    -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1997년간 시범운영, 1998년부터 매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 PART\*\*방식에 의하여 개별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
  - \*\*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2002년부터 실시

#### 2. 영국

- 부처별로 성과목표·지표관리를 관리(1998)
  - 성과계획서(PSA\*)를 작성하여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과 함께 의회 제출
    - \* PSA(Public Service Agreement)
- Green Book\*\*에 따라 각 부처별 주요 사업평가
  - \*\* Green Book: 주요 사업평가 시 준수하여야 할 재무부의 지침

#### 3. 호주

- 성과주의 예산서\*를 작성(1999)하여 의회 제출
  - \* 예산과목구조를 전략목표·성과목표 단위로 재배열하고, 성과관리
- 4년 주기로 개별 사업평가 실시

#### 4. 캐나다

- 의회의 권고에 따라 성과계획서·보고서를 작성(1996)하여 의회 제출
- 부처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평가를 실시

73 기획예산처(2005),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성과관리 전문과정 교육자료』, p.4

2005년

## 재정사업 자율평가 도입

기획예산처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최초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였음.

### 1 추진 배경

-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국 PART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시행함.
  - 부처 스스로 사업별 자율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자율편성 시 반영
  - 기획예산처는 부처 자율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시행(2006년)으로 재정사업에 부문에 대한 평가수단 필요

### 2 제도의 개요

-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평가
  -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사전 제시  
→ 각 부처 자율 평가 → 기획예산처가 부처의 평가결과 점검
  - 평가항목은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4개 추가질문으로 구성  
\*사업유형(7개):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용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조사·교육 등 기타사업

	〈 15개 공통질문 〉	배점
계획 (3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75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75
	1-3. 다른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3.75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75
성과 계획 (15)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1-6.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5.0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 15개 공통질문 〉	배점
집행 (2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0
성과 (5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0.0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5.0

• 부처는 항목별로 “예/아니오”로 답변, “예”라고 답변 시 근거 제시

\* 단,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항목은 4등급(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으로 나누어 답변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4단계 등급화

등급	효과적	다소 효과적	보통	미흡
점수	85점 이상	84 ~ 70점	69 ~ 50점	50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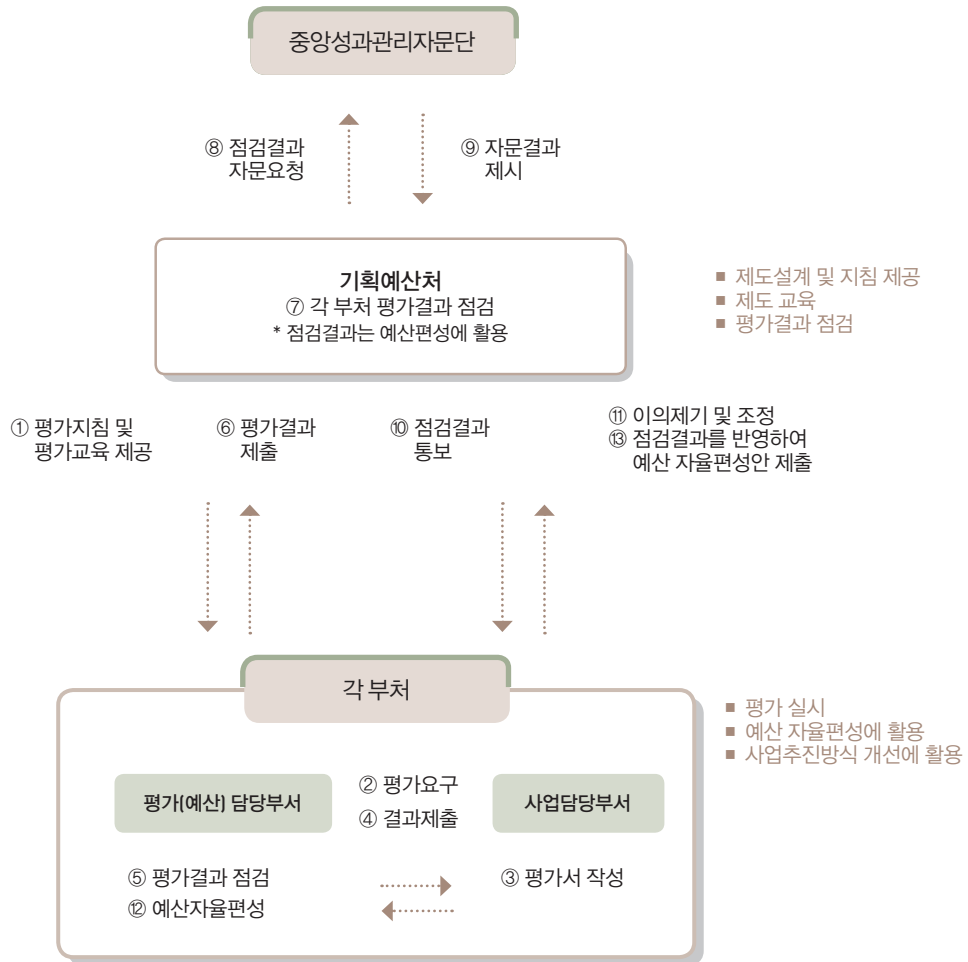
■ 2005년 추진현황

• 40개 소관, 555개 사업(예산 약 35조원 수준)

■ 평가결과 환류

• 10% 세출구조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미흡’ 등급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삭감을 추진

### 3 제도 운영 절차





### 기금사업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

기금사업운영평가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로 일원화하여 중복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의 업무부담을 경감함.

#### 변화 1

#### 기금사업의 평가를 자율평가 방식으로 통합·일원화

- 기존 기금사업의 평가방식을 평가항목\*, 기준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성과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평가 방식으로 통합·일원화하여 평가\*\*
- 이를 통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의 업무부담을 경감
  - \* 평가항목 수: 종전 기금평가 방식 6개(사업내용 적정성,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 노력 등) → 자율평가 16~19개의 지표로 점검
  - \*\* 기금평가의 경우 기금운용평가단(관계전문가 50인으로 구성)을 통해 평가를 수행

#### 변화 2

#### 평가등급 외에 권고사항을 별도로 제시

- 사업별로 2005년과 같이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외에 2006년부터는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별도로 제시·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를 유도
-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7~9월 중 권고사항을 정리·제시

#### 변화 3

#### 재평가 실시

- 2005년에 기평가한 사업이라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 최소한의 성과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에 활용
- 특히 2005년 평가 실시 이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부처의 적극적인 성과 제고 노력 유인을 부여

#### 변화 4 자율평가 시기 조정

- 자율평가를 예산편성 전에 실시함으로써 업무부담 완화 및 평가의 질 향상

	기존(2005년)	→	변경(2006년)
지침 통보	(4월 말)	→	(1월 중순)
부처 자체평가	(5월 말)	→	(2~3월)
기획예산처 확인·점검	(6~8월)	→	(4~6월)
확인·점검결과 확정	(9월 초)	→	(6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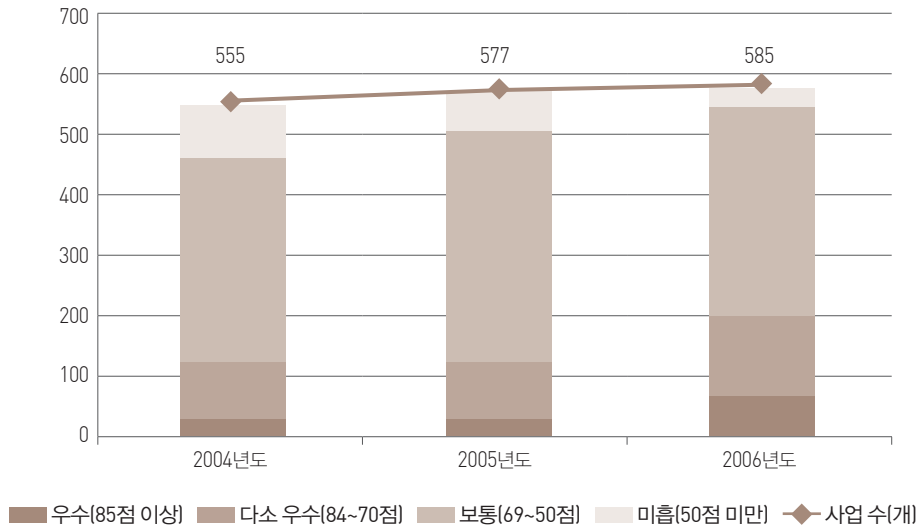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평가결과인 사업의 성과 점수가 향상되며,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정착되는 추세를 보임.

#### 변화 1

#### 사업 성과의 점진적인 개선

-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총점 및 ‘우수’ 등급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수’ 등급 및 ‘다소 우수’ 비중은 전년 대비 13.6%p 증가하여 약 35.1%를 차지한 반면, ‘미흡’ 등급의 비중은 전년 대비 6%p 감소하여 5.3%에 그침.
  - 이는 각 부처가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변화 2

#### 평가결과의 활용도 증가

- 각 부처는 차년도 예산배분에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를 적극 활용
  -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을 감액 요구하는 등 부처의 평가결과 활용이 증가함.

2008년

## 평가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률 개정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분야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일원화하였으며, 평가결과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을 조정함.

## 변화 1

## R&amp;D·정보화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 R&D·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
  - 현행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분야별로 각각의 해당 법에 따라 운영되어 평가의 일관성이 저해되었으며, 제도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
  -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일반재정·R&D·정보화의 성과평가가 동일 시점에 단일 평가주체에게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 변화 2

## 평가등급의 세분화 및 등급 기준 상향 조정

- 예산 배분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등급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조정
  - ‘우수’ 이상에 해당하는 등급의 경우, 현행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등급의 경우, 현행 50점 미만에서 60점 미만으로 상향 조정

2007년도 평가등급		2008년도 평가등급	
4단계 등급	기준	5단계 등급	기준
우수	85점 이상	매우 우수	90점 이상
다소 우수	70-84점	우수	80-89점
보통	50-69점	보통	60-79점
미흡	50점 미만	미흡	50-59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 분야별 성과평가의 일원화

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던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원화되었으며, 평가지표 관련 개선조치가 이뤄짐.

#### 변화 1

#### 일원화된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첫 적용

- 전년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분야별(일반재정, R&D, 정보화) 성과평가가 일원화된 체계로 이뤄지기 시작함.
- 분야별 평가의 지표 및 등급은 상이하게 적용
  - 일반재정사업의 평가지표는 11개의 공통지표와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지표로 구성되며, 5단계 평가 등급을 적용하였음.
  - \* 사업유형(7개):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기타직접수행
  - 정보화사업의 평가지표는 5개의 공통지표로 구성되며, 4단계 평가등급을 적용하였음.

#### 변화 2

#### 평가지표 관련 개선 조치

- ‘재정지출의 필요성’ 및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관련 지표가 삭제되고, ‘계획된 성과의 달성 여부’를 묻는 평가지표의 배점이 상향 조정되는 등 평가지표의 개선이 이뤄짐.
- ‘재정지출의 필요성’ 및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묻는 평가지표는 문항의 변별력 부족 및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삭제
- ‘계획된 성과의 달성 여부’를 묻는 평가지표의 경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배점을 상향 조정

2010년

##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능의 강화

재정건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평가기준을 엄격화하고, 평가지표의 변경 등 개선 조치가 이뤄짐.

### 변화 1

#### 평가기준의 엄격화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
  - 2009년 평가의 경우, 예산의 집행실적을 실적행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R&D사업에 있어서는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고려하는 등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적용
  - 이에 따라 평가의 결과는 다소 감소
    - \* 일반재정 평균 점수(점): 65.9(2008년) → 62.8(2009년)
    - \* 정보화 평균 점수(점): 79.8(2008년) → 65.9(2009년)

### 변화 2

#### 평가지표 관련 개선 조치

- 공통질문을 현행 11개에서 12개로 늘렸으며, 유형별 특성지표는 현행 1~3개에서 1~2개로 줄임.
- 지표의 신설, 통합, 이동 등 평가지표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평가 항목별 주요 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획: '사업목적의 명확성'을 평가하는 지표 신설
  - 관리: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및 '문제점 해결'에 해당하는 2개의 평가지표를 1개로 통합하고, '예산 효율성 제고 실적' 관련 지표를 삭제
  - 성과/환류: '적절한 사업평가의 실시 여부' 질문을 관리 항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질문을 1개 → 3개로 늘림.



### 부처 자체평가 상대평가제 도입

기존의 관대화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자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페널티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짐.

## 변화 1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제를 도입

- 기존 부처의 관대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평가부터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 ‘우수’ 이상의 등급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미흡’ 이하 등급을 전체 사업 중 10% 이상을 할당하도록 함.
    - \* 단, 평가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적용 제외
    - \* 또한 수정 평가를 통한 등급의 개선이 없을 경우 3년 연속 삭감 가능하도록 함.
  - 기존 감점제도\*를 감점의 폭을 2점 → 3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강화.
    - \* 감점제도: 부처 자체평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결과 간 점수 차이가 20점을 넘을 경우 감점을 부여함.

## 변화 2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 방법의 다양화

- 평가결과의 예산 환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담당자 및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으며, 사업 유형 및 미흡 원인별로 페널티 방법의 다양화 시도

사업유형별	‘미흡’ 등급의 원인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업) 기존과 동일하게 ‘미흡’ 등급의 사업에 대해 차년도 사업예산 10% 삭감 원칙 적용</li> <li>• (국정과제정책·의무지출사업) ‘미흡’ 등급의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삭감 대신 사업내 또는 여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사업 관련 운영비를 삭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 원인을 평가단계에 따라 총 4~5개로 유형화하여 페널티 적용 차별화</li> </ul>

### 변화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개편

- 기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사업별 예·결산 정보에 성과정보, 자율평가결과,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
  -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어, 성과와 예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유도

### 변화 4 평가지표 관련 개선 조치

- 사전 검증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평가 배점에 있어서 계획단계의 배점을 축소하는 반면 집행단계의 배점을 상향
  - 계획 단계의 평가 배점은 30 → 20점으로 축소, 집행 단계의 평가 배점은 20 → 30점으로 상향
- 평가지표 수를 12개 → 10개로 축소하고, 평가 결과 산출에 있어서 기존에는 '예/아니오'로만 응답하게 되어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배점 응답방식을 도입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평가지표의 경우 4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
    - \* 4단계 배점 방법: 아니요 / 어느 정도 / 상당한 정도 / 예

평가지표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3-1. 예산 집행 적절성 여부	'예', '아니오'	'예', '상당한 정도', '어느 정도', '아니오'
3-3. 효율성 제고 여부	'예', '아니오'	'예', '어느 정도', '아니오'
4-3. 외부지적사항 등 환류 여부	'예', '아니오'	'예', '어느 정도', '아니오'



### 재정사업 자율평가 내실 다지기

성과지표 가중치 부여, 평가지표수 조정, 확인·면제 제도 도입 등 세부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자율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

#### 변화 1

#### 복수 성과지표 설정으로 포괄적인 성과측정 실시

- 하나의 관리과제가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단일 성과지표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 복수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분점수를 산정함으로써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평가기준 개선

- 지표별 가중치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하고 핵심지표와 일반지표의 가중치가 적정하도록 배분\*

\* 핵심지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최솟값이 일반지표의 최댓값보다 크고 핵심지표 가중치의 합이 60% 이상이 되도록 배분

#### 변화 2

#### 평가지표 수 조정을 통한 평가 실효성 제고

- 일반재정 사업의 유형별 특성지표를 삭제하고 이를 공통지표에 흡수하는 한편 국회 요구 사항을 반영한 2개 정보화 특성지표를 신설\*

\* 평가항목 수: (기존) 10개 공통지표 + 유형별(2-3개) 특성지표 → (개선) 11개 공통지표 + 정보화(2개) 특성지표

- 정보화사업의 운영·유지보수 적정성에 대한 평가지표,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가점지표를 신설함

- 보조사업 준치평가 결과의 자율평가 연계를 위해, '사업목적의 명확성'과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을 함께 평가하던 (1-1) 지표를 분리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추진방식의 효율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1-3) 지표를 추가

### 변화 3 부처 자체평가 내실화 및 평가부담 완화

-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는 모범 부처를 선별, 자율평가 확인·점검을 면제
  - 각 부처의 자율평가실적,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통해 면제기관을 평가대상 기관 수의 50% 수준까지 선정
  
- 전년도 도입된 부처 자체평가 상대평가제도의 적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평가 제외사업 수 기준을 평가대상 사업 수 5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완화



###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대폭 확대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보완, 평가대상 사업 확대, 평가일정 일원화 등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외연을 확장.

#### 변화 1

#### 평가 대상사업의 대폭 확대

-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은 사업, 언론·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업 등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함.
  - 전년 대비 134개 증가한 총 608개 사업(약 65조원 규모)에 대하여 실시
  - \* 평가대상 사업 수 추이(회계연도): (2010년) 482개 → (2011년) 474개 → (2012년) 608개

#### 변화 2

#### 평가지표별 세부기준을 보완

- 사업 모니터링, 문제점 해결 측면을 강화하고, 사업평가결과 효과성, 정보화 등 일부 평가지표 요건을 완화하여 평가 유효성 확보

기존	변경
(3-2) 모니터링 체계·운영 및 문제점 개선(10점)	(3-2) 모니터링 체계·운영(5점)
(3-3)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5점)	(3-3)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10점)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가점 3점)
(4-2) 사업 평가결과 효과성 - 외부평가만 가능, 효과성 입증 필요	(4-2) 사업 평가결과 효과성 - 내부평가도 인정 가능, 효과성 입증 불요

### 변화 3 평가일정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

-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을 분리하여 확인·점검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기존(2005년)		변경(2006년)
자율평가보고서 제출 (각 부처 → 재정부)	(3월 초)	→	(2.24)
기금사업 확인·점검	(3~4월 말)	→	(5월 중순)
예산사업 확인·점검	(5~6월 초)	→	
확인·점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및 공개	(6월 중순)	→	(5월 말)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안정화 도모

평가결과와 활용방안을 보완하고, 가중치 설정기준 변경, 측정기준 보완 등 일부 평가항목을 소폭 개정함으로써 자율평가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대.

#### 변화 1

####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완

- 평가결과와의 예산반영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체계적인 이행실적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환류 실효성 제고

기존	변경
[지침상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와 예산반영 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침상 평가결과 활용] • 사업특성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u>제도개선 권고 실시</u> - 사업특성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u>성과지표 개선,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u>

#### 변화 2

#### '예산집행', '문제점 해결' 관련 평가기준 변경

-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에 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굴 출처별로 해결실적을 구분·평가함으로써 평가지표 적용상 혼란을 방지

기존	변경
(3-1) 예산집행 노력: "예" 판단기준 *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후략)	(3-1) 예산집행 노력: "예" 판단기준 * <u>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 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u> (후략)
(3-3) 사업추진 중 문제점 해결 노력 - 외부기관 지적(국회, 감사원),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해결 실적	(3-3) 사업추진 중 문제점 해결 노력 - <u>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실적에 국한</u> ※ <u>외부기관 지적사항에 의한 문제점 해결 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은 (4-3) 지표로 통합</u>

### 변화 3 복수 성과지표 가중치 부여기준 변경

- 201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가중치 설정방침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복수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 설정기준 변경
  - (기존)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다수인 경우 → (변경) 세부사업 수와 무관하게 복수의 성과지표가 설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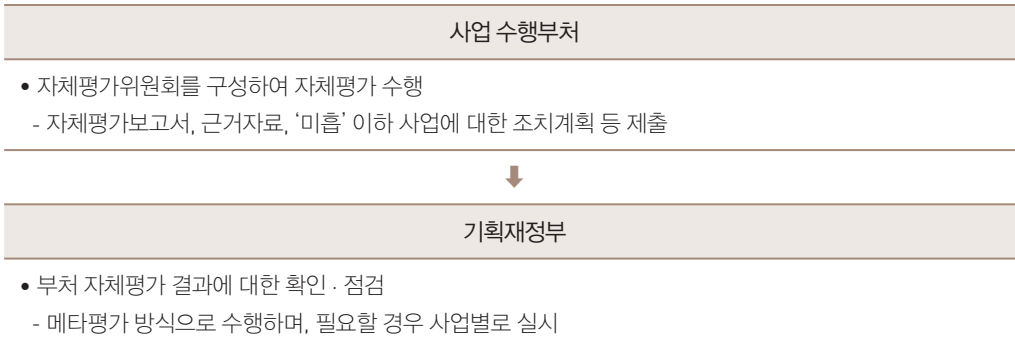
### 메타평가 도입

사업별 전수 확인 점검방식에서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외에도 사업의 특성과 미흡의 원인을 반영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등 환류방식 다양화를 시도.

## 변화 1

### 사업별 전수조사 ⇒ 메타평가로 전환

- 부처의 평가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됨



- 부처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방법
  -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환류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4개 항목 9개 지표)에 대해서만 검토
    - 평가지표별로 판단기준에 따라 부분 점수 부여 가능

#### 〈상대평가 대상부처에 대한 메타평가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과정의 충실도(10)	1-1.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5)
	1-2. 평가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 여부(5)
평가결과의 적정성(50)	2-1.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준수 여부(5)
	2-2.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준수 여부(10)
	2-3. 자체평가의 전략적 평가왜곡 여부 <sup>1)</sup> (15)
	2-4. 상대평가 준수 여부(20)

평가항목	평가지표
환류계획의 적정성(10)	3-1.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10)
환류계획 이행 여부(30)	4-1. 지출구조 조정규모 달성도(20)
	4-2.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이행여부 <sup>2)</sup> (10)
(가점)	성과정보현황판(PI보드) 운영(+5)

주. 1) 의무지출사업 등 현실적으로 예산삭감이 어려운 사업 및 소속기관 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하거나 평가 관대화로 과대평가된 사업이 있는 경우

2)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수정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지표 개선 여부로 평가  
(2016 자율평가부터는 전년도에 제시한 환류방안 이행 여부로 평가)

### 〈상대평가제외 부처에 대한 메타평가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과정의 충실도(10)	1-1.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10)
	1-2. 평가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10)
평가결과의 적정성(50)	2-1.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준수 여부(10)
	2-2.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준수 여부(70)
(가점)	성과정보 현황판(PI보드) 운영(+5)

## 변화 2 평가점수 및 점수순위를 종합 고려한 상대평가

- 자율평가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관대화 평가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강화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 이하 사업 수: 1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점수 및 점수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대평가</li> <li>• '미흡' 이하 사업 수: 15% 이상</li> </ul>

- 평가점수 및 점수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대평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8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등급 배분	5%	15%	65%	10%	5%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등급 간 점수 및 비율을 만족하도록 상대평가를 실시
- 다만 평가대상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는 상대평가 적용에서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등급을 최종 확정

### 변화 3 미흡 사업별 10% 예산 삭감 ⇒ 환류방식의 다양화

- 부처 자체평가에 따른 조치계획 및 확인·점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환류대책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 부여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 사업별 일률적 10% 예산 삭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류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삭감(지출구조조정)</li> <li>- 집행관리 등 성과관리대책</li> <li>-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 대책</li> </ul> </li> <li>•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li> </ul>

- (사업별 평가결과의 환류) 사업의 특성, 미흡의 원인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 이외에도 제도개선 대책 등 환류방식을 다양화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10% 이상 삭감
-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미흡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삭감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시행
  -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 특성에 맞는 환류대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이행점검 실시
- (기관별 평가결과의 환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 부여
  - 우수 부처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차년도 미흡비율 하향 등 인센티브 부여
  - 미흡 부처의 경우는 부처 기본경비 등 삭감, 차년도 미흡비율의 상향 등의 페널티 부과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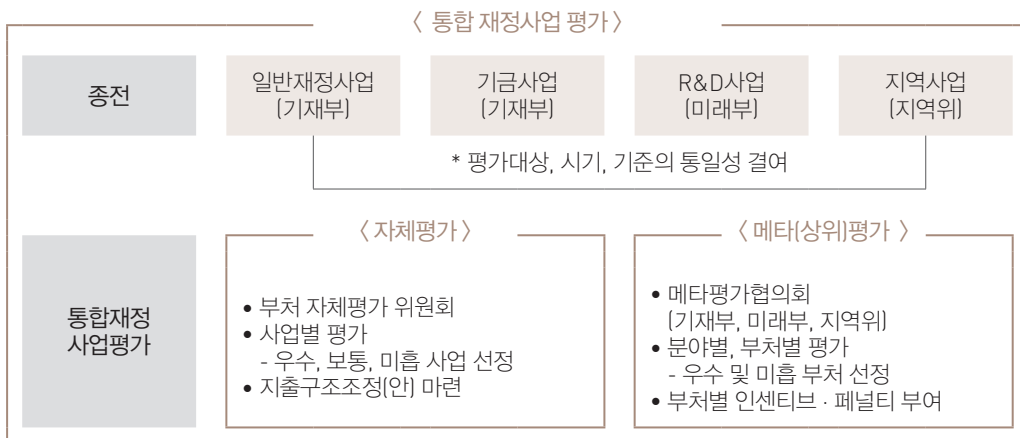
###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분야별(일반재정, R&D, 지역발전)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기관의 자체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평가효율화와 기관들의 평가부담 완화에 기여.

#### 변화 1

#### 칸막이식 분야별 평가 ⇒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성과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 평가대상을 현행 1/3에서 50%로 확대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실시
    - \*재정사업 자율평가[「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사업운영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8조], 지역발전사업평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 일반재정, R&D, 지역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사용하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 지표 사용(중전 11개 지표 → 4개 지표로 대폭 간소화)

단계	평가항목	부처 자체 평가지표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li> <li>• (1-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li> </ul>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li> <li>•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li> </ul>

단계	평가항목	부처 자체 평가지표
가점	(공동)	• 성과지표를 결과지표(R&D의 경우 질적 지표)로 설정한 경우
	(일반재정)	•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지역발전)	• 지역일자리 창출, 연계협력 등 지역발전 성과
가점	(정보화)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연구개발)	•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 여부 •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성과 창출 •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률

## 변화 2 부처 책임성 및 자율성의 강화

- 기존에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기관이 사업별로 재평가를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이 낮았으나,
  - 2016년부터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기관은 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에 한정함으로써,
  - 평가대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평가기관의 재평가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함.
-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안을 마련도록 함.
  -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목표를 평가대상 사업 총예산의 1%로 사전 부과함.

\* 2016년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무지출 제외 시): 총 45조원→세출 구조조정 목표액: 총 4,500억원

### 〈사업별 평가결과 환류〉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재정, R&amp;D, 지역사업의 각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실시</li> <li>• ‘미흡’ 사업별 10% 예산 삭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 * 2016년 평가대상 사업 예산의 1% 수준</li> <li>•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li> </ul>

### 변화 3 메타평가 우수·미흡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마련

- 메타(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부여

#### 〈기관별 평가결과 환류〉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및 미흡 부처에 대한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li> <li>*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li> </ul>



### 전체 사업으로 평가대상을 확대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 1/3씩(3년 주기)로 실시하던 평가를 2017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으로 확대.

#### 변화 1

### 평가대상을 재정사업의 50% ⇒ 전체 사업으로 확대

- 성과관리제도와와의 정합성 제고 및 세출구조조정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전체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확대\*

\* 연도별 평가대상(사업 수 기준): (2005-2015년) 1/3 → (2016년) 50% → (2017년) 100%

-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 (중전)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변경)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 일반재정·정보화, R&D, 지역사업의 평가시기 및 평가지침·평가지표를 통합

#### 변화 2

### ‘예산규모 기준’ ⇒ ‘예산규모 및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평가 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예산 규모 및 사업 수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

- (부처 전체)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기준 ‘예산 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상대평가 실시

\* 다만 정상적인 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전 협의(기재부·미래부·지역위) 가능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상대평가 실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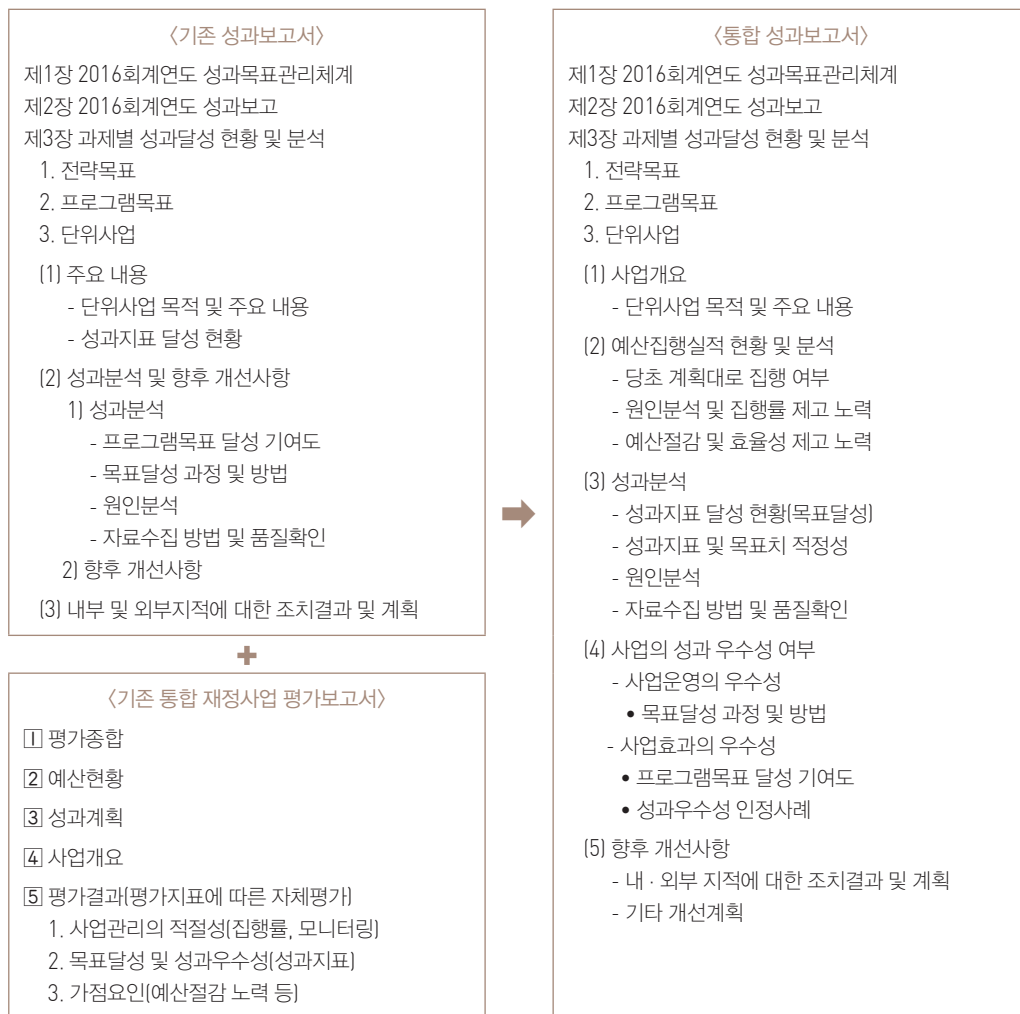
- (분야별) 분야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분야별로(일반재정, R&D, 지역사업) ‘우수’ 또는 ‘미흡’의 상대평가 비율은 50%\* 초과 금지

\* 다만 정상적인 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는 사전 협의(기재부·미래부·지역위) 가능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비율은 최소 10%, '미흡' 비율은 최대 30% 초과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또는 '미흡'의 상대평가 비율은 50% 초과 금지</li> </ul>

### 변화 3 기존 자율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 성과보고서와 자율평가보고서의 중복 해소 및 수행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평가결과가 포함된 통합성과보고서 양식으로 작성





### 기재부 메타평가 폐지, 핵심사업 평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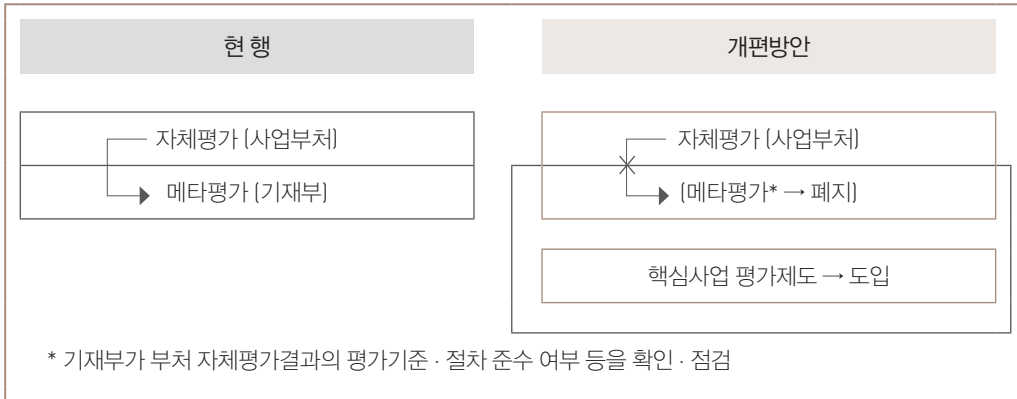
기재부는 메타평가를 폐지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별도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변화 1

### 기재부의 메타평가 폐지,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핵심사업의 성과관리에 역량을 집중
  - \*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법률에 근거하여 수행 중),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던 상위(메타)평가를 폐지한 것임.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자율평가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공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 재정혁신 3개 기조\*에 맞추어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포용성, 생산성, 민주성(2017.9.28, 경제관계장관회의)

#### 〈핵심사업 평가제도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성과중심 재정운용에 관한 사업부처의 인식 제고, 성과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중심 재정운용 기반 마련
  - \* 투입지표(예: 집행률)에서 결과지표(예: 취업률)로 성과지표 지속 개선
- 그러나 재정혁신과의 연계 부족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실효적 제도 정착은 미흡하여 성과관리와 재정혁신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지적

## 〈핵심사업 평가제도 주요 내용〉

## 2. 추진 경과

-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관계 부처 설명회 등을 거쳐 개편 추진
  - \* 전문가 간담회(5.29. 7.4), 관계 부처 사전설명회(8.9),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9.28), 재정관리점검회의(10.27), 유관 단체 및 일반국민 의견 수렴(10.23~11.10)
- 사업부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개편(10.27)
- 재정당국·사업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혁신성장 관련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필요 → 핵심사업 평가제도 도입 추진

## 3. 핵심사업 평가제도 주요 내용

-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 평가 실시
  - (기존) 1,415개(2017년)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사후 확인·점검
  - (개선) 80개 핵심사업을 선별 → 집행과정·결과를 중점관리

## - 핵심사업 평가대상 개괄 -

구분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 개발
평가대상 수 (80개)	15개	18개	10개	23개	14개
예산규모 (23.1조원)	7.8조원	4.2조원	3.5조원	5.8조원	1.8조원
관련부처 (26개)	고용부 등 6개	중기부 등 10개	복지부 등 6개	국방부 등 14개	교육부 등 7개

-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성과목표 체계 개편
  - (기존) 재정사업의 단기(1년) 직접적 산출목표(Output) 중심 평가
  - (개선) 새 정부 정책방향(성장·분배 선순환 등)이 평가되도록 중기(3년) 결과목표(Outcome) 평가도 병행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률·성과목표 100% 달성 추진
  - (기존) 1년에 한 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
  - (개선) 3년 동안 분기별로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 평가
- 지출혁신을 합리적·객관적으로 뒷받침
  - (기존) 개별 사업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에 따른 예산 삭감에 치중
  - (개선) 집행과정 모니터링 → 사업구조재설계, 재정투입 방향 제시
- 핵심사업 평가대상 선정에 국민참여
  - (기존) 재정당국 주도
  - (개선) 평가대상의 1/2 이상을 유관단체·협회와 일반국민이 동시에 선정\*한 사업 중에서 선정
  - \* 한국갤럽, KDI를 통해 유관단체 및 일반국민 여론 조사 실시(10.23~11.10)
    - : 유관단체·협회에서 선정하고,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1/3 이상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업
- 정책관계자가 함께하는 현장조사
  - (기존) 재정당국의 관점에서 문제사업의 예산조정에 중점
  - (개선) 사업부처·정책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성과제고 방안 마련
- 현장의 의견을 평가결과에 적극 고려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기존) 정책담당자의 판단 → (개선) 현장 체감성과를 적극 반영

변화 2

부처 자체평가제도의 변화: 자율적 환류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 절차· 결과 공개

- 각 부처는 자체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자율적 환류계획 수립
  - 지출구조조정 계획은 사업부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
  -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관리개선대책 중심으로 환류계획 수립
  - 부처 자율적 환류계획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반기(필요시 분기)별로 부처 환류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예정
  
- 각 자체평가의 평가기준·절차·결과를 모두 공개
  -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각 부처 전체 단위사업, 평가대상 리스트, 평가기준(평가지표)\*, 대상사업별 평가결과, 환류계획을 공개
  - \*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부, 『2017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 2016.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4.7.5.)
  - \_\_\_\_,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요』, 『성과관리 전문과정 교육자료』, 2005.
  - \_\_\_\_, 보도자료(2005.3.29.)
  - \_\_\_\_, 보도자료(2005.9.16.)
  - \_\_\_\_, 『2006년도 성과목표관리제도 시행지침』, 2006.
  - \_\_\_\_, 보도자료(2006.7.12.)
  - \_\_\_\_, 보도자료(2006.9.13.)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각 연도.
  - \_\_\_\_, 『통합 재정사업 평가 지침』, 각 연도.
  - \_\_\_\_,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각 연도.
  - \_\_\_\_,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각 연도.
  - \_\_\_\_,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자료(내부자료), 각 연도.
  - \_\_\_\_, 보도자료(2007.8.1.)
  - \_\_\_\_,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성과주의예산제도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8.
  - \_\_\_\_, 보도자료(2009.8.3.)
  - \_\_\_\_, 보도자료(2010.7.13.)
  - \_\_\_\_, 보도자료(2010.7.14.)
  - \_\_\_\_, 보도자료(2011.7.27.)
  - \_\_\_\_, 보도자료(2012.6.12.)
  - \_\_\_\_, 보도자료(2013.5.29.)
  - \_\_\_\_, 보도자료(2014.5.27.)
  - \_\_\_\_, 보도자료(2014.12.23.)
  - \_\_\_\_, 보도자료(2015.1.27.)
  - \_\_\_\_, 보도자료(2015.5.22.)
  - \_\_\_\_, 보도자료(2016.4.6.)
  - \_\_\_\_, 보도자료(2016.5.30.)
  - \_\_\_\_, 보도자료(2016.5.31.)
  - \_\_\_\_, 보도자료(2017.5.22.)
  - \_\_\_\_, 보도자료(2017.9.28.)
  - \_\_\_\_, 보도자료(2017.11.24.)
  - \_\_\_\_, 보도자료(2018.1.11.)

- \_\_\_\_, 보도자료(2018.8.6.일자)
- 박노욱 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 \_\_\_\_,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_\_\_\_,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방문규,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가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원종학, 『한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와 최근동향 교육 PPT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오영민 외,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윤기웅·공동성, 『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1(2), 한국행정연구원, 2012
- 윤성채·임준형,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재정사업에 대한 PART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4), 한국정부학회, 2009.
- 윤성채·한상도,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1), 한국정부학회, 2012.
- 정무경,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4), 한국행정연구원, 201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과관리전문과정 교육자료』, 2004.
- \_\_\_\_, 『재정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 2005.
- \_\_\_\_, 『프로그램 예산체계 일치화 관련 내부자료』, 2013.
- \_\_\_\_, 『주요 OECD 국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15.
- \_\_\_\_, 『KIPF재정성과 동향과 이슈』 2016 상반기, 2016.
- 한국행정연구원, 『프로그램 예산제도 활용매뉴얼』, 2006.
- 허경선 외, 『공공기관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웹사이트〉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 접속일자: 2018. 6. 18.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일자: 2018. 6. 14.
-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http://org.mois.go.kr/>), 접속일자: 2018. 6. 11.

# 부록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1.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화 .....	198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록 .....	206
3.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목록 .....	209
4. 주요 언론사 기사 목록 .....	213



부록 1.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항목별 변화

평가 년도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 일정	평가대상	
	자체평가	메타평가		사업 수	범위 및 주기
2005년 (FY04)	기획예산처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 을 사전 제시 → 각 부 처 자율 평가 → 기획 예산처가 부처의 평가 결과 확인 점검  ※평가결과 검토의 객관 성 확보를 위해 기획예 산처 점검 시 성과관리 자문단 자문 병행	X	4~9월	555개 사업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1/3 (3년 주기)
2006년 (FY05)	상동  ※ 성과관리자문단을 당 초 11명에서 20명으 로 확대·개편	X	1~6월	577개 사업	상동
2007년 (FY06)	상동	X	1~6월	585개 사업	상동
2008년 (FY07)	상동	X	1~6월	384개 사업  ※프로그램 예산체계 실 행으로 사업단위를 세 세항에서 단위사업으 로 변경	상동
2009년 (FY08)	상동  ※ 기획재정부가 출범되 어 기획예산처의 역할 이 그대로 기재부로 이관되었으며, 성과관 리자문단의 자문 역할 은 재정사업평가자문 단으로 이관	X	1~6월	454개 사업	상동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환류
	산출방법	등급	
<p>15개 공통 질문(계획/집행/성과)+1-4개 유형별 질문으로 구성 → 배점: 계획(30), 집행(20), 성과(50)</p> <p>※ SOC, 출자-출연, 용자, 민간보조, R&amp;D 등 8개 사업유형별 질문 포함</p>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	우수(85점 이상) / 다소 우수(84-70점) / 보통(69-50점) / 미흡(50점 미만)	<p>10% 세출 구조조정 의 기초자료로 활용</p> <p>※ 부처별 총괄표를 작성하여 통합국정평가 자료로 활용</p>
<p>15개 공통 질문(계획/집행/성과)+1-4개 유형별 질문으로 구성 → 배점: 계획(30), 집행(20), 성과(50)</p> <p>※사업유형이 8개에서 7개로 축소</p>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우수(85점 이상) / 다소 우수(84-70점) / 보통(69-50점) / 미흡(50점 미만)	예산편성(10% 세출 구조조정 의 기초자료로 활용) 및 사업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
<p>15개 공통 질문(계획/집행/성과)+1-3개 유형별 질문 → 배점: 계획(30), 집행(20), 성과(50)</p>	상동	상동	상동
<p>15개 공통 질문(계획/집행/산출 및 결과 활용)+1-3개 유형별 질문 → 배점: 계획(30), 집행(20), 산출 및 결과 활용(50)</p>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89-80점) / 보통(79-60점) / 미흡(59-50점) / 매우 미흡(50점 미만)	상동
<p>11개 공통 질문(계획/관리/성과·환류)+1-3개 유형별 질문 → 배점: 계획(30), 관리(20), 성과·환류(50)</p>	상동	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90점 미만-80점 이상) / 보통(80점 미만-60점 이상) / 미흡(60점 미만-50점 이상) / 매우 미흡(50점 미만)	'우수' 이상 등급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사업은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평가 년도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 일정	평가대상	
	자체평가	메타평가		사업 수	범위 및 주기
2010년 (FY09)	상동	X	1~5월	552개 사업	상동
2011년 (FY10)	상동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1 차 점검결과를 바탕으 로 부처 대면심의를 통 해 최종결과 확정	X	1~6월	482개 사업	상동
2012년 (FY11)	상동  ※자체평가 내실화 및 평 가부담 완화를 위한 확 인 점검 면제제도 실시	X	1~6월	474개 사업	상동
2013년 (FY12)	상동	X	1~5월	597개 사업	상동
2014년 (FY13)	상동  ※사업별 전수 확인점검 실시	X	1~6월	484개 사업	상동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환류
	산출방법	등급	
12개 공통 질문(계획/관리/성과·환류)+1-2개 사업부문·유형별 질문 → 배점: 계획(30), 관리(20), 성과·환류(50)  ※ 사업부문: 일반재정, 정보화(2개) 사업유형: 투자, 시설·장비 구매, 직접수행 등(7개)	상동	상동	상동
10개 공통 질문(계획/관리/성과·환류)+1-2개 사업부문·유형별 질문 → 배점: 계획(20), 관리(30), 성과·환류(50)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공통 평가지표 수를 축소하고 배점을 조정	상동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 도입 → '우수' 이상 20% 이내, '미흡' 이하 10% 이상 (평가 사업 수가 5개 이하인 부처 적용 제외)	상동	'미흡' 이하 등급사업 10% 삭감 원칙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 미흡유형별로 페널티 다양화 → 평가대상을 일반사업과 정책(의무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운영  ※ '매우 우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미흡' 사업은 정책(의무지출)사업일 경우 사업비 대신 사업관련 운영비 삭감하고 그 외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10% 삭감원칙'을 적용하되 원인에 따라 페널티 차별화
11개 공통 질문(계획/관리/성과·환류)+2개 정보화 특성지표 → 배점: 계획(20), 관리(30), 성과·환류(50)	상동  ※부처 자체평가에 상대평가제 적용(적용제외 부처 기준을 평가 사업 수 10개 이하로 조정)	상동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하고 '미흡' 이하 사업은 10% 이상 예산 삭감하되, '보통' 이상 사업이라도 평가지표 특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제도개선 권고 가능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총점방식, 상대평가제도 유지(절대평가 일부 가미)	상동	예산 편성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개선, 사업통합·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 (차기 평가 시 점검내용 반영)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평가 년도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 일정	평가대상	
	자체평가	메타평가		사업 수	범위 및 주기
2015년 (FY14)	<p>기획재정부가 평가 지침 및 대상사업 통보 →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체평가 수행 → 기획재정부가 메타평가 방식으로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 점검</p> <p>※ 사업별 전수 확인 점검 방식에서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 (사업별 확인 점검은 필요시 선별적으로 추진)</p>	<p>부처의 자체평가 내용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을 종합 검토 →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 선정</p> <p>※일반재정, R&amp;D, 지역사업 등 분야별로 분절적 평가 실시</p> <p>※메타평가 가점항목으로 PI보드 운영실적 반영</p>	1-6월	466개 사업	상동
2016년 (FY15)	<p>&lt;통합 재정사업 평가&gt; 기획재정부가 평가 지침 및 대상사업 통보 → 사업 수행부처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자체평가 수행 →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가 조세연 등 성과평가 지원기관과 함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 실시</p>	<p>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등 메타평가 부처와 조세연, 정보화진흥원, KISTEP, KEIT 등 성과평가 지원기관이 메타(상위)평가협의회 구성</p> <p>→ 부처의 자체평가 내용에 대해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을 종합 검토 →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 선정</p>	1-5월	<p>828개 사업</p> <p>※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시행으로 일반재정, 정보화, R&amp;D, 지역사업 모두 포함</p>	<p>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의 50% (1년 주기)</p>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환류
	산출방법	등급	
<p>상동</p> <p>※각 분야별로 별도 평가지표 사용</p>	<p>상동</p> <p>※'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 (평가대상 사업 수 5개 이하 부처는 적용 제외, 6개 이상 부처는 지침의 상대등급 기준표에 따라 사업별 등급 산출)</p> <p>※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평가 강화: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p>	<p>상동</p> <p>※등급별 배분: 5% / 15% / 65% / 10% / 5%</p>	<p>'미흡'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집행대책 등 성과관리 개선대책이나 사업 통폐합 등 제도 개선 대책을 시행</p> <p>※일반재정, R&amp;D, 지역사업의 각 분야별로 지출구조 조정 실시</p> <p>※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미흡 부처에 각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p>
<p>4개 공통 질문(관리/결과)+가점(공통/일반재정/지역발전/정보화/연구개발)+R&amp;D 특성지표</p> <p>→ 배점: 관리(40), 결과(60)</p> <p>※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R&amp;D 특성화 지표를 가미</p>	<p>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규모 기준'으로 사업별로 3단계 등급화</p> <p>※ (부처전체) '예산규모 기준' 상대평가 실시 → '우수' 이상 20% 이하, 미흡 15% 이상 준수 (평가사업 수 8개 미만이거나 사업간 예산규모 편차가 큰 부처는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 사업 수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p> <p>※ (분야별) 분야별로 '우수' 비율 최소 10% '미흡' 비율 최대 30% 초과 금지 → 단 각 분야에서 사업 수 3개 이하인 분야는 분야별 상대평가 적용 제외(부처 전체 차원의 상대평가는 적용)</p>	<p>우수 / 보통 / 미흡</p>	<p>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 사업에 대해 자율적인 지출구조조정안(5~15% 수준) 마련하고, 구조조정이 곤란한 사업인 경우에는 성과관리 개선대책 마련</p> <p>※개별 '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총 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 사업의 차기년도 총예산의 1% 수준을 반드시 준수(의무지출사업 예산 등은 총예산 규모에서 제외) → 구조조정된 예산은 부처의 '우수' 사업,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p> <p>※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미흡 부처에 각각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p>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평가 년도	평가체계 및 절차		평가 일정	평가대상	
	자체평가	메타평가		사업 수	범위 및 주기
2017년 (FY16)	상동	상동	1-5월	1,415개 사업	전체 성과관리대 상 재정사업(1년 주기)
2018년 (FY17)	기획재정부가 평가지 침 통보 → 사업 수행 부처가 자체평가계획 수립하여 자체평가 수 행 → 기획재정부가 기본 오류사항 확인 및 수정	X  (메타평가 폐지, 핵심사업평가 도입)	1-5월	확인 불가	상동

주: 해당 연도 평가지침 및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본문 PART II 의 1. 재정사  
업 자율평가의 연도별 주요 변경사항, 2.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항목별 변경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결과 산출방식		평가결과 환류
	산출방법	등급	
<p>3개 공통 질문(관리/결과) + 가점(일반재정/지역사업/정보화/R&amp;D)+R&amp;D 특성지표 → 배점: 관리(30), 결과(70)</p> <p>※모니터링, 외부지적사항 지표 삭제</p>	<p>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예산규모 및 사업 수 기준'으로 사업별로 3단계 등급화</p> <p>※(부처 전체) '예산규모 및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실시 → '우수' 이상 20% 이하, '미흡' 15% 이상 준수 (평가사업 수 10개 미만이거나 사업간 예산 규모 편차가 큰 부처는 사업 수 기준만 적용, 사업 수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p> <p>※(분야별) 분야별로 '우수' 또는 '미흡' 비율 50% 초과 금지 (세부 적용기준은 별도 공문으로 배포한 각 부처 및 분야별 상대평가 기준표에 따름) → 단 각 분야에서 사업 수 3개 이하인 분야는 분야별 상대평가 적용 제외(부처 전체 차원의 상대평가는 적용)</p>	상동	<p>상동</p> <p>※각 부처의 예산규모 대비 예산절감 실적(지출관련 예산성과급)을 지출구조 조정 규모에 반영</p> <p>※지출삭감 불가능 사업을 삭감하거나 단순이관을 구조조정으로 산입하는 등 전략적 왜곡 발생시 해당 구조조정 금액 불인정</p>
<p>사업부처에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p> <p>※정량지표 중심, 가·감점 비율은 전체 배점의 5% 미만, 외부평가 고려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p> <p>※R&amp;D, 재난, 지역발전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지침에 따라 별도 평가</p>	<p>평가지표별 점수(100점 만점±가감점)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p> <p>※대상사업 수 10개 이상 부처는 분야에 상관없이 전체 사업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우수' 20% 이하, '미흡' 15% 이상 준수)</p> <p>※대상사업 수 10개 미만 부처는 지침의 별도 상대평가 기준 적용</p>	상동	<p>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 성과관리개선대책 등 환류계획 수립</p> <p>※부처의 자율적 환류계획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p>

## 부록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목록

번호	보도일자	제목	링크
1	2005.9.15.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최초로 본격적인 성과평가 실시 -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정착시키는 계기 마련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72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722&amp;menuNo=4010100</a>
2	2006.1.11.	600여개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1월부터 착수 - 2006년 평가시기를 앞당기고, 기업사업평가와 통합실시 등 제도개선 추진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780&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780&amp;menuNo=4010100</a>
3	2006.7.12.	577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작년보다 개선 - “보통” 등급 이상의 비중이 84.3 → 88.7%로 증가 - - 성과 미흡사업 강력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861&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221861&amp;menuNo=4010100</a>
4	2007.8.1.	재정사업 성과 향상 추세 -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22204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222042&amp;menuNo=4010100</a>
5	2008.4.16.	R&D사업 성과평가체계 개편 추진 -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마련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199&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199&amp;menuNo=4010100</a>
6	2008.6.20.	2007년도 일반 재정사업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2009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49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492&amp;menuNo=4010100</a>
7	2008.7.23.	2008년도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 평가결과는 2009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781&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84781&amp;menuNo=4010100</a>
8	2008.9.11.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85605&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85605&amp;menuNo=4010100</a>

번호	보도일자	제목	링크
9	2009.8.3.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2010년 예산편성 시 반영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0394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03942&amp;menuNo=4010100</a>
10	2010.7.14.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 강화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07189&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07189&amp;menuNo=4010100</a>
11	2011.1.18.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0865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08652&amp;menuNo=4010100</a>
12	2011.4.7.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실시계획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09158&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09158&amp;menuNo=4010100</a>
13	2011.7.27.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10107&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10107&amp;menuNo=4010100</a>
14	2012.6.12.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13819&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OLD_4013819&amp;menuNo=4010100</a>
15	2013.1.14.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16136&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16136&amp;menuNo=4010100</a>
16	2013.5.29.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 평가결과는 세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17254&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17254&amp;menuNo=4010100</a>
17	2014.5.27.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결과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0804&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0804&amp;menuNo=4010100</a>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보도일자	제목	링크
18	2015.1.27.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부처 책임성 강화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3381&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3381&amp;menuNo=4010100</a>
19	2015.3.13.	각 부처,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출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3836&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3836&amp;menuNo=4010100</a>
20	2015.5.22.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4674&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OLD_4094674&amp;menuNo=4010100</a>
21	2016.1.22.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 총 4,500억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방안 마련키로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60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602&amp;menuNo=4010100</a>
22	2016.5.30.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03910&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03910&amp;menuNo=4010100</a>
23	2017.5.22.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확정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09173&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09173&amp;menuNo=4010100</a>
24	2017.9.28.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전면 개편 -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전환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0968&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0968&amp;menuNo=4010100</a>
25	2018.1.11.	핵심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재정혁신 뒷받침 - 80대 "핵심사업 평가" 실시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5207&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5207&amp;menuNo=4010100</a>
26	2018.4.6.	2018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계획 대비 7.9조원 초과 집행 - - 추가경정예산 적시 집행을 위해 사전준비 실시 -	<a href="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6692&amp;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16692&amp;menuNo=4010100</a>

## 부록 3.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목록

##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번호	발행연월	보고서 제목	연구자
1	2002.12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제도발전방안 연구	전택승 · 박기백
2	2004.08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
3	2004.12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 전택승 외 6인
4	2005.12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노욱
5	2007.1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욱
6	2008.1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노욱 · 원종학 · 김진 · 박명호
7	2008.12	OECD 성과관리예산제도 비교분석	박노욱
8	2009.12	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노욱 · 원종학
9	2010.08	2009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확인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박노욱
10	2010.11	성과관리와 정부 간 재정: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원종학 · 운영진, 이영범 · 이재원
11	2011.02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센터
12	2012.12	재정사업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박노욱 · 원종학
13	2013.12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PI보드 확립 및 연계방안	박노욱
14	2015.12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박노욱 · 원종학 · 오영민
15	2017.10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오영민
16	2017.10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오영민 · 이광희 · 오윤섭 · 이삼열

##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 (2) 타 기관 연구보고서

번호	발행연월	보고서 제목	연구자	출처
1	2005.05	재정사업 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영향: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2	2006.09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3	2008.07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종합분석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연구원
4	2008.12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 연구: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중심으로	박민정 ·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5	2009.12	재정사업 자율평가 현황과 정책과제	박홍엽	국회예산정책처
6	2012.08	현행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 담당자 인식 조사	최성락	국회예산정책처
7	2012.11	재정사업평가결과가 행정부 예산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무경	국회예산정책처
8	2013.05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
9	2016.06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과 성과관리에서의 자율성 확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 (3) 국내 학술논문

번호	발행연월	논문 제목	연구자	출처
1	2006.12	2006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결과분석	방문규 · 윤기웅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	2008.2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2006년도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공동성 · 방문규 · 윤기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3	2008.7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4	2009.11	지방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전북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강인재	『한국지방행정정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	2009.1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 재정사업에 대한 PART 평가를 중심으로	윤성채 · 임준형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번호	발행연월	논문 제목	연구자	출처
6	2010.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부처별 적합성 분석: 성과측정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김영록	『행정논총』 제48권 제3호
7	2010.12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	유금록	『한국자치행정학보』 24권 2호
8	2010.12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분석: 자체평가와 상위평가(기재부 확인 / 점검)의 차이점 분석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학술발표논문집
9	2011.4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유금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1호
10	2011.12	우리나라 행정부와 국회의 성과정보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무경	『한국행정연구』 제20권제4호
11	2011.12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집행과 성과: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배인명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2	2012.3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윤성채 · 한상도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1호
13	2012.6	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14	2012.6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및 제도적 고찰: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공동성	『한국정책학회보』 제21권 제2호
15	2013.9	사업특성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하연섭	『한국행정연구』 제22권 제3호
16	2013.1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김영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3호
17	2013.12	사업특성이 성과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황소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8	2014.2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국제이민협력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전주상 · 조문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4호
19	2014.4	사업의 특성이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유미 · 하연섭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0호
20	2014.6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10년의 운영현황, 성과 그리고 발전방향	오영민 · 박노옥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4권 1호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발행연월	논문 제목	연구자	출처
21	2014.12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박기묵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	2015.3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 평가: 환경부 사례를 중심으로	이원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9권제1호
23	2015.6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 제3주기(2011 ~ 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한국정부학회 2015년 하계학술 발표논문집』
24	2015.9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방향에 대한 소고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권 7호
25	2015.9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 공동성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26	2015.7	정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활용과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임유미 · 하연섭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2호
27	2015.12	조직의 자원이 재정사업의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수영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28	2016.2	정책집행주체별 정책집행 부진 원인 분석: 2005~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윤기웅 · 김병규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29	2016.6	정책특성이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장혜윤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2호
30	2016.6	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최현묵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제2호
31	2016.1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 · 최준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32	2016.12	지방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다경 · 황소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권5호
33	2017.3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박주형 · 김병규 · 윤기웅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 부록 4. 주요 언론사 기사 목록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1	2005.3.29	부처 재정사업 30% 자체 평가 - 내년부터 결과 나쁜 면 재량적 지출 10% 삭감	문화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1&amp;aid=000010187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1&amp;aid=0000101873</a>
2	2005.3.29	각 부처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95697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0956977</a>
3	2005.3.29	부처예산 10% 삭감 의무화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16756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167567</a>
4	2005.3.29	부처별 예산 10% 삭감, 핵심사업 투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16796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167969</a>
5	2005.3.29	각부처 예산 10% 이상 삭감	세계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008862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0088626</a>
6	2005.3.29	부처 재정사업 30% 자체 평가	문화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1&amp;aid=000010187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1&amp;aid=0000101873</a>
7	2005.3.30	정부 사업 '양성평등 영향' 평가	한겨레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8&amp;aid=000010506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8&amp;aid=0000105063</a>
8	2005.9.12	성과 부진한 재정사업은 축소·취소	SBS	<a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03998&amp;plink=OLD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03998&amp;plink=OLDURL</a>
9	2005.9.12	성과없는 재정사업 줄이거나 전면 취소	서울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009866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0098660</a>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10	2005.9.12	정부사업 성과없을 땐 과감히 축소·취소한다	세계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01188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0118841</a>
11	2005.9.13	기획처 “성과없는 재정사업 축소·중단”	경향신문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509121801111&amp;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509121801111&amp;code=920100</a>
12	2005.9.15	주요 재정사업 15% 평가체계 미비	SBS	<a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05329&amp;plink=OLD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005329&amp;plink=OLDURL</a>
13	2005.9.15	재정사업 16%는 낙제점… 목표, 성과지표 없이 주먹구구식	한국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3503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35036</a>
14	2005.9.15	재정사업 15% 성과목표·평가기준 부실	세계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22&amp;aid=000011953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22&amp;aid=0000119534</a>
15	2005.9.15	재정사업 15.7% ‘미흡’ 평가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19226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192265</a>
16	2006.1.10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기획처 ‘권고’ 붙인다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19318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193182</a>
17	2006.1.10	600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착수	한국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6386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63863</a>
18	2006.1.10	기획처, 600여개 재정사업 자율평가 1월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20818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14&amp;aid=0000208182</a>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19	2006.4.9	성과평가 안되는 사업은 예산증액 없다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26657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266577</a>
20	2006.5.22	외평기금도 성과평가·재정 사업평가 전부처로	한국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9675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5&amp;aid=0000896752</a>
21	2006.7.11	정부 재정사업 성과수준 평균 44점 불과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01&amp;aid=000135381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001&amp;oid=001&amp;aid=0001353810</a>
22	2006.7.11	성과나쁜 재정사업 예산 깎는다	매일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9&amp;aid=000051634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9&amp;aid=0000516347</a>
23	2006.7.11	정부 재정사업 성적 “초라 하네”... ‘우수’ 등급 2개 불과	세계일보	<a href="http://v.media.daum.net/v/20060711212114574">http://v.media.daum.net/v/20060711212114574</a>
24	2006.7.11	성과나쁜 65개 재정사업 내년 예산 10%씩 깎기로	매일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9&amp;aid=000051642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9&amp;aid=0000516426</a>
25	2006.7.12	65개 재정사업 예산 10% 이상 감축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06071192571?nv=o">http://news.hankyung.com/article/2006071192571?nv=o</a>
26	2007.4.9	“재정 성과관리제도 부처평가 수단으로 변질”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0704091432255879?t=y">http://www.fnnews.com/news/200704091432255879?t=y</a>
27	2007.7.31	정부 재정사업 5.3% 성과 ‘미흡’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71293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1712937</a>
28	2007.7.31	재정사업 10개중 6개 ‘부진’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73125891?nv=o">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73125891?nv=o</a>
29	2007.8.6	재경부 재정성과 60점대 불과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24968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249687</a>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30	2007.8.7	재정사업 평가 민망한 '자화자찬'	동아일보	<a href="http://news.donga.com/3/all/20070807/8475254/1">http://news.donga.com/3/all/20070807/8475254/1</a>
31	2007.8.22	부처별 업무 '자체평가' 하나하나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25092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6&amp;aid=0000250927</a>
32	2008.6.20	일반 재정사업 24%가 'F학점' ... '미흡' 이하 1년새 7배 ↑	경향신문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6201822425&amp;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6201822425&amp;code=920100</a>
33	2008.6.20	盧정부 작년 재정사업 24% '미흡'	문화일보	<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6200103022407200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62001030224072004</a>
34	2009.8.2	정부 재정사업 20% '미흡' 평가	경향신문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34215&amp;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908021734215&amp;code=920100</a>
35	2009.12.13	정부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풀리기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302261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3022619</a>
36	2009.12.13	정부 부처 재정사업 자체평가 '뺑튀기'	세계일보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091213000740">http://www.segye.com/newsView/20091213000740</a>
37	2010.7.13	'미흡 판정' 재정사업 105개 내년 예산 10% 이상 깎기로	한겨레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026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0264.html</a>
38	2010.8.24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사업 자율평가시행률 27.9% 불과"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008241644534330?t=y">http://www.fnnews.com/news/201008241644534330?t=y</a>
39	2010.10.6	정부 "이달 내 재정사업 평가 개선안 마련"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469001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4690018</a>
40	2011.1.18	정부 재정사업 상대평가제 도입 미흡땀 사업관련 운영비도 삭감	문화일보	<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801031824033002">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11801031824033002</a>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41	2011.4.7	재정사업 자율평가..5.4%가 '미흡'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499932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4999328</a>
42	2011.4.7	정부 재정사업 488개 중 5.4% '60점 미만' 평가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104071313377239?t=y">http://www.fnnews.com/news/201104071313377239?t=y</a>
43	2012.1.20	정보화사업, 유지보수도 재정성과 측정한다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547750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5477507</a>
44	2012.1.20	재정사업 평가 공정거래 신설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201201126020896?t=y">http://www.fnnews.com/news/201201201126020896?t=y</a>
45	2012.6.12	실적 저조한 부처별 재정사업 예산 10% 줄인다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564499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5644995</a>
46	2012.6.12	지난해 재정사업 23.6% '미흡' 평가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206121005457227?t=y">http://www.fnnews.com/news/201206121005457227?t=y</a>
47	2012.6.12	재정사업 5개 중 1개 실적 '미흡'	서울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24549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245491</a>
48	2013.1.13	재정사업 자율평가대상 전년 대비 28% ↑ ... 역대 최고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60364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0&amp;oid=001&amp;aid=0006036403</a>
49	2013.5.29	재정사업 4개중 1개꼴 실적 '미흡'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305291429126076?t=y">http://www.fnnews.com/news/201305291429126076?t=y</a>
50	2013.5.29	정부 재정사업 4개 중 1개 '낙제점'	경향신문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12145&amp;code=920100">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212145&amp;code=920100</a>
51	2013.5.29	재정사업 자율평가 ... 24%가 실적 '미흡'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628547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6285478</a>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52	2013.10.11	국토부,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악 '오명'	세계일보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258393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22&amp;aid=0002583939</a>
53	2014.5.27	정부 재정사업 5개중 1개는 '미흡' 판정	연합뉴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6928856">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01&amp;aid=0006928856</a>
54	2015.1.27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폭 개편 ... 각 부처 책임성 강화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27000790&amp;md=20150127135454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27000790&amp;md=20150127135454_BL</a>
55	2015.1.27	재정사업 '미흡' 평가 비중 15%로 상향 ... 사업통합합도 가능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7/0200000000AKR201501271070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27/0200000000AKR20150127107000002.HTML?input=1195m</a>
56	2015.1.27	재정사업 '미흡' 평가 비중 15%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501271800166433">http://www.fnnews.com/news/201501271800166433</a>
57	2015.3.13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평가기준 모두 준수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0357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3/0200000000AKR20150313035700002.HTML?input=1195m</a>
58	2015.3.13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전 부처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준수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3000166&amp;md=20150313095830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3000166&amp;md=20150313095830_BL</a>
59	2015.3.13	올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	서울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65271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652719</a>
60	2015.5.22	재정사업 21.7% '미흡' ... 지출 2천800억원 구조조정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2/0200000000AKR201505220383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2/0200000000AKR20150522038300002.HTML?input=1195m</a>
61	2015.5.22	기재부, 재정사업 21.7% '미흡', 2,800억원 지출축소 등 구조조정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2000072&amp;md=20150522144311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2000072&amp;md=20150522144311_BL</a>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62	2015.5.22	국가 재정사업 5개 중 1개 '낙제점' ... 정부, 2,800억 원 규모 구조조정	서울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68705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687057</a>
63	2015.5.22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1.7%가 미흡 이하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505221001573420">http://www.fnnews.com/news/201505221001573420</a>
64	2015.5.22	돈은 돈대로 썼는데 ... 정부 재정사업 5개중 1개는 '미흡'	매일경제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amp;no=492327">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amp;no=492327</a>
65	2015.5.22	재정사업 5개중 1개 '미흡' ... 2,800억원 지출 삭감 예고	매일경제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amp;no=49307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amp;no=493074</a>
66	2015.5.22	국가 재정사업 5개중 1개 '낙제점'	세계일보	<a href="http://www.segye.com/newsView/20150522003417">http://www.segye.com/newsView/20150522003417</a>
67	2016.1.22	정부, 통합재정사업평가로 씬셈이 4,500억원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601220927371657">http://www.fnnews.com/news/201601220927371657</a>
68	2016.1.22	재정사업 구조조정 ... 세출 4,500억원 줄인다	문화일보	<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201071403015001">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2201071403015001</a>
69	2016.1.22	재정사업 통합 평가 올 세출 4,500억원 절감	서울경제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791847">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1&amp;oid=011&amp;aid=0002791847</a>
70	2016.12.28	정부, 내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성과평가 실시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612281728379989">http://www.fnnews.com/news/201612281728379989</a>
71	2017.5.22	재정사업 17% '미흡' 평가 ... 1조 2천억원 지출 조정	YTN	<a href="http://www.ytn.co.kr/_ln/0102_201705221507288911">http://www.ytn.co.kr/_ln/0102_201705221507288911</a>
72	2017.5.22	재정사업 17% '미흡' 평가 ... 253개사업 1조2천억원 지출구조조정	KBS	<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4655&amp;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4655&amp;ref=A</a>
73	2017.5.22	'미흡' 평가받은 1조2,000억원 규모 정부 재정사업에 메스댄다	파이낸셜뉴스	<a href="http://www.fnnews.com/news/201705220901112902">http://www.fnnews.com/news/201705220901112902</a>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5-2018

번호	보도일자	제목	기관	링크
74	2017.5.22	정부 재정사업 17% '미흡', 1.2조원 구조조정 ... 기재부,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확정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200024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22000244</a>
75	2017.5.23	성과 미흡한 MB·박근혜 정부 사업들 '칼바람'	경향신문	<a href="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31720001&amp;code=920501">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31720001&amp;code=920501</a>
76	2017.9.28	재정사업성과, 부처 자율평가 강화한다 ... 기재부 평가는 폐지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1602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8/0200000000AKR20170928160200002.HTML?input=1195m</a>
77	2017.9.28	기재부, 재정사업성과 평가 폐지 ... 부처 자율평가 강화	헤럴드경제	<a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8000870">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28000870</a>
78	2017.12.8	재정사업 현장조사에 국민 참여 ... 전문성 논란	한국경제	<a href="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6951">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6951</a>
79	2018.1.11	일자리 등 80대 핵심사업 집행과정·결과 중점관리	문화일보	<a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1101072003020001">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1101072003020001</a>
80	2018.1.11	정부, 일자리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 집중관리 ... 평가에 국민참여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588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58800002.HTML?input=1195m</a>
81	2018.3.6	기재부, 아태재정협력체서 핵심사업 평가제도 등 소개	연합뉴스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065000002.HTML?input=1195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6/0200000000AKR20180306065000002.HTML?input=1195m</a>



# 재정사업 자율평가

2 0 0 5 - 2 0 1 8

---

2018년 12월 23일 인쇄

2018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http://www.kipf.re.kr>

ISBN 978-89-8191-945-0

편집·인쇄: 현대아트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